

인권  
주경

# 장기수 석방 - 그 역사적 의미

김 의 수 (전북대 철학과 교수)

지난 달 25일 초장기수 19명중 17명이 석방됐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 중 중요한 한 부분이 해소되었다. 한국에서 비전향 사상범은 결과적으로 종신형을 받아 온 셈인데, 이번 조치로 그 비인도적 관행이 종식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기수 석방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일등과 최고, 그리고 장기수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너무 일등과 최고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걸핏하면 세계 최고, 세계 최소를 들먹인다. 선부르게 선진국 진입을 노래하고, 최첨단을 자랑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계 팔찌인 분야가 너무 많다. 자동차 사고율, 음주량, 성폭력 등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등에서 우리는 일등급을 유지해왔다. 전근대적인 재벌 체제의 유지, 전근대적인 정치 풍토, 전근대적인 부패구조 등이 우리의 현실이다. 장기수 문제도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극단적인 인권 침해 사례였다. 이 문제는 오래 오래 전에 해결했어야 하는 인권 문제였다.

장기수, 민족의 명예 그 자체

비극이 주는 감회는 무겁고도 깊다. 석방된 장기수들이 자신과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이것은 민족의 비극이고, 우리는 그 비극의 희생자이며 주인공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숙연해지는 마음 감당하기가 어렵다. 말이 30년이고 41년이지, 그 시간을 우리는 느낄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다. '인간 승리'라는 표현은 너무 가볍다. 그 분들은 그야말로 비극 그 자체이며, 민족의 명예 그 자체이다.

시간이란 상대적이다. 즐겁고 재미있게 보낼 때는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지루하고 힘들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 아마도 장기수들에게 시간은 누구

##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가능한 한 급진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좋다.

에게서 보다는 천천히 지나갔을 것이다. 그런데도 몇 개월이나 몇 년이 아니고, 10년·20년 그리고 40년씩이나 형을 살았다는 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고의 세월임에 틀림없다.

승환, 인도주의 원칙에 충실하자

이 엄숙한 사실 앞에서 이해타산을 내세우며 알기알부하는 언론들과 보수 논객들의 태도는 안스럽다. 햇볕정책에 흡집을 내기에 급급한 그들이 장기수 복송 문제와 관련하여 또 다시 상호주의 원칙을 들먹인다. 인도주의 원칙 자체에 충실하면 그것이 바로 햇볕의 힘을 발휘하는 것인데, 도대체 언제까지나 맞교환만을 요구할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후 1년 동안 수행한 정책 중에서 국내외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대북정책이다. 수구세력들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 된 것인지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인권문제에 급진적 태도 가져야

이번 사면 복권은 물론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이었다. 일부 장기수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외에도 수백 명의 양심수들이 여전히 형을 받고 있

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더 이상 늦기 전에 기본적인 인권문제의 해결과 개혁정책의 실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수구세력과 보수세력이 시간만 기다리며 기회를 노리고 있고, 정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가능한 한 급진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좋다. 이 문제에서만은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해도 좋다. 인권 정책은 세계인들의 지지와 호응이 따른다. 국내의 소수 수구세력들이 거는 판지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개혁을 진행시키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나, 몇 가지 원칙적인 부문에서는 과감하고 당당하게 개혁을 단행했어야 한다. 인권 문제는 그 중 첫 번째 분야이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세계 인권 기구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는 처지이다. 정부는 하루 속히 그런 문제부터 말끔히 해결해야 한다. 굳이 8·15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모든 양심수들을 사면 복권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장기수 시대 종막을...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배운다.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인권의 내용에는 사상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분단의 구조 아래에서 이 기본적인 자유를 철저히 봉쇄하고 왜곡해 왔다. 이 왜곡되고 경직된 사상 풍토에 안주하거나 그것을 끝까지 활용하려는 사 람들은 시대를 거스르려는 수구세력들이다. 그들은 합리적인 시민정신에 의해서만 무력화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분단 극복을 회고하고 있다. 장기수 시대의 종막과 함께 우리는 한층 새로운 인권 의식과 통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겠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38 호

1999년 3월 16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민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전.나.독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 '참을수없는' 노동탄압 노동사무소·기아특수강 유착 '문서위조' 의혹

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과 상여금에 대한 확인서를 떼려 간 노동자들이 이를 발급받기는커녕 회사측과 유착해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노동사무소 측으로부터 번번이 골탕을 먹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 과정에서 노동사무소가 회사측과 모의해 가짜 '단체협약합의서'를 만들어 체불임금과 상여금을 떼어먹으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내놓고 노동사무소에 대한 특별감사와 관련 직원을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 김상배씨 등 군산 기아특수강(대표 전전기) 정리해고노동자 13명은 지난 97년 8월부터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98년 9월까지 임금과 상여금 1억 3천여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밀려있다는 확인서를 받으려고 노동사무소를 찾아가다.

그러나 노동사무소측은 회사측으로부터 임금관련 서류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한 확인서를 내주지 않고 버티다 회사측을 만나 받아온 '단체협약 합의서' (98.1.19) 복사본을 6일 내보이면서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체불임금 반납을 합의했으므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98년초 체불임금 관련 민사소송 때 회사측이 법원에 낸 증거자료인 '노사협의회의록'을 내보이며 '단체협약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 위조문서라고 주장하자 당황한 직원들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이 문서를 근거로 작성한 '임금체불반납확인' 공문을 찢어 휴지통에 내버렸다. 합의서 원본은 다음날 회사로부터 노동사무소

측에 전달됐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 문서에 대해서도 '98년 1월 19일 날짜의 문서인데도 인주가 다른 종이에 그대로 묻어나왔다'며 "근로감독관들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사이 회사측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문건을 새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산노동사무소측은 노동자들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한 이 문서들을 보관

하다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측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문서조작·공모 의혹을 부추겼다.

한편 해고노동자들과 민주노총전북본부 관계자, 군산지역 투쟁사업장 연대회의 등에 속해있는 30여명은 15일 오후부터 노동사무소장실을 점거하고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 노동사무소장 등 책임자 3명 체벌 △ 노동사무소에 찾아간 노동자 조합원 장성민씨에 대한 경찰폭력 손해배상과 책임자 처벌 △ 군산지역 5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특별감사 실시 등 5개 요구사항을 노동사무소측에 건네는 한편, 노동부장관과 경찰청장 면담을 이번 주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 알맹이 놓친 '인권보장' - 실효 있을까 의문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용백)이 지난 2일 산하에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운영 뜻을 밝힌 데 이어 12일 민간인을 포함한 9명의 <인권보장위원>을 위촉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실효성있는 위원회가 될지 의심스럽다는 회의가 나오고 있다.

12일 전북경찰청이 위촉한 위원들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4명이 현직 경찰관이고 나머지 민간인 6명 가운데서도 2명은 경찰행정학과 치안문제를 전공한 교수들이어서 위원회가 '경찰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설립취지에 부응할지 의문이다. 전북경찰청은 또 여성단체 대표 가운데 1명을 민간 위원에 위촉했다. 그러나 이 단체도 소외계층 여성보다는 주로 직능별 이익단체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단체여서 위원 구성의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위원 위촉 절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북경찰청은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정작 전북지역의 주요 인권·시민단체들로부터 어떠한 자문이나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편 위원회의 유일한 권한, 즉 '서장에게 시정조치 및 징계위 회부 권고권'조차 전북경찰청의 포부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2일 밝힌 <인권보장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르면 위원회는 △ 지방청장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때 △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할 때에만 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초기단계여서 미숙한 점이 많을 것으로 안다"며 "<인권보장위원회>의 구체적인 시행지침 작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개선책 논의 "비판은 부족"

### 전주시특위 활동 결산 공청회

지난 1월 11일부터 두 달에 걸쳐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했던 전주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재천·시특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지난 11일 전주시의회 중강당에서 열었다.

시특위는 공청회에서 부랑인 및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세 파트로 나눠 조사결과를 간략히 발표하고 이어서 시설과 관계공무원 및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각 시설관계자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와 사회복지학과 학생 등이 참석해 시특위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방청객들은 주로 문제시설에 대한 대응 등 시특위의 앞으로의 대응책과 활동방향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이재천의원(특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모색중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시의회 차원에서 가칭 '사회복지시설 운영 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설 운영실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청객들은 특위활동의 결산 발표라 할 수 있는 이번 공청회에서 각 시설별 구체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것과 시설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미흡했던 점을 아쉬워했다.



#### <새 책 소개>

## '98고용실업 정책자료집

-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정책위원회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업대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온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윤천영 교수)에서 98년 한 해 동안 활동내용을 모은 <98고용실업정책자료집>을 냈다.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지역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전북지역의 실업의 구조와 현황에 대해 분석했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실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안인 '실업자생활지원조례제정' 운동을 전개했으며, 지방정부의 유일한 실업대책사업인 '공공근로'에 대한 분석작업을 가졌다.

자료집은 이를 모아 놓은 것이다. 전북지역의 실업실태와 대책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본부의 98년의 활동과 99년 활동상도 함께 엿볼 수 있다.

## 전주교사제단 미군기지 안 시위

- 한미 행협 개정 외치면서 기지 안에서 집회

전북지역 사제들이 군산미군기지 안에서 지난해에 이어 한미행협 개정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전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대표 김진화 신부) 소속 신부 18명은 1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군산미군기지 안에서 "한미행협 개정하라"는 내용의 영문 현수막을 든 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사령관에게 전달한 항의서한에서 사제들은 "한미 행협 정이라는 무기로 저질러지고 있는 미군들의 행위는 미국의 한국주둔 목적이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며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갈구하는 우리 사제는 이러한 반평화적이고 반인권적인 한미행협을 완전히 개정할 것"을 제차 촉구했다.

<평화와인권>은 독자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인권운동을 더 잘 하도록 도와주시시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평화와인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와인권은 이를 통해 국내와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사와 동정]

- 민족지도자 고 계훈제 선생 민주사회장
  - 발 인 : 18일 오전8시 서울대병원영안실
  - 영결식 : 오전10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제1회 실업자 학교
  - "절망의 바다에서 다시 시작한다"
  - 때 : 3월 22(월) 오후 2시(월수금 총5회)
  - 곳 : 전주 실업자취업지원센터(232-9191)

## "민간공동조사단 왜 안하나"

새만금 공대위, 공조단 구성 촉구 시민대행진 열어

유종근 도지사가 약속한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민간공동조사단 구성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회의(공대위)'는 지난 13일 전주코아백화점 앞에서 100여명의 사회단체 회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재검토와 민간공동조사단 즉각 구성을 위한 시민 대행진'을 열었다.

이번으로 일곱 번째를 맞는 이날 집회에서 최형재(공대위 집행위원장)씨는 "5년 동안 우리 시민단체들은 새만금 문제를 가지고 집값에 전라북도에 요구해왔지만 최근의 유지사의 이중적 태도를 보면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촉구할 필요를 느꼈다"면서 "유지사는 하루빨리 약속한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여기에 민·관 동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민 대행진 의도를 설명했다.

공대위 공동대표인 이방식(전주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기 보다는 환경의 시대"라고 말하며 "새만금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찬조연설을 통해 최종수신부는 "엄격주의에서 출발하였던 새만금사업은 아마 경부고속철도나 시화호처럼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 대행진은 코아백화점 앞에서 전라북도 도청까지 인도를 따라 참여단체들이 제작한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전주시민회 대표 이광철씨는 "일곱 차례 캠페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요구했던 민간공동조사단 구성과 동수 참여에 대하여 앞으로는 전 도민의 힘을 모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하여 나갈 것"이라며 도청앞 집회를 마무리했다.

### 철새조망대에 위락시설?

군산시민, 금강호 위락시설 반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와 (사)한국조류보호협회군산지회는 지난 12일 오후 1시 30분 군산시청 앞에서 철새도래지인 금강호 주변에 대한 최근의 개발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군산시는 지난해 철새도래지 조성을 위해 정부와 도·시에서 약 4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철새조망대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철새 조망대 바로 앞 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락시설단지를 허가해 줌으로써 철새조망대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군산시는 금강호 주변의 위락시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금강하구인 주변을 천연기념물 보존지역과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금강하구엔에는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하여 고니, 저어새 등 다종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검은머리물떼새는 금강하구엔에 다량으로 서식하여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잡습니다.**

지난호(137호) 1면 기사에서 '전북 시민운동연합 대표 이광철'을 '전주시 민회 대표 이광철'로 바로잡습니다.

## "이제는 고운 옷 입고..."

- 고 박복실 열사 7주기 추모식 -

70년대부터 전북지역의 노동운동을 이끌어온 대표적 노동운동가인 고 박복실 열사의 일곱 번째 추모식이 지난 11일 익산노동자의집(소장 이숙자)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박복실 열사와 함께했던 옛 동지들과 민주노총 등 현재 곳곳에서 노동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15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미사를 집전한 최종수신부(김제 수류성당 주임신부)는 "험난한 시절 민주노조 건설에 온몸을 바치며 노동자와 함께 싸운 열사는 진정 예수의 길을 세상에서 보여준 사람"이라면서 "열사의 뜻을 우리가 이어받아 책임지고 이뤄나가는 것이 열사를 추모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추모식에는 또 생전의 열사와 함께했던 리수현신부(용안성당), 문정현신부(작은자매의집), 오두희(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회장)씨 등이 회고하는 열사의 모습과 그의 동지와 후배들이 현재 전북의 이곳저곳에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물이 상영되어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문정현 신부는 "박복실 동지는 위압이 안걸릴때야 안걸릴 수 없게끔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노동운동에 헌신했다"면서 "생전에 늘 청바지만 입었던 박복실 동지가 이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믿는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박복실열사는 79년 태창메리야스에 입사, 81년 태창메리야스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전북지역 최초의 민주노조운동을 시작했다. 82년부터 무려 일곱차례의 해고를 당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했다. 87년부터 전주노동자의집에서 활동, 90년 전북노련 지도위원, 91년 6월 위암수술을 받고 8개월간 투병생활 끝에 92년 3월 11일 서른여섯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인권
주평

# 보육원의 청소년들

이재철(전주시 의원)

독일의 한 여성운동가가 쓴 자서전을 수 년 전에 읽은 적이 있다. 그 안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것은 그 여성은 보육원 출신으로 일반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것을 오히려 다들스럼하게 여기며 자신의 성장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점이었다. 대학교육까지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친구나 동료들에 비해 자신이 더욱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은 한 번도 부모라는 존재로부터 폭력을 당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놀라게 발견한 것이다. 보육원 안에서 그녀는 인격적인 대우와 철저한 건강검진과 다양한 특기교육과 여러 견문학습을 받으며 자랐다. 그것이 그녀를 끝까지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나는 조사특위활동을 하는 중에 전주시 소재의 보육원을 일차 현장시찰한 적이 있다.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수용시설에 불과한 것같은 보육원도 있는가하면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 이상황에서 더 뭘 바라라하는 심정으로 문을 나섰던 보육원도 있었다.

갈수록 다원화되는 사회분위기에서 자녀교육의 긴장이 팽배해지는데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그러한 가정세계와는 당연히 단절되어 있었다. 학교생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감수성이 가장 발달한 청소년기에 이들을 교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끌고 안정시켜줄 수 있는 여건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나는 전체 보육원생들의 생활기록부와 성적표를 자료요구하여 살펴보았다. 전주지역의 보육원 학생중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단 한 명이 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 '주의산만', '자신감부족', '친화력없음'... 그것이 보육원생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받은 행동특성 내용이었었고 중학교 이

## '보육원'이라는 청소년 삶의 권역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관심 밖이었는지 깨닫게 됐다.

상 실업고를 다니는 원생들은 거의 최하위의 성적을 받고 있었다. 성적이라는 것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후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면 보육원생들이 학교성적의 하위부문을 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 18세가 되어 어쩔수 없이 보육원을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살까. 나는 시설관리의 다른 문제점보다 보육원생들의 학습환경과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를 큰 숙제로 남겨두었다.

그 얼마 뒤 조사특위는 대구의 한 보육시설을 방문했다. 그 시설을 추천해 준 사람의 말은 "아이들의 얼굴이 살아있다"는 거였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야 알 일이었다. 그 보육원은 두 체의 사택처럼 보였는데 대문에 보육원이라는 현판이 없었다(현판이 없는 시설은 처음 보았다).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종사자들을 보고 아이들은 보면서 끝없이 가슴이 울먹거리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 보육원의 아이들은 생기가 넘쳐 흘렀다.

한쪽에서 기타치고 노래하는 남자아이들, '다녀왔습니다'하며 학원갔다 들어오는 아이, 저희들끼리 깔깔대고 이야기하다가 외부사람에 놀라 와르르 도망가는 여학생들, 다목적실에서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초등학생들... 1·2층 복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들이 뿔뿔이 전시

되어 있었다. 그 아이들은 거의 모두가 학교에서 어떤 역할로인가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원봉사나 종교단체의 여성들로 보였던 사람들이 알고보니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며 함께 사는 보육사들이었던 것도 나를 진정 놀라게 한 것 중 하나였다.

'어머니'로 불리는 원장의 보육원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보육시설이 어떻게 일반 가정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는가하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지극히 민감한 청소년들, 그리고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있는 원생들의 시설생활과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사례를 지금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은 그 안에서 너무도 당당하고 자유롭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권위적이며 이기적인 부모, 그리고 음주를 일삼고 폭력적인 아버지, 분장이 끊이지 않는 부모를 둔 아이들보다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시설에 지원되는 정부예산은 생활자들의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설들은 거의 비슷한 재정여건이다. 이 속에서 운영자의 철학이나 소신, 희생정신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후원을 유도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낼 줄 아는 관리능력 등의 차이에 따라 시설 생활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이것이 여러 시설들을 돌아보면서 얻은 큰 결실이다.

그리고 훌륭한 운영자에 의해 미래에 힘입되는 보호와 교육을 받는 극히 소수의 보육원생과 또한 일정기간 수용만 되어 있는 대부분의 보육원의 아이들을 보면서 '보육원'이라는 청소년들의 삶의 권역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관심 밖이었던지 깨달은 것이 가장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39 호

1999년 3월 23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독.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 경찰, 피의자 인권 무신경

### 군산경찰서, 대기실 없이 유치장 구금

피의자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도리어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군산경찰서가 지난 17일 저녁 7시경 군산노동사무소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와 노동단체 회원들을 구금·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모욕적인 처우로 일관해 물의를 빚고 있다.

#### 유치장 공개 장소에서 웃밧게 해

이송준씨(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40세) 등 강제연행돼 조사를 받은 14명은 자신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사기간 내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었다"고 밝히고, 유치장에 구금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과 다른 피의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몸수색을 이유로 한 사람씩 차례로 팬티만 남기고 웃을 모두 밧게 해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도서열독 문제를 상의하는 피의자에게 욕설과 함께 "싸가지없다"는 등의 폭언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피의자가 이에 항의해 소장 면담을 요구하자 이 또한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싸가지없다" 폭언

경찰은 이밖에도 연행된 피의자들을 유치장에 구금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이 입고 있던 메리야스를 모두 밧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교도소 의문사 조사단 구성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주교도소 재소자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이 꾸려졌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인권운동사랑방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 17일 전주교도소측에 공문을 보

내 "고 배재문씨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의 방문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고 배재문씨 사망사건에 대하여 1차 수사기관인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내사 종결을 선언한 바 있으나, 인권단체에 유가족의 도움 요청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미 정무기관과 언론 등 각계에 유가족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등, 고 배재문씨 의문사 사건의 진상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주교도소측이 인권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교도소 방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서 조사단은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전주교도소를 방문한다는 계획을 함께 밝혔다.

### [인권간행물]

## 인권교육 길잡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지음/도서출판 사람생각/1999/9천원

무엇이 인권이고, 어떻게 인권에 대해 배울지 난감한 사람들을 위하여 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게 쉽고도 핵심적인 방법을 소개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우리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인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의 정의, 역사, 내용, 추구하는 가치, 인권지킴이 활동 등 모두 5부로 구성돼 있고 각 부마다 인권이 가지는 본질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다.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싫어하고 버리고 싶은 것을 발견하고, 인권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기 등을 익힌다.

연세대학교 교육 동아리 '열음' 회원들이 직접 해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기도 한 이 교재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풀어내고 함께 나누면서 자기 자신 속에 담겨 있는 인권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인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치로 보는 인권'을 각 부마다 실었고, 주요 국제인권조약(세계인권선언 등)과 우리나라 헌법에서 인권과 관련한 조항(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을 부록에 덧붙였다.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 02-741-5363)

# ■군산 노동자투쟁 경과

**[2월 26일]**

= 노동사무소 항의시위 도중 군산지역 카캐리어 장성민씨 경찰의 집단폭력으로 실명위기

**[3월 5일]**

= 기아특수강 정리해고 노동자들, 체불임금확인서 발급받기 위해 군산노동사무소 방문 - '6일 발급' 약속받음

**[3월 6일]**

= 이달선 근로감독과장 '단체교섭합의서'라는 위조의혹의 문건을 제시하며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거부'  
= 대책위에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제시 - 근로감독과장 근무지 이탈, 공현철 감독관이 공문(감독 68200-333) 파기  
= 기아특수강 대책위 철야농성 시작

**[3월 8일]**

= 24:00 90여 시간만에 체불확인서 발급(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 안된 상태임)을 전제로

**[3월 9일]**

= 노동사무소장 면담(원본은 상호보인 후 노동사무소에서 보관, 감정기관에서 진위확인 보장, 위조 판명시 재발급 등 내용의 각서를 받음)  
= 면담 후 90시간만에 기아특수강대책위 철수  
= 11:30 한국노총 군산시지부장, 기아특수강 노조위원장, 기아특수강 사측 관리자들과 노동사무소 난입, 기물파손 등 폭력행사 후 봉인한 단체협약서 원본(위조문건) 가져감

**[3월 10일]**

= 군산시청에 정보공개청구 통해 '단체교섭합의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확인

**[3월 12일]**

= 노동사무소 방문 - 밀봉된 '단체협약서'를 비롯한 정밀 감정뢰 문서들을 회사측에서 가져간 사실 확인

**[3월 13일]**

= 민주노총전북본부 집회

**[3월 15일] (농성 첫째날)**

= 노동사무소장 면담 결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만)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함. 시정요구 - 농성돌입(첫날)

**[3월 17일] (농성 3일째)**

= 19:00 전투경찰 2개중대 진입, 농성자 14명 전원연행  
= 20:00 민주노총 간부, 조합원, 연행자 가족, 군산경찰

서 앞에서 밤샘농성

**[3월 18일]**

= 11:00 민주노총 전북본부 비상대표자회의 - 총력투쟁 결의 / 투쟁일정 결의  
= 16:00 30여 단체 대표자 모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비대위·상임대표 문정현) 구성 결의  
= 17:00 군산경찰서 앞 집회 - 민주노총중앙, 조사단 파견  
= 21:00 공식집회 종료 후 밤샘농성

**[3월 19일]**

= 10:00 비대위 기자회견(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실)  
= 13:00 군산경찰서 항의시위 - 영결식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장 등 12명 석방  
= 16:00 군산노동사무소 항의시위

**[3월 20일]**

= 비대위 총력 결의대회(군산 구시청, 경찰서, 노동사무소) - 김연태 군산지역 투쟁사업장 연대회의 의장 석방(최재석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조직부장 구속 확정)

**[3월 22일]**

= 비대위 군산노동사무소 앞 천막농성 시작

<평화와인권>은 독자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인권운동을 더 잘 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행사와 동정

- 편파행정 책임자 처벌과 폭력경찰 규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 2차 기자회견
  - 때 : 23일(화) 오전11시
  - 영결식 : 군산노동사무소 앞 천막농성장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토론회
  - 때 : 26일(금) 오후3시 · 곳 : 전주시청 4층
- 민주노총 대정부 총력투쟁 1차 결의대회
  - 때 : 27일(토) 오후2시 · 곳 : 군산구시청사거리
-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입주식
  - 때 : 25일(목) 오후5시
  - 곳 : 본부 사무실(0652-231-3341)
- 고 조성만열사 추모비 건립 후원계좌 안내
  - 전북은행 529-21-0052723 (예금주 고흥석)

# 군산노동부·경찰, '노동자탄압' 공조 항의민원노동자 모두 연행... 1명 구속, 3명 입건

부당노동행위를 감싸며 문서까지 위조한 의혹을 사고 있는 군산노동사무소(소장 한공석)와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연행·구속한 군산경찰서(서장 이명섭)에 대해 전북지역 노동자들과 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저녁 7시, 군산노동사무소와 기아특수강측의 '노사 단체협약 합의서' 위조(평화와인권 138호 참고)에 항의해 노동사무소에서 3일째 집단민원을 제기하던 14명의 노동자와 민주노총전북본부 간부를 전원 연행했다.

### 집단민원 노동자 강제연행

이에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곧바로 '편파노동행정 책임자 처벌 및 폭력경찰 규탄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문정현·비대위)'를 만들어 17일 저녁부터 연일 집회를 열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비대위는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군산노동사무소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감싸주고 편파수사를 일삼더니 급기야 사측과 짜고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공권력을 요청해 집단민원을 하며 합법적으로 항의하던 14명을 연행하기까지 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면서 비대위 결성 배경을 밝혔다.

또 "이번 군산노동사무소의 행태는 경제위기와 일방적 구조조정을 틈타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정의 표본'이라 판단한다"며 "이번 사태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7일부터 19일까지 연일 밤 12시까지 군산경찰서와 군산노동사무

소 앞에서 강도높은 항의집회를 가진 데 이어 20일 오후 2시 군산 구시청에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편파노동행정 책임자 처벌과 연행자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총력집중대회'를 가졌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연행자 14명 중 13명이 풀려나고 한 명이 구속 기소됐다.

### 비상대책위, 강경 투쟁 돌입

그러나 비대위는 노동부를 제대로 응징하지 않으면 앞으로 부당노동행정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21일 오후 5시부터 군산노동사무소 앞에서 ▲군산노동사무소장, 이달선 근로감독과장, 공현철 근로감독관 파면 ▲편파노동행정에 대한 노동부장관 사과 및 제

발방지 약속 ▲최재석 민주노총 군산시협의회 조지부장 석방 ▲군산경찰서장 파면 ▲군산지역 부당노동행위 5개 사업주 처벌 ▲경찰폭력으로 인한 군산 카캐리어 노조 장성민씨 부상(99.2.26 집회)에 대한 국가배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2.26 집회)로 최재석(31)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김연태(군산 투쟁사업장 연대회의 대표·군산대노조 위원장)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다른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경찰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사무소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여기에서 지난 2월 26일 군산지역 노동자들의 군산노동사무소 항의집회에서 "집회신고 구간을 넘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아특수강 해고자 김삼배씨 등 15명에게도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 "실업자도 몽치자!" 첫 실업자 학교 큰 호응... "나도 실업자!"

실업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본격적으로 내건 '실업자 학교'가 전주에서 열리고 있다. 장소는 전주실업자취업지원센터(전주 서학동성당 안).

"나도 실업자!"라는 제목으로 오두희 부소장의 첫 강연이 있던 22일, 40여 명이 실업자 학교에 등록해 실업자들의 참가가 적을 것이라는 주최측의 예상을 뒤집었다.

오두희 부소장은 "실업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며 "△노동할 권리 △쾌적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특히 '단결권' 등 노동3권도 실업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자들이 서로 단결해 힘을 모으고, 사회단체는 물론 이웃과 함께 실업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번 학교는 전주실업자취업지원센터(소장 문규현)와 전북실업자민간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가 주최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번 실업자 학교는 24일 제2강의 '실업자! 노동자로 거듭나기'(전북인력은행 이강충), 26일 '우리경제 바로보기'(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채만수), 29일 '실업현황 및 실업정책 알아보기'(전주지방노동사무소 차은화), 그리고 31일 '마음을 여는 자리'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이 직접 참여해보는 역할극(지도: 심리극 전문가 염귀녀)을 끝으로 졸업식으로 이어진다. 강의시간은 오후 2시부터.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 : 0652-232-9191)

**특별  
기고** **조성만 열사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며**  
- 고흥석(전북대 교수)

우리 민족은 외세와 독재, 그리고 자본에 저항하여 치열하게 투쟁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애국인들이 마지막 항거 수단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60년대 이래 지금까지 4·19, 5·18 열사를 제외하고 331명이 산화했다. 이들의 삶은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살아온 삶이 아니라, 동료와 조직,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온 아름다운 삶이었다.

**가장 고귀한 죽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죽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우리는 억압하는 제국주의와 분단 독재에 대해 누구보다도 적개심을 가지며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이들을 열사라 칭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

1988년 5월 15일 오후 3시 40분경, 명동성당에서 5월 광주민중항쟁 8주기를 맞아 '양심수 전원 석방 및 수배 해제 촉구 결의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때 명동성당 교육관 옥상에서 한 젊은이의 피울음이 들렸다. 앞쪽으로 향해 있던 사람들이 일거에 자세를 돌려 교육관 옥상을 바라보았다. 옥상에는 한 젊은이가 '조국통일과 공동올림픽 개최'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분단독재를 고발**

그리고 그가 뿌린 유서가 하얀 깃털처럼 허공 위를 맴돌며 떨어지고 있었다. 그 젊은이는 준비했던 칼로 자신의 배를 그은 뒤 다시 한번 피끓는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자신의 몸을 날려 평바닥으로 떨어졌다. 고난의 땅 팔레스티나 목수의 아들 예수를 늘 생각하던 젊은이 조성만 열사는 그 누구도 통일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외치며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살아온 삶이 아니라, 동료와 조직,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온 아름다운 삶이었다.**

**조성만 열사의 삶**

- ▶ 1964년 12월 13일 전라북도 김제군 용지면 용암리 126번지에서 부친 조찬배씨와 모친 김복성씨의 4형제 중 차남으로 출생
- ▶ 전주금암국민학교, 서중학교, 해성고등학교 졸업
- ▶ 1981년 6월, 전주 중앙성당에서 문정현 신부께 영세 받음.
- ▶ 1984년 서울대 자연대 화학과에 입학
- ▶ 명동성당 청년단체연합회 소속 가톨릭민속연구회에 가입.
- ▶ 1988년 5월 15일 명동성당 청년단체 연합회 주회 오월제 행사 중 조국통일과 군사정권 퇴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를 외치며 할복 투신, 숨을 거둠

스스로 목숨을 바쳐 분단독재를 고발하였다.

조성만(요셉) 통일열사가 이 땅을 떠난 지 11년, 우리 조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민족으로 남아 있다. 민족분단의 폐해는 엄청나다.

자주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독재정치가 반영구화되어 양심적이고 의로운 사람들이 투옥되고 인권유린과 고문과 학살이 공공연하게 자행된다.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양극화와 경제구조의 대외종속성을 심화시켜 왔다. 사회적으로는 구조적 부정부패가 만성화되고 도덕적 퇴폐와 범죄의 증가·포악화, 그리고 민족 공동체 내부의 계급·계층간의 대립과 갈등, 또한 이념적 대립과 분열, 불신 풍조의 만연 등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민족분단의 폐해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외세에 종속되어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작지만 많은 사람의 힘으로

통일이 단지 소원이었던 우리에게 통일은 절박하게 제기되는 민족의 소명임을 조성만 열사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조성만(요셉) 열사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이어나가는 첫걸음으로,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과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교우회'에서는 금년 5월 15일에 추모비를 건립(예정지 : 전주해성고등학교 교정 혹은 숲정이 성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큰 손'보다는 '작지만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건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 생각하고, 여러 양심적인 단체와 개인에게 추모비 건립의 취지를 알리고 정성을 모으기로 하였다. 추모비 건립 추진위원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40 호(6면)

1999년 3월 30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전.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 노동부 '공정성' 잃었다

### '단협체결했다' ... 문서위조 쟁점 예곡

광주지방노동청이 작성한 <기아특수강(주) 정리해고자 관련 동향>(동향) 문건이 이번 사태를 또 다시 왜곡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동향'은 군산노동사무소 상급기관인 광주지방노동청이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한 것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 이수인 의원의 요청에 따라 노동부가 3월 26일 제출한 문건이다. 모두 6쪽 분량의 '동향'은 △분규배경 및 쟁점 △그간 경위 △노동부 조치사항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 사태 전개과정 왜곡

노동부는 이 가운데 '노동부 조치사항'에서 '98년 상여금은 지급할 상여금을 포기하기로 단협을 체결했다(98.1.19)'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아특수강 해고 노동자들은 기아특수강 사측과 노조가 단협 체결의 증거라며 내놓은 '단체교섭합의서'는 위조 문건이라며 지난 3월 6일부터 강경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더구나 지난 3월 8일 군산지방노동사무소가 <임금체불유무확인>(문서번호:감독68200-298)이라는 문건에서 '98년 1월 19일 단체교섭합의서의 허위작성여부 등에 관해서는 각 당사자간 주장 상이로 당소에서 진위여부판단을 할 수 없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이 문건은 이밖에 △한국노총과 기아특수강 노조위원장이 사무소 집기를 부수고 '단체교섭합의서'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되찾아 간 점 △경찰을 불러 형의노동자를 폭행해 실명위기에 놓인 점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편파적인 노동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비판 여론에 변명하기 급급

이와 함께 군산노동사무소도 여론을 의식해 민원실에서 배포하고 있는 4쪽 짜리 전단에서 '3월 8일에 기아특수강(주) 노사 당사자를 조사한 바 단체교섭합의서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했고 '당일 밤 10시경에 체불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사무소의 조사는 노동부가 기아특수강 사측 및 노동조합측과 '입을 맞추는' 요식행위였다"는 해고 노동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다, <임금체불유무확인> 공문을 같은 날 해고 노동자들에게 발급한 사실도 노동사무소측의 주장에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은 편파행정 책임자로 지탄을 받고 있는 군산사무소 이달신 근로감독과장을 전주사무소로 오히려 자리를 높이고, 전주사무소 박정환 고용안정1과장을 군산사무소 근로감독과장에 임명해, 노동자들이 전주사무소 앞에서 30일 오후 2시 항의 집회를 갖는 등 이달신 과장의 파면과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종교 복사기를 기증하실 분을 찾습니다.

## 세 번째 인권학교를 엽니다.

1. "인권이 뭘까?" ■인권의 정의
2. "인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인권의 역사
3. "인권에는 뭐가 들었을까?" ■인권의 내용
4. "인권이 소중한 여기는 것은?"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5.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권지킴이

- ☎ 감사 :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 ☎ 시간 : 5월 6일(목), 7(금), 12(수), 13(목), 14(금) 저녁 7시
- ☎ 장소 : 전주 서학동성당 교육관
- ☎ 주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 민주노총 대정부 투쟁 고삐

## 군산 문제 물러 열기 고조

지난 1년 동안의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엄경석) 주최로 군산 구시청 사거리에서 열린 '대정부 총력투쟁 전북지역 결의대회'에는 약 1천여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에 △정리해고 중단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 민주노총의 대정부 4대 요구안을 주로 외쳤다.

군산노동사무소 문제와 각종 노동문제들에 대한 집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날 집회는 "앞으로의 운동진영에 대한 밝은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이날 문정현신부(편파노동행정 책임자 처벌 및 폭력경찰 규탄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 상임대표)는 연대사를 통하여 "끝까지 투쟁하여 현재 썩어빠진 관료들, 정치인들, 재벌들을 박살내자"고 이야기하며 끊임없는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송병주(농민회 전북도연맹 의장)씨는 "그간 참아왔던 농민들도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엄경석씨는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를 <구조조정 저지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북지역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할 것을 선포하고, 4월 5일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 4대 요구'를 발표했다.

투쟁선포식을 마치고 편파적 노동행정의 온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군산 노동사무소까지 참가자들은 행진을 벌였다.

이날의 집회에서 한 참가자는 "다시금 80년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인가?"라는 말을 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더욱더 모여들 것이다'고 말했다.

# 전주교도소 조사단 방문 거절

전주교사제단·평화와인권 등 항의서한 전달

전주교도소가 고 배재문씨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의 방문을 거부하자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은 29일 성명을 내고 "전주교도소가 인권단체의 조사단 방문

요청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사건이 이미 종결됐다'며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인권단체와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면서 "전주교도소는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침묵과 몸사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조사단 방문>거부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다시 한번 조사단 방문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7일 전주교도소에 공문을 보내 "고 배재문씨 사망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조사단 방문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평화와인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와인권은 이를 통해 국내외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와인권>이 매우 어렵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행사와 동정]

- 편파노동행정 규탄과 책임자 처벌 촉구 집회
  - 때 : 3월 30일(화) 오후2시 · 곳 : 전주노동사무소
- 군산미군기지 소음실태조사 1차 간담회
  - 때 : 4월 2일(금) 오후3시 · 곳 : 옥서면사무소
- 민간인 사찰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 제2차 공판
  - 원고: 소장 진술, 피고: 답변서 진술 -
  - 때 : 4월 6일(화) 오후2시
  - 곳 :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
- 실직가정생활지원과 영·유아 놀이방 운영을 위한 먹거리 장터
  - 때 : 4.8(목)-10(토) · 문의 : 0653-841-1040
  - 곳 : 익산 황실예식장2층(구 신중앙예식장)

# 사회복지 수용시설 '빙벽' 깨기 첫걸음

## 동암 공동위, '수용인 복지'와 '인권' 토론회

사회복지시설 '동암'의 인권유린 사태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상임대표 김승환·공동위)가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정리·발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6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각 시설관계자와 시민단체,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 관련 제도 개혁해야

공동위의 집행위원장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벌인 윤진영 교수(전주대 사회복지학과)는 '동암사태의 성격과 해법'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동암문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커다란 빙벽이 있음을 절감했다"면서 "그 빙벽은 비리시설 뿐 아니라 그를 비호하는 공무원, 시설내 수용인(사회적 약자)에 대해 너무도 무심한 지역사회, 그리고 무책임한 언론, 이 모든 것이었다"면서 지난 4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느꼈던 어려움을 토론했다. 윤교수는 이어 "동암문제를 계기로 이 빙벽과의 싸움이 우리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제시하고자 하는 해법은 그 빙벽을 깨기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교수는 동암사태의 해결방향으로 △동암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재의 동암법인 이사회 퇴진·재구성 △시설장 및 종사자 공개채용 △동암사태 전반에 걸쳐 불법행위를 범한 관련자 처벌 △동암재활원을 시설목적에 맞게 개선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주무관청은 법률전문가, 사회복지계전문가, 공익적 시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제시한 해결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와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개혁신운동단체의 결성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평가 조례를 제정해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그렇게 대우해도 괜찮은 존재" ?

시설내 수용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문제에 대해 발표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는 "수용인의 생존문제가 철저히 시설장에 달려있는 것은 수용인 개개인에 대한 국가지원이 시설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면서 "수용인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수용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또 "그동안 많은 사건을 통해 수용인의 인권문제가 대두되었음에도 개선되지 못했던 것은 수용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그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을만한 존재'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격리하고 싶은 존재'였다는 점에 있다"면서 시설내 수용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인권간행물]

# 인권하루소식 합본 11호

인권운동사랑방 / 1999 / 1만원

지난 6개월간(98.7.1-98.12.29) 한국의 인권상황을 총 망라한 인권하루소식 합본 11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 평가한 글을 머리글에 실었다. ▲김대중 정부의 인권과제 ▲김대중 정부 1년의 주요 인권성적 ▲인권운동의 새로운 과제 등으로 정리된 합본호 머리글은 지난 1년간의 시민·정치적 권리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영역별로 점검, 평가하면서 '김대중 정부 1년은 기만과 배제를 구조화시키는 길'이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93.9.7 창간 후 3월 24일 현재 지령 1333호를 발행하고 있다. 주 5일 팩시밀리로 통해 배달되고 있으며 E-mail과 우편으로도 발송되고 있다. 또 PC통신과 인터넷(<http://www.iworld.net>)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며 6개월마다 합본호로 묶여 발행되고 있다

인권  
주평

# 후진적인 외국인노동자 인권정책

- 이희운(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장·나실교회)

## 조선족 최씨의 인권회복은?

며칠 전 전주교도소로 한 중국인을 찾아갔다. 그는 2년 전부터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무기수다. 일제시대 만주에서 항일독립투쟁을 하던 자랑스런 조선독립군의 후손이다. 그런데 그가 처자식을 중국땅에 남겨두고 왜 살인자로, 무기수로 이곳 감옥에 외로이 있어야 했는가? 물론 태평양 000선 상살인 사건의 공범이기에 집단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최연장자로 주범적으로 사형선고된 상태이다).

약 2년 동안 이들에 대한 글과 최후진술서, 조선족의 신분, 무료봉사중인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에 있어서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이 너무나도 저급한 수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아마도 그 당시 내가 최씨의 상황에 처했다면 나도 충동적으로 그와 같은 정당방위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다.

최근엔 죄를 회개하며 열심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최씨.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사죄하며 눈물도 많이 흘렸으리라. 중국에서 처음으로 그의 아내(당시 6개월된 첫 아이의 엄마)가 면회왔을 때 석방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무기수 최씨의 권고도 듣지 않던 젊은 아내의 눈물과 흐느낌은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드러내는 것이다.

1. 우리는 먼저 외국인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우리는 다음으로 외국인노동자도 한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3. 우리는 끝으로 죽임의 경제문화를 살림의 경제문화로 바꿔야 한다.

## 외국인노동자도 노동자!

##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살아온 삶이 아니라, 동료와 조직,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자본의 출입과 활동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본과 노동에 형평성 있는 정책이 이뤄져야 하겠다. 세계자본을 상전 모시듯 하고 세계 노동(특히 3세계 단순노동)은 머슴부리듯 하는 경제정책, 노동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하는 그 어느 누구에게나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하는 그 어느 누구에게나 노동자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해외자본에게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왜 인종차별을 하는가?

- 산업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박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입금을 체불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하향평준화(60% 수준)시키는 노동력 도둑질은 없어야 한다.

## 외국인노동자도 나와같은 인격체

내가 만약 미혼이라면 전주에 와 있는 중국아기씨와 결혼을 시도했을 것이다(아니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아가씨와). 그들과 지내는 동안 그들이나 한국인이거나 똑같은 인격체이고 똑같은 사랑을 먹는 존재이며 똑같은 남자와 여자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행복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경쟁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들도 우리처럼 소외되기를 싫어한다. 그들도 우리처럼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 그들도 우리처럼 음식나누기를 좋아한다. 그들도 우리처럼 남녀간의 사랑나누기를 좋아한다. 인간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단, 고향 떠나나그네일 뿐이다. 국가에서의 법이, 기업체에서의 규정이, 개개인의 사고방식이 외국인노동자도 내 몸같이 사랑받는 수준의 한국사회이기를 바란다.

## 공존공생의 경제문화가 이뤄져야

무기수 최씨 등 무기수 노동자의 순간적 범죄는 타락한 죽임의 경제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재벌기업가들의 1등 경쟁은 중소기업체들의 희생과 인건비 축소를 가져오고 결국 값싼 외국노동력을 도입하여 비인간적인 노예경제로 만들어간다. 최씨 사건은 솔직히 중국보다 못한 불평등한 임금체계와 폭력적인 노동현실 속에서 충동적이고 정당방위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타락한 경제문화에서는 계속 죽이고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고 기업가가 피해를 당하고... 한국인에게 복수를 하고...

제 2, 제 3의 무기수 최씨가 생겨나지 않도록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세계화의 시대, 지구 가족화를 이루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부터는 무기수 최씨가 중국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석방노력을 시작해야 되겠다.

특별  
기고

# 인권유린 장본인이 인권유린을 감시한다?

- 홍근수(항련교회 담임목사·전주연합공동이정)

최근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의 건이 영동하게 큰 '문제'로 번지고 있다. 그것은 민간인권기구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 3월 22일 밤 정부측과 국민회의간에 최종 합의로 "국민인권위원회"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인권위원회에 관하여 소위 당정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이 국민인권위원회는 곧 국회에 제출되고 입법절차를 본격적으로 거치게 될 예정이다. 관례를 보면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경우 일단 당정합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은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힘'으로 밀어부쳐 그대로 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실망과 우려가 큰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 법안을 졸속한 절차를 통한 입법화로 끝내기 하기 전에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또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간 인권단체들과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독립적인 인권기구를 제정하여 그 소임을 다하여 다시는 이 나라에 인권침해의 사례가 없기를 희망하여 이에 우리의 의사를 다시 한번 피력하고자 한다.

이번에 당정 합의에 의한 국민인권위의 특성은 한마디로 우리 인권관계 인사들이 지금까지 제시했던 독립적인 기구인 '준(準)헌법적'인 국가인권기구라는 위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 반대로 예당초의 법무부 통제하의 어용기구로 만들자는 법무부 안이 거의 그대로 관철되었다.

그런데 당정합의를 보게 된 절차 그 자체에 대하여 한두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 설립논의를 이끌면

서 민간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던 김원길 정책위원장과 이기문 인권위원장 등의 약속과 의사가 배제된 가운데 당정합의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우리는 주목한다. 민과 원만한 대화를 계속해왔던 김원길 정책위원장을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으로 경질하고 또 이기문 인권위원장 역시 정치적 이유로

##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성하는 인권위원회가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 제정 절차를 모방하는 듯한 수순을 밟아서야 되겠는가?

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발생한 일종의 '공백' 상태를 틈타 법무부에서는 기습적으로 이 인권위의 문제를 처리하였다.

"밀실에서 기습적으로" 합의 여러 가지 전후관계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 당정합의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국가인권위 설립논의에 있어서 그 폐쇄성을 지양하고 민간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김원길, 이기문 두 분을 동시에 배제하고, 단 한번의 공청회 같은 것도 개최함이 없이, 또 민간인들의 면담 요청도 묵살한 가운데 "밀실에서 기습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느 누구라도 이 문제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를 두고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비열한 기습(인권하루소식, 3월 23일자 1면), 또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에서 낸 긴급성명에서는 "아합해 밀실에서 기습 날치기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성하는 인권위원회

가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 제정 절차를 모방하는 듯한 수순을 밟아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그보다도 오히려 심각한 부분은 그 내용이다. 그것을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자. 당정합의의 국민인권위원회안은 우선 그 위상에 있어서 '민간특수법인' 형태로 설정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조직이나 기관의 작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구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적어도 인권위가 준헌법적 기구여야 한다는 예당초의 우리의 주장이 무시되고

국민인권위로 낙착을 보았다는 것은 앞으로 법무부나 다른 행정부는 물론이지만, 나아가서는 사법부로부터의 입김 또는 압력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려이다. 인권위원회가 이것들을 배제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그리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들 국가기구들에 의해 있을 수 있는 인권유린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권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기구들의 권능을 넘어서는 어떤 헌법적인 권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민간특수법인' 성격을 가진 국민인권위가 막강한 정치-경제적인 힘과 물리적인 힘을 가진 사법부는 물론 검찰 등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처벌을 요구하는 결정 같은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법무부 틈새 보충 역할에 불과 그러기에 국민인권위원회가 준헌법기구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예하의 기구처럼 되었다는 점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설립정관을 작성할 설립위원들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한 점, 인권위의 연례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장관을 거처도

법무부안 거의 그대로,

인권유린 장본인에게 인권유린 감시 역할까지.

'국민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로 발족해야...

록 한 점, 인권위의 결정사항을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점, 인권위원 임명에서 국무총리가 그 3분지 1을 임명하되 법무부 장관과 협의할 것을 거치도록 한 점, 등은 참으로 이 인권위원회를 원천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영향하에 두겠다는 분명한 의도의 발로일 뿐이다. 이 국민인권위는 기껏해야 법무부의 틈새를 보충하는 역할에 불과하도록 되고 만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인권위에 걸고 있는 기대를 배반한 것이다. 기껏 선한 의도로 보아야 그것은 법무부의 보충기구로써 법무부의 틈새를 보충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아 "틈새 기구"(위의 인권하루소식)라는 표현을 면키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권위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정부(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이 유엔 권고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당정합의로 제안되고 있는 국민인권위원회는 그것이 전혀 관철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말기는 볼

또 9명의 인권위원들로 국민인권위를 구성한다는 것도 이것을 제안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너무나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 즉, 이들의 생각은 하나의 형식이나 장식으로 인권위원회를 가지자는 것일 뿐이다. 이 9명의 인권위원들로 국가의 인권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물론 그 방대한 인권유린 사건들을 다 담당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이들 중에 4명만 상근한다고 되어 있다. 4명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보다도 인적 구성에서 이 국민인권위는 원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인권위원 9명의 임명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국무총리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무해하게 보이는 이런 방식의 인권위원 임명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인권유린의 장본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검찰과 정치관사들이라는 말하자면 국가 기구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에 의해 저질러 질 것이 예상되는 인권유린 사례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성격을 가져야 할 인권위가 장본인인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국무총리가 추천한다는 말인데 도대체 그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인권유린 장본인들에게 인권유린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맡긴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도록 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장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법안 심의 때 고려할 몇 가지

우리는 당정합의로 제안되는 국민인권위원이 위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될 때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꼭 배려해 주기 바란다.

첫째 이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민간 인권 단체들의 대표들과 인권관계 전문가들과 관계인사들을 연사로 초청,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기 바란다.

둘째 국민인권위는 국가인권위로 바뀌어야 한다. 구태여 현존하는 국가기구와 관련시키면 감사원과 같은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원 추천권은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통령, 그리고 민간의 '인권단체 협의회'(현재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등으로부터 각각 5명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위원장은 그들 가운데서 호선하고 대통령이 추후 임명하는 절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무총리에게 위원 추천권을 주는 것은 3권분립의 원리에서 보더라도

전혀 격이 맞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하여서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전혀 기하기 어렵다.

셋째 인권위의 위원 숫자는 현재의 9명에서 적어도 20인 이상으로 확대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전문가들 중에는 법률가, 종교인, 교수, 언론인, 문화-예술계 인사, 일반 재야운동가들, 특히 인권 관련 단체의 인사들, 등이 광범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태여 상근, 비상근으로 나누려면 적어도 15인 이상의 상근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은 타부서로부터의 잠정적인 파견 공무원으로 채워질 것이 아니라 전담 공무원들이어야 하지 그렇지 않고 쓰레기 처분장 같은 곳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계약제에 의해 일부의 민간인들이 채용된다고 하나 이 계약제가 약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공개채용 고시에 의해 채용되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로 인권위의 권한의 문제이다.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인권기구의 권한은 "구속력 있는 결정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유엔의 권고기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권고나 의견표명을 집행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유엔의 인권선언이나 권고안이 강제력이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 이 정부가 앞장서서 무시해 온 것만 보아도 이 인권위의 권고나 의사표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공산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러므로 인권위에서는 인권유린 사태에 대하여 고발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원 같은 권한이 인권위원회에 부여되어야 인권위는 비로소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의 예산 충당 방식도 문제가 있다. 당정합의안에 의하면 예산의 일부는 정부쪽의 출연금과 또 일부는 민간기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보기 보다 많은, 그리고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는 전액 국가 예산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감사원처럼 말이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41 호

1999년 4월 6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독.넷.진보넷) · E-mail : onespark@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 인권운동가들 단식농성 돌입

### 인권법안 반대의사 분명히 ... 30여명 7~13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인권법안을 짚은 인권운동가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의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30여명의 인권운동가들은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 예정으로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이들은 △인권법안 철회 △법무부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쓸모없는 인권위' 우려

단식농성에 참여한 인권운동가들은 "이번 인권법안은 최소한의 민주주의 절차도 외면한 채 마련된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거친 이번 인권법 최종안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강조했으며 법무부와 줄곧 대립된 입장을 보여온 김원길 정책위 의장의 경질과 이기문 인권위원장의 의원직 상실 등 국민회의측 전문가들의 낙마를 틈타 결정됐다.

농성자들은 여기에 이 법안대로라면 인권위원회는 유명무실화할 것이 뻔하다고 보고 있다. 인권법 최종안은 △인권위원회가 인권업무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활동을 보완하고(제2조제2항)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법무부를 명시(제6조)함으로써, 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법무부의 인권업무를 보조하는 기구에 불과함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인권위의 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모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

과하도록 하고(제65조) 있다.

#### 법안 폐지 · 법무부장관 퇴진해야

특히 △법무부장관이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인권위 설립을 담당하도록 하고 △설립위원회에 의해 작성되는 최초 정관 역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 등은 인권운동가들의 그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법안은 인권위의 관할범위를 한정해 기본적인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에게는 조사거부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결국 인권위 결정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암울한' 사태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다.

"인권운동 자존심 걸고 막아야" 한편 오는 12일 제네바 유엔인권위에서는 메리 로빈슨과 아시아지역 비정부기구(NGO)간의 면담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농성에 참여를 앞두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28)씨는 "인권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제대로 된 감시는 물론 참여 자체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인권운동의 자존심을 걸고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사기가 없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고 복사기를 기증하실 분을 찾습니다.

## 세 번째 인권학교를 엽니다.

1. "인권이 뭘까?" ■인권의 정의
2. "인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인권의 역사
3. "인권에는 뭐가 들었을까?" ■인권의 내용
4. "인권이 소중한 여기는 것은?"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5.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권지킴이

- ◆ 강사 :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 ◆ 시간 : 5월 6일(목), 7(금), 12(수), 13(목), 14(금) 저녁 7시
- ◆ 장소 : 전주 서학동성당 교육관
- ◆ 주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 “군산은 지금 투쟁중...”

## ① 군산대 ② 카캐리어 ③ 기아특수강

[편집자주] 군산지역은 지난 1월부터 IMF 이후 무차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정리해고,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탄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험차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개 사업장(군산대노동조합, 정리해고철회를위한기아특수강대책위, 군산지역카캐리어노동조합, 문화텍시노동조합, 대우상용차사무연구직노동조합)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하나는 회사측의 불법행위에 그를 비호하고 감싸는 노동부의 편법 행정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은 회사측과 이를 비호하는 노동부, 아 둘의 거대한 힘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투쟁의 결과, 최근 5개 사업장 가운데 2개 사업장(문화텍시, 대우상용차)의 문제가 원만히 타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3개 사업장은 이 거대한 벽과 맞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업장들의 문제가 원저 세 번에 걸쳐 나눠 실는다.

## ① 군산대학교 노동조합

군산대학교는 지난해 8월 5일 군산대학교 소비조합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12명과 비조합원 1명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군산대학교는 지난해 7월 30일 제일제당과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했다. 제일제당은 식당운영을 인력관리회사 제일기업에 하청을 줬고 제일기업은 시간당 2500원의 계약제로 식당종사자들을 재고용하고자 했다.

이에 앞서 군산대학교측은 지난 97년 12월 29일 군산대학교노동조합(위원장 김연태)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사를 대동해 6명을 조합원으로 한 소비조합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에 군산대노조는 행정심판을 냈으나 노동부는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식당 종사자 13명에 대한 해고는 그 뒤 일어난 일이다.

제일제당에 식당운영을 맡기는 이유로 학교측은 식당운영의 적자를 핑계했다. 그러나 군산대노동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조합식당은 연 2천6백만원 정도의 흑자를 냈고 학교 이사장, 부이사장 등 임원진은 1천만원 상당의 성과급까지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대노조는 “식당종사자, 13명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없이 진행되었고, 또 적자가 아닌데도 해고한 것은 해고회피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판을 신청했다.

군산대노조는 또 “애초 소비조합 식당은 학생들의 기성회비에서 3억4천만을 전용해서 건립된데다 연 6백만원의 장학금 지급조건으로 멀쩡하던 식당을 제일제당에 업무계약을 한 상시이하의 계약체결 과정이 이해가 안간다”며 “식당 노동자의 생존권만 희생시킨 상시 이하의 계약체결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음호에 ② 카캐리어 계속]

## 군산 비대위 체육대회

‘단결·투쟁·승리’ 다짐

지난 4일 <편파노동행정 책임자 처벌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군산 동초등학교에서 60여명의 노동자와 노동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결·투쟁·승리를 위한 체육대회’를 가졌다.

### [알림]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계획하고 계신 사업, 현장소식,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인권침해의 현장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평화와인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와인권은 이를 통해 국내와 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와인권>이 매우 어렵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행사와 동정]

- 민간인 사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제2차 공판  
- 원고: 소장 진술, 피고: 답변서 진술 -  
· 때 : 4월 6일(화) 오후2시  
· 곳 :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
- 실직가정생활지원과 영·유아 놀이방 운영을 위한 먹거리 장터  
· 때 : 4.8(목)-10(토) · 문의 : 0653-841-1040  
· 곳 : 익산 황실예식장2층(구 신중앙예식장)

## 미군기지 마을 주민 소음피해 조사

### 군산시 녹색연합, 군산비행장 비행기소음 조사 나서

미군기지 주변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비행기소음에 대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녹색연합 산하 배달환경연구소가 군산시로부터 용역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군산비행장 비행기소음 실태조사>는 2월과 3월 두 달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올 10월까지로 예정돼 있는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주둔 미군기지 96개 가운데 가장 큰 미군기지(영택미군기지와 군산미군기지) 가운데 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이번 실태조사는 소음 전문가들과 정밀 계측기 등을 동원해 ‘정밀한 데이터’가 산출될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실태조사를 기술적으로 총괄할 군장대 이계철 교수는 “조사대상 주변의 15지점을 측정지점으로 하고, 민간항공기와 군항공기의 비행횟수를 나누어 시간대별로 구분해 비행횟수에 따라 소음도를 측정할 것”이라며 소음 측정방식을 설명했다.

이번 군산미군기지 주변 소음 실태조사가 군산시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지나칠 수 없는 점이다. 미군기지를 끼고 있는 다른 지역 자치단체의 ‘선택’에도 이번 군산시의 ‘결단’이 얼마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녹색연합이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지난 2일 군산시 옥서면 사무소에는 면장과 이장 등 마을 주민 대표자들이 대부분 참석해 마을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대표자들은 “소음피해 조사가 이제까지 없었던 것이 아니다”며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겠는지 ‘우려만 기대만’ 하는 모습이었다.

녹색연합은 군산미군기지주변찾기 시민모임과 협조해 <현장조사>가 끝나

면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거쳐 오는 12월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 의문사 유가족, 진상규명 촉구 식발

### 국무회의 통과 인권법 반대

140일 넘게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앞 농성을 해온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식발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 국무회의를 거친 인권법안의 의결을 반대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의장 이창복) 등은 지난 달 29일 성명을 내 “의문사 진상규명이 보장되도록 인권법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아니면 의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새로운 청년 여성의 자리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제1기 성평등 교육 ‘여성아카데미’

전북지역의 여성인권단체인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소장 박상희 목사)가 성평등 교육을 위한 <여성아카데미>를 연다.

전주시 도운으로 열리는 <여성아카데미>는 전북지역에서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에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보여온 이강실 목사, 안옥희 교수, 남춘호 교수, 박민수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센터 소장인 박상희 목사도 <우리사회의 성과 성문화>를 주제로 강연한다.

4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실시될 이번 성평등교육 <여성아카데미>는 <국가와 시민사회>(김성기 한일장신대 교수), <여성과 법>(박민수 변호사), <자본주의와 남성>(국선희 전북대 교수), <여성과 경제>(엄영숙 전북대 교수) 등 여성문제를 폭넓은 관점에서 다룰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여성아카데미>를 통해 21세기를 이끌어갈 중견 여성지도자를 양성한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인권**  
**주평**

#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대하여

- 김 의 수(전북대 교수·철학)

지난 2월 22일 불교·개신교·천주교·월불교 등 종교인 대표들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형사법 이외에 국가보안법이 따로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선언했다. 한총련도 아니고 민가협도 아닌 종교인들의 이 성명은 국민의 정부에 곤혹스러움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대외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인물로 인정받은 김대중대통령은 권력기만 확보의 시점을 넘기고도 본격적인 개혁 정책에 대한 내외의 관심과 기대를 드러내놓고 비껴가기 시작하는 것 같다. 민주개혁을 통한 정치발전보다는 기득권층의 포섭을 통한 자파 정치세력 확대의 길을 선택하는 조짐이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한다.

**보수 회귀를 선택한 국민의 정부**

인권의 상징인 김대중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한국을 국제연세스타가 인권캠페인 대상국가로 선정했다는 것은 참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수가 김영삼 정권 시절보다도 현저히 많다는 지적을 짜증스럽게 받아들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김영삼씨와 김대중씨는 야당 시절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당사자들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에는 태도가 돌변했다. 현실적 조건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실적 조건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지가 문제라고 본다. 김대중대통령은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변명을 했

다(국민 여론은 개정 쪽으로 쏠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기소 168명중 실형선고 고작12명

국가보안법이 악용되는 몇 개의 핵심 조항들은 논리적 타당성을 잃은 지 오래다. 그것은 북한을 반국가단체이며 적(敵)으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금강

**온 국민이 나서는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은 진정한 의미의 전진을 위해 바로 이러한 해묵은 인간들을 갈아치우는 운동이다.**

산 관광은 무엇이고, 민족 통일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국가보안법의 판결문은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지령을 받거나 그 "수괴"를 찬양한 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나란히 UN에 가입해 있고,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와 정상회담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자들의 억압적 국민 통제 수단이었으며, 국민의 정부가 그것을 존속시키려 한다면 아직도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된다. 민주 정치를 할 자신이 없다는 증거인 것이다.

**인권캠페인 대상된 국민의 정부**

국가보안법은 엄청나게 남용되었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최근에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누가 박장관의 말을 따를 것인가? 수구적 공안세력은 개혁에 저항하면서 법을 악용하여 양심수의 양을 계속 늘려놓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남용하지 말라

고 말한다고 들을 것인가? 그들은 마치 저질 정치인들이 혼탁한 선거관에서 날조된 정보를 가지고 언론플레이의 효과만 노리듯이 보안법사범의 구속이 언론에 보도만 되면 자신들이 노리는 효과는 충분히 얻게 된다. 공안사범이 들끓는 한국사회는 '개혁'이다 '민주'다 그런 헛소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만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신들의 자리는 구조조정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막강한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남용되었는가는 국정감사자료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97-98(8월) 기간에 구속기소된 168명(59명은 계류)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에 불과했다.

**수구세력 기득권 지키기의 도구**

바른 사회, 인간다운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명백한 사실들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게 보인다. 5·18과 6월항쟁 후 10년이 지나고 20년을 내다보면서도 이 기본적인 일 한가지 이루어내지 못하는 자신들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국민들 다수가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수구세력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왔다. 그들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있는 힘을 다하여 버틸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해낸 일이 많다고 말한다. 달라진 것이 너무도 많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해묵은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자고 한다. 온 국민이 나서는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은 진정한 의미의 전진을 위해 바로 이러한 해묵은 인간들을 갈아치우는 운동이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42 호

1999년 4월 13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전.나.독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 '인권보장위' 비웃는 경찰폭력

### 전북경찰 각종 비리연루 · 폭력남발

전북경찰청이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지난 달 설치한 <인권보장위원회>를 비웃기라도 하듯 폭력과 살인 등 경찰이 저지르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아래 표 참고).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에 따르면, 지난 달 14일 군산 동원택시 기사 문권실씨(44)가 운전하던 택시를 부수고(피해액 25만원 상당) 달아나다 붙잡히자 문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두 세 차례 구타한 미군범죄 사건을 군산경찰서에 신고하자, 경찰은 "택시 손괴 부분은 보상해 줄 테니 우리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미군을 생각해 구타당한 일은 묵인하라"고 회유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부당한 처사하자 담당 경찰관은 오히려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라"며 문씨를 구박했다.

이에 앞선 3월 12일에는 완주경찰서 삼례파출소 직원이 정차해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트럭 운전기사를 파출소까지 끌고가 마구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4월 6일에는 정북 차림으로 근무중이던 경찰관이 형의 도박빚을 독촉해온 채권자를 권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일에는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폭력 혐의로 연행하려다 몸싸움이 벌어진 것을 놓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유치장에 구금한 뒤 합의금을 받고 풀려준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 최아무개씨는 유치장에 구금된 지 3시간여만에 경찰에게 합의금 명목

으로 2백만원을 건네주고 밤 10시에 풀려났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상임대표 이민우)는 지난 1일 최근 잇따른 경찰비리를 적절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비리·폭력 경찰관 징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치료비 부담 등을 촉구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탈옥수 신청원을 검거한다는 구실로 경찰관의 권총에 공포탄 1발과 실탄 4발을 장전해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장(김용백 치안감)은 최근 지방청 소속 4천3백여명의 경찰

관에게 <지방청장 지휘서신>을 보내 "뼈를 깎는 자세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벚꽃 축제 위해 강제철거 항의 노점상 분신

10일 오후 3시 50분경 정읍시 수성동 정읍시청 현관 앞에서 노점상 장주안씨(44)가 노점상 철거에 항의해 분신해 중상을 입었다.

장씨는 지난 8일부터 정읍천변 서커스공연장 앞에서 운영해오던 노점을 10일 오전 시청단속반이 강제 철거하자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시청현관에 뿌린 채 시청면담을 요구했었다.

정읍시는 10일 정읍천변도로에서 벚꽃축제에 맞춰 노점을 강제철거했다.

## 전북경찰 관련 사건 주요일지

- 1월 31일 - 검문 거부하고 달아나던 절도용의자에게 실탄을 쏘아 중상입힘
- 2월 26일 - <군산지역 카캐리어 노조> 장성민씨 집단폭행해 실명위기
- 3월 14일 - 군산경찰서 외사계 형사, 택시기사 차량을 손괴하고 달아나다 폭력을 휘두른 미군범죄 신고를 받고 "미군이 우리나라를 위해 고생하니까 당신의 다친 부분은 묵인하라"며 피해자 회유
- 3월 12일 - 완주경찰서 삼례파출소 직원, 자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트럭운전사를 파출소로 끌고가 마구 폭행
- 3월 31일 - 군산경찰서 이창수 경장, 교통사고 낸 뒤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가짜 서류 꾸며 사고 조작
- 3월 말 - 전주북부경찰서 전 수사과장 조충길씨 전별금 물의를 빚은 혐의로, 전 김제경찰서 조사계 조동렬 경사는 참고인한테서 돈을 받고 편파수사를 벌인 혐의로 각각 해임
- 4월 1일 - 전주북부경찰서 경찰 3명, 폭력용의자 오인 연행과정 몸싸움, 공무집행방해·폭력혐의로 유치장 구금, 합의금 받고 풀려취
- 4월 16일 - 진안경찰서 동향파출소 조시형 순경이 정북근무중 채권자를 권총으로 살해

# “군산은 지금 투쟁중...”

## ① 군산대 ② 카캐리어 ③ 기아특수강

[편집자주] 군산지역은 지난 1월부터 IMF 이후 무차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정리해고,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탄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험차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개 사업장(군산대노동조합, 정리해고철회를위한기아특수강대책위, 군산지역카캐리어노동조합, 문화텍시노동조합, 대우상용차사무연구직노동조합) 가운데 2개 사업장(문화텍시, 대우상용차)의 문제가 원만히 타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3개 사업장은 이 거대한 벽과 맞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아 사업장들의 문제가 똬지 세 번에 걸쳐 나눠 실는다.

## ② 군산지역 카캐리어 노동조합

카캐리어 회사는 생산된 자동차를 판매점까지 운송해주는 일을 하는 곳이다. 군산지역 카캐리어 노동조합은 대우자동차를 운송하는 대일물류와 대일물류의 하청업체 대호물류(대우카캐리어라고 불리기도 함)의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이 대일물류측의 피라미드식 하청과 불법 하도급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공제해 노동자들의 운송료를 착취하는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회사측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원 7명에 대해 98년 12월 배차정지(사실상의 해고)시켰다.

이후 전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라 판정, 원직복직을 명령했으나 대일·대호물류는 개별 기사에게 사업자 등록을 내게 하는 수법으로 사업장을 폐쇄함으로써 이들이 복직할 회사를 없애는 편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군산노동사무소 또한 원직복직 판결을 지도·감독하지 않고 이를 방관하고 있다.

이러한 싸움 속에서 지난 2월 26일 노동부 앞 항의집회에서 조합원 장성민(31)씨가 경찰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위기에 처하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군산지역 카캐리어 노동조합(위원장 오상수)은 현재 ▲운송노동자의 착취의 본질인 하도급 근절 ▲사업자 등록인을 수시로 교체할 수 없도록 관할 세무서는 무분별한 사업자 등록증 발부를 중지할 것 ▲군산시청은 불법하도급을 단속 처벌하고, 군산노동사무소는 원직복직 판결을 즉각 지도·감독 및 사업주를 처벌할 것 등을 요구하며 군산노동사무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다음호에 ③ 기아특수강 계속]

# 단식농성단 13일 해단식

정부 인권법 철화 농성에 지지 잇달아

정부의 인권법 철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벌여온 3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지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도 단식농성단과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I)는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인권법안이 민간단체들과의 협의과정 없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이 결여되고 권한 또한 미약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위원회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스 로마나, 케네디 기념 인권센터, 세계고문방지기구 등 11개 국제인권단체들이 인권활동가들의 농성을 지지하는 연대서명을 보내오기도 했다.

한편 농성 닻새제인 11일 남규선 민기협 총무가 탈수현상을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농성단은 지난 7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해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집회와 홍보활동을 벌이고 ‘인권토론’도 가져왔다. 농성단은 13일 오후 7일째 단식농성을 끝으로 해단식을 갖는다.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발족

전라북도 익산에 민주노총 시지부가 새로 발족했다. 12일 익산시지부는 지난 10일 전북 익산시 국민생활관에서 지부 11개 노조 2,000여명의 조합원으로 지부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익산시지부에는 만도기계노조 익산지부, 원광대병원노조, 의보노조 익산지부, 한국통신노조 익산지부, 서울플랜트노조, 큰길노조 등이 포괄돼 있다. 또 한성공업노조, 전교조 익산시지부 등 3개 노조는 참관단체로 가입했다.

고 조성환 열사 추모비 설립 후원계좌 안내  
전북은행 529-21-0052723

<평화와인권>이 매우 어렵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CBS 노조 무기한 전면파업

6일부터, 생존권 보장 = 부실경영자 문제 요구

CBS 노동조합이 생존권 보장과 부실경영진 문제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CBS 전북방송 조합원들도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전북방송 파업에는 전체 직원 23명 가운데 조합원 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3일 현재 파업 8일째를 맞았다. 파업 노조원들은 투쟁방침논의와 단합대회, 거리에서 시민 홍보 등을 전개하고 있다.

CBS 파업은 파업기간 중 대두되고 있는 CBS 문제들을 <전권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맡기자고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한때 해결의 실마리를 보였다. 그러나, 조합원들로부터 부실경영 책임에 대한 문제 압력을 받고 있는 권호경 사장이 <전권특별위원회> 참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업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염경석·39)는 CBS 파업 사흘째인 8일 파업지시 성명을 내 “권호경 사장과 재단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상임대표 고흥석 외 5명)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도 각각 성명을 내고 “CBS 노조의 파업은 조

합원의 생존권 확보와 CBS가 공정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CBS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CBS 위기는 무리한 대형사옥 건축과 부실경영에 따른 빛이 누적됨에 따라 심화돼 왔다. 또한 전체 직원의 80%가 3년째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

# 환경단체, “먼저 공사 중단하라”

새만금 민간조사위 원칙 제안

새만금간척사업 민간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환경단체들이 주장했다.

<새만금 사업 백지화를 위한 시민위원회>는 “공사가 계속될수록, 예산이 투입될수록 공정한 재평가가 어려워진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동의 활동을 위해 공사 중단이라는 대전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위원회는 민간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또한 “민과 관이 동등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새만금호 수질대책 등에 참여하여 부실한 평가서를 만들어 냈던 전문가를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위원회는 이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수질, 해양환경, 갯벌 생태계, 경제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위원회는 이밖에도 “민관공동조사위원회는 국무총리실에 독립적인 기구로 새롭게 구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이러한 선행과제가 해결된 뒤야 민간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익산시지부의 초대 의장에는 이충언 만도기계노조 익산지부장이, 사무국장에는 오기주 서울플랜트노조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아울러 부의장에는 강승문 한국통신노조 익산지부장, 허영희 의보노조 익산지부 부지부장, 박희순 큰길노조 위원장이 선출됐다.

현재 익산시지부는 서울플랜트노조의 공장이전 문제와 관련한 지역차원의 연대투쟁을 준비중에 있다.

# 제3회 인권학교에 참여하십시오

1. “인권이 뭘까?” ■인권의 정의
2. “인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인권의 역사
3. “인권에는 뭐가 들었을까?” ■인권의 내용
4. “인권이 소중한 여기는 것은?”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5.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권지킴이

◆ 강사 :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 시간 : 5월 6일(목), 7(금), 12(수), 13(목), 14(금) 저녁 7시  
◆ 장소 : 전주 서학동성당 교육관 ◆ 주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인권** **주평** **체벌, 교권의 확립인가? 인권침해인가?**  
 - 윤진영(전주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

학생이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교사가 학교에서 연행되고, 학생이 직접 교사를 폭행하고 그런가 하면 체벌을 당한 학생의 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교사에게 보복 폭행을 가하는 등 최근 들어 선생님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자라 온 기성세대가 볼 때에는 말세가 온 듯한 느낌이다. '필자 또한 사범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맞으면서 살아야 할텐데 왜 선생님이 되려고 하느냐"며 농담을 건넨 적도 있다. 가뜰이나 업적평가, 정년단축, 명예퇴직, 연금기금 고갈우려 등으로 위축된 선생님들의 입지가 최근 더욱 흔들리고 있다. 그 동안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은 학교 교육보다 과외를 더 우월한 것으로 대접받게 했고, 학부모들에게 선생님들은 촛잔나 탐내는 과립치한 정도로 비쳐지게 되었으며, 학교폭력이나 소위 '왕따'문제에 대해서도 학교는 속수무책이었다. 이제 학교와 선생님들은 우리사회에서 대표적인 부패와 무능의 상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교사 이런 정도에 불과한 자들이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때렸으니 온전할 리가 없는 것이다.

이에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과 교권(敎權)이 무너지고 있다고 교육계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저마다 왕자와 공주이기 때문에 집에서조차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반에 사십 명 이상을 데리고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이해해야 하며 과연 말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 단 하루라도 강단에 서보고 말하라는 교육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증적인 조사들에 의하면 대체로 우

리나라 학생들의 4분의 3 이상은 체벌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숙제를 해 오지 않거나 시험성적이 나쁠 때,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거나 지각했을 때 등과 같이 학생의 개인적인 잘못에 대한 체벌이 있고,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등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가해지는 체벌이 있다. 또한 학생 전체의 3분의 2 내지 4분의 3 정도는 체벌에 교사의 감정이 실려 있다고 본다. 손과 발로 마구잡이로 때리기, 슬리퍼를 벗어 때리기, 뺨 때리기, 심지어 몽둥이로 목을 때리는 등 교육적인 체벌로 보기에 용납하기 어렵고 보기에 따라서는 고문에 가까운 폭력이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자 선생님들의 체벌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반발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각 교육청들도 학생체벌 기준과 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로 인해 곤혹을 겪고 있다. 전교조에서도 교사윤리강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과외나 촛잔은 절대적으로 거부하면서도 체벌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정도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체벌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체벌을 놓고 교권, 학습권, 인권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가? 그것은 정말 불가피한 것인가? 체벌도 교육인가? 선생님은 체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세계적으로 볼 때, 체벌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 허용하는 나라도 있다. 물론 허용하더라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제31조 제7항)에 예외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체벌은 일종의 형벌이다. 조선시대의 태장도류사(笞杖徒流死)의 오형(五刑) 중 태형(笞刑)은 원래 교육방편에 순종하지 않는 피교육생에 대한 교육체벌이었다. 따라서 체벌은 학생의 교육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체벌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에 따라 지금처럼 시행령이나 지침이 아닌 법률로 범죄구성의 요건과 체벌기준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은 법적으로 교육자일 뿐만 아니라 사법적(司法的) 권한을 갖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형법상 형벌도 신체에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가정 내에서의 모든 폭력이 범죄로 규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의 체벌은 형벌이 아니며 오히려 폭력이다. 결코 체벌로서 교권이 세워지거나 교육적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체벌을 받는 학생들은 반성과 존경심보다 분노와 적개심을 갖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폭력에 의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는데도 자신을 반성하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사람은 성자 아니면 노예,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폭력에 의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는데도 자신을 반성하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사람은 성자 아니면 노예,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43 호

1999년 4월 20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 SOFA 개정 이뤄질까...

## 홍순영 외교통상장관 개정 촉구

한미 불평등 관계의 법적 집약체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논의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7일 결성 1주년을 맞는 <군산비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의 SOFA 개정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SOFA 개정' 협상테이블 오를까  
 홍순영 외교통상장관은 14일 <한미협회> 초청 강연 연설문에서 "우리는 미국이 사용중인 한국 정부 소유재산 반환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 등 한미간에 미결로 돼 있는 문제들의 조속한 종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문제들이 21세기의 한미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IMF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미국에 대해 종속적인 자세를 보여왔다는 지

적을 받아온 김대중 정부가 홍장관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대미종속관계 개선에 어떤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정부는 지난 96년 9월 실무협상 결렬 이후 중단돼 온 SOFA 개정 협상을 이르면 내달중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SOFA 개정문제는 지난 95년 11월부터 개정협상에 착수했으나 96년 9월 7차 실무협상 결렬까지 별 진전을 보지 못한 사안이다. 또 미국이 용산 미군기지 안의 대사관 직원 숙소 등 전국 7곳 9만여평의 한국 국유시설을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한미간의 해묵은 현안으로 남아 있다. 정부가 국유재산 반환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50년만의 일이다.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요구"  
 문정현 신부는 "주권국가로서 한국이 미국에 종속될 이유가 없고 동등한 한미관계를 위해서 당연한 요구"라며 "시민모임은 SOFA 개정 이외에 환경

피해, 공여지 재산권 문제, 미군범죄 근절, 기지 사용료 징수 등 5대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리하고 중단하라"

민주노총 4-5월 총력투쟁 결의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엄경석·40)는 17일 오후 2시 전주 코야백화점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에 따라 '대정부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갖고 민주노총 4대 요구안 수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급속산업연맹 조성호 본부장 등 산별노조 대표자들은 이날 '구속을 각오하는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구조조정·정리하고 중단 △법정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 민주노총 4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 '디스켓 조작수사' 의혹

울산대채위 사건 조작 거둬 주장  
 '영남위 사건 울산시민 대책위'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디스켓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조작해 사건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울산대책위는 17일 "4월16일 오전 부산고법 제2형사부에서 진행된 '디스켓 검증'에서 사건 총책으로 지목된 박경순씨의 디스켓에 박씨가 구속된 이후의 날짜인 98년 7월과 8월달의 입력 날짜로 되어있는 파일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사건조작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 제3회 인권학교에 참여하십시오

1. ■인권의 정의 : "인권이 뭘까?" - 5월 6일(목)
  2. ■인권의 역사 : "인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 7일(금)
  3. ■인권의 내용 : "인권에는 뭐가 들었을까?" - 12일(수)
  4.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 "인권이 소중한 여기는 것은?" - 13일(목)
  5. ■인권 지킴이 :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14일(금)
- ◆강사 : 배경내 ◆일시 : 전주 서학동성당 교육관 / 저녁 7시  
 ◆주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 “군산은 지금 투쟁중...”

① 군산대 ② 카캐리어 ③ 기아특수강

[편집자주] 군산지역은 지난 1월부터 IMF 이후 무차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정리해고,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탄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험차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개 사업장(군산대노동조합, 정리해고철회를위한기아특수강대책위, 군산지역카캐리어노동조합, 문화텍시노동조합, 대우상용차사무연구직노동조합) 가운데 2개 사업장(문화텍시, 대우상용차)의 문제가 원만히 타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3개 사업장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업장들의 문제가 원지 세 번에 걸쳐 나눠 실는다.

## ③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기아특수강 대책위

(주)기아특수강은 98년 9월 30일 노동자 103명에게 개별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그리고 정리해고 10여일 만에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정리해고는 98년 사측에서 강압적으로 요구한 상여금 반납 서명을 거부하거나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벌여온 노동자들과 기아특수강 민주노동자회 회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곧바로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기아특수강 대책위>를 만들고 “해고 후 10여일만에 신규채용을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사는 해고회피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았다”고 말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대책위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3월 6일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으러 군산노동사무소를 방문했다. 노동자들은 “이달선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반납하기로 노사합의했다’는 근거라며 내용은 ‘단체교섭(노사)합의서’가 1년 전(98년 1월 19일)에 작성된 것인데도 인주가 물어나오고, 노사협의합의서의 서명자와 명단이 서로 다르다”며 ‘단체교섭합의서’가 위조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이달선 근로감독관과 한공석 군산노동사무소장, 그리고 노동자들은 위 두 서류를 봉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사무소측에 보관했다. 그러나 3일 뒤 기아특수강측(인력관리부장 장근선)과 노동조합측(위원장 이정석), 한국노총 군산시 지부장은 군산노동사무소 기물을 파괴하며 봉인된 서류를 요구했다. 이에 노동사무소측은 서류를 내줬고 이후 이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특히 ‘노사협의회의록’은 지난 98년 8월 21일 체

불임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회사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로 ‘단체교섭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노사협의회의록’을 제출한 것은 단체교섭합의서가 애초 존재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항의로 현재 이 사건에 대해 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이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로 천막농성 200일째를 맞은 대책위는 원직복직을 위해 (주)기아특수강의 법정관리인인 산업은행에서 지난 19일부터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회]

## 도내 사회단체 ‘달러의혹’ 규탄성명

### 유지사 ‘현금 12만 달러’ 비축 의혹

‘제2의 조세형 사건’이라고 불리는 ‘김강용 폭로사건’이 사회문제화하면서 유종근 도지사의 달러사건에 대한 도내 사회단체의 성명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의장 염경석)는 지난 17일 “12만달러가 설혹 절도범이 지어낸 말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그동안 유종근 도지사나 정치인들과 도민들 사이에 만들어진 불신의 벽이 얼마나 큰가를 증명해 준다”고 밝히고 “서울사무소 직원사택 명목으로 얻은 건물이 사실상 유종근 도지사의 개인건물처럼 쓰여왔다는 것도 드러났다”며 유지사를 규탄했다.

전주 실업자취업지원센터(소장 문규현)도 19일 성명을 내고 “유지사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국민들에게는 절약과 근검을 내세우고 노동자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협상을 IMF와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정치인들의 축재는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계속해서 “자꾸 반복되는 유종근 도지사측의 발언에서 더욱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며 “유지사는 진실을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지사는 18일과 19일 잇단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거듭 강조했다.

고 조성만 열사 추모비 정립 후원계좌 안내  
전북은행 529-21-0052723 예금주 교홍석

<평화와인권>이 매우 어렵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34인이 7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치며

##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김대중 대통령님.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개나리꽃 활짝 피고 거리를 오가는 젊은이들의 웃차림도 경쾌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우리는 무거운 겨울옷을 걸치며 7일 동안의 단식투쟁을 감행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밀실홍정 끝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인권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던 바로 그 날 이후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되짚으며 단식투쟁을 결심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쏠모으는 국가인권기구의 실현을 바랐던 우리의 노력이 정치인들의 책략에 허망하게도 유린당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분명 자신을 희생하는 투쟁뿐이었습니다.

실망감에 휩싸이면서,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는 대통령께서 그 어려운 선거에 승리하셨던 감동적인 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인권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그 약속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군사정권에 의하여 처참한 고난을 받은 분의 입에서 울려 나왔기에 그저 ‘말’이 아닌 ‘약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인권은 존중되는 사회”는 인권 부재의 어두운 시대를 오랫동안 겪어야 했던 우리 국민에게 바로 희망 그 자체였으며, 인권 피해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인권활동가들에게 새 시대의 예감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의 감동은 환상이었다고. 그 날의 약속은 거짓이었다고. 그 날의 희망은 부질없는 꿈이었다고. 그 날의 예감은 착각이었다고...

국가인권기구 설립논의가 희망의 색깔에서 실망의 색깔로, 실망의 색깔에서 다시 분노의 색깔로 변해온 지난 1년간은 바로 당신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실망으로 변하고 그리고 다시 분노로 변하는 과정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법무부 장관의 온갖 모략과 억지와 고집 속에서 빛어진 이른바 ‘인권법’안이 바로 당신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늠름했던 대통령께서 실은 무기력하고도 무능한 분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 대하여 처음으로 치미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진정 믿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그 허약하고 비효율적인 이른바 ‘국민인권위원회’가 실제로 수많은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진정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 사회를 인권대통령답게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들이 이제 당신을 ‘인권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  
언젠가 당신이 다른 아무 것도 아닌 ‘인권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신은 분명히 ‘인권대통령’으로 남을 자격이 없습니다. 인권개혁의 완강한 결립돌 박상천 법무장관을 두둔하는 당신은 ‘인권대통령’으로 남을 자격이 없으며, 독립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강한 의지가 없는 당신은 ‘인권대통령’으로 남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십시오. 그 약속했던 군사정권 시절의 법무부 장관들과 별반 차별성도 없는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지금이라도 해임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법’안을 누구보다도 먼저 당신 스스로의 손으로 철회하십시오. 그리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인권활동가들로 하여금 당신을 ‘인권대통령’이라고 부르게 해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님.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권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들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인권 피해자들과 함께 숨을 쉽니다. 그 수많은 피해자들은 우리와 함께 숨을 쉽니다.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들은 이 땅의 인권운동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전통에서 힘과 용기를 길어 올립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1999년 4월 13일

명동성당에서 단식투쟁을 마치며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단 일동

# 기 고 왜 국가인권위원회를 두려워하는가?

김승환(전북대법대 교수)

우리가 인권의 관점에서 현 정권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인권유린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인권을 짓밟은 장본인들이 인권을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 결론도 예상했던 대로였다. 김영삼씨는 예외가 아니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인권유린의 상징적 인물들의 적자(嫡子) 행세를 하면서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뜻있는 사람들은 그에게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 법무부·여당 밀실협상 결과

김대중 대통령은 일반의 기대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국민들에게 주는 신선감과 기대감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국정개혁과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집어 넣었다. 그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인 '98년 12월 10일을 기념하여,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근간으로 하는 인권법을 공포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우를 범하고야 말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작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잘못 선정한 것이었다. 법무부는 검사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검찰은 그 동안 우리의 역사에서 국가정보원(구 안기부), 국군기무사(구 보안사) 등과 함께 인권탄압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일제시대에 친일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일제잔재청산 작업을 맡겨서는 안되었던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인권의 수호자라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검사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골격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거기 에다 법무부장관은 과거 흥안검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3월 30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을 의결하였다. 이 인권법안은 인권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하면서,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의 영향력 하에서 설립되고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그 결정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인권침해사건에 관하여는 시정권고권과 의견표명권만을 갖는다.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항도 9가지의 인권침해행위에 불과하다. 과거의문사 진상조사와 같은 작업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인권법안에 나타나는 인권위원회는 구조적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인 셈이다. 인권위원회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독립성과 권한의 실효성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도의 인권법안을 만들면서, 법무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전혀 듣지를 않았다. 그것은 법무부와 여당의 밀실협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한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 인권법안 국제사회가 거부

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서도 안된다. 독립성은 인권위원회의 핵에 속한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실효성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강제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인권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인권침해에는 어떠한 제한이 가해져서도 안된다. 과거의문사는 물론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사건이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어야 한다. 인권위원회의 조사행위에는 시효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인권침해사를 바로 잡을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AI)는 4월 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며, "논란을 빚고 있는 인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시민사회와의 협의에 나서라"는 것이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국가인권기구 자문위원인 브라이언 버드킨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과정은 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인권활동가의 단식농성,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단체의 반대성명 등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을 둘러싼 최근의 반대 움직임을 지켜볼 때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18개 단체 소속 30여명의 젊은 인권운동가들이 단식농성을 벌였다.

## 정부 의도 실력으로 저지해야

우리는 국무회의가 의결한 인권법안이 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인권침해사건을 실효적으로 예방하거나 조사하는 권한을 발동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구로서 활동하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인권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파기하였다. 국회의 심의에 달리 기대할 것도 없다. 어차피 법사위원들 중에는 전직 검사출신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항상 검사들의 눈치를 살피야 하는 국회의원들로서는 법무부의 기도에 강한 반발을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일찍부터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제 우리에게 정부는 의도하는 인권위원회의 구성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일만 남았다. 정부가 말하는 인권위원회의 기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인 인권단체들과도 협력하여 정부의 기도를 저지해야 한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 제 144 호

1999년 4월 27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독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 강압에 꺾인 노동자 생존권

### 정부 총체적 탄압에 지하철파업 막내려

IMF 이후 일관되게 정리하고 위주의 구조조정을 진행해 온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서울 지하철키오의 파업을 시작으로 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한편 26일 오후 7시 30분 현재 지도부가 파업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서울 지하철키오의 전면파업은 8일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 지하철 파업의 원인

지하철 파업의 발단은 지난 98년 10월 행정자치부가 인력감축 위주의 공기업 구조조정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부터다. 행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안은 공기업에 '수익성' 논리만을 도입해 인력감축과 투자축소 등 경미절감만을 추구한 데서 비롯됐다는 비난을 사왔다.

서울 지하철키오는 행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기에 지하철키오의 구조조정은 시민의 안

전과 편익을 우선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부족인력을 증원하고 노후시설을 개선·보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투자재원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런 주장에도 아랑곳않고 기획예산위원회는 98년 12월 예산편성지침에서 서울 지하철공사 노동자 30%에 해당하는 3447명을 감축하고 체력단련비, 학자금보조비, 복리후생비, 연월차수당 등을 삭감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예산 잔액삭감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공사측도 정부의 '방침'을 핑계삼아 99년 1월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복지, 임금에 관한 일체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대상임에도 서울시와 공사는 이를 전면 무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여러 차례 대화를 촉구한 노조의 요구에 '방침'으로 밀어붙여온 서울시와 공사의 무책임한 태도가 급기야 시민

의 '발'을 멈추게 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하나같이 파업의 원인을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며 정부와 공사측의 입장만을 거리낌없이 대변하고 있다. 파업 이후 진행되는 상황까지 허위보도를 일삼았다.

### 노동자 단체행동권 원천봉쇄

여기에 지하철키오 같은 필수공익사업체의 쟁의행위가 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를 받도록 하는 현행 노동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71조) 또한 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처음부터 불법으로 규정해 노동자들의 집단행동권(파업권)을 원천봉쇄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인권하루소식 4월 25일 자.

서울 지하철키오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구속 3명, 체포영장 발부 33명, 직위해제 122명, 고소고발 259명 등 사상초유의 폭압적인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부의 파업파괴 및 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끝까지 항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생존을 담보로 절박하게 벌여온 파업투쟁은 끝내 눈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금속산업연맹이 27일부터 계획한 파업 일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3회 인권학교에 참여하십시오

1. 인권의 정의 : "인권이 뭐까?" - 5월 6일(목)
2. 인권의 역사 : "인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 7일(금)
3. 인권의 내용 : "인권에는 뭐가 들었을까?" - 12일(수)
4.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 "인권이 소중한 여기는 것은?" - 13일(목)
5. 인권 지킴이 활동 :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14일(금)

- ◆ 강사 : 배경내 ◆ 일시 : 전주 서학동성당 교육관 / 저녁 7시
- ◆ 주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3천여명까지 우리찾기 시민모임

## 결성 1주년 기념식

(한미행정협정 전면계정을 위한 투쟁선포식)

5. 8(토) 오후2시 - 미군기지 앞  
문의 : 0654-471-5346

# 폭음·조산 국가배상 불인정

## 배상심의회, 유탄발사한 미군책임 외면

미군이 훈련도중 발사한 유탄 폭발로 미숙아를 출산했다며 기지 주변 마을 주민이 지난해 말 청구한 국가배상이 기각돼 피해당사자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군산 미군은 기지 내 사격장에서 해상을 향해 M-203 유탄발사기로 사격훈련을 하다 유탄 1발을 사격장 언덕 밑에 위치한 여순옥씨(28세·당시 임신 9개월)의 조립식 건물 패널외벽에 오발사해 충격·폭발시키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여씨는 출산 예정일보다 27일 가량 앞선 9월 21일 2.1kg의 쌍둥이 미숙아를 출산했으며 미숙아들은 20여일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생활했다.

여씨는 "사고 당시 굉음과 공포로 인해 병원진찰을 받았지만 이후 계속된 두려움과 공포로 지내오다 사고 10일 후 쌍둥이를 조산하게 됐다"며 남편 김두일씨(36세)와 함께 △재산손실 △휴업배상 △위자료 등 모두 2천4백여만원에 대한 국가배상을 지난해 말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지부배상심의회의는 4월 15일자 '배상결정통지서'를 통해 "미숙아의 출산이 유탄오발로 인한 굉음과 공포에서 발생한 정신적 충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미군측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 심의회는 미군이 발사한 유탄이 폭발해 파손된 건물 피해액 89만여원에 대한 '미군측의 공무상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여씨 부부는 심의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군산미군기지 우리찾기 시민모임>(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은 24일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은 기만적"이라며 이번 결정은 "자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 “지하철파업 정당하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정부 총력투쟁 결의

지난 24일(토) 오후 2시 30분 전주 코야백화점 앞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염경석)는 '대정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현재 진행중인 서울 지하철 파업의 정당함을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정부가 노동운동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결의대회를 통해 "서울대와 명동성당의 농성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전주, 익산, 군

산 등지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노동시간단축만이 현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도높게 주장하였다.

노동자와 학생 등 약 3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호루라기를 불면서 도청 입구까지 행진했다.

## ‘영남위’ 박경순씨 구속증 모친 별세

### 대책위 구속집행정지신청 내기로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 박경순씨의 모친이 26일 별세했다.

<영남위원회 사건 울산시민 대책위>는 "27일 박경순씨와 김이경씨 부부에 대해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허락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경순씨는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돼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고 조상만 열사 추모비 건립 후원계좌 안내  
전북은행 529-21-0052723 예금주 고희석(270-2521)

## 【 행사와 동정 】

- ▶ 고 계훈계 선생 추모식 및 49제 봉행  
4. 30(금) 오후 3시 / 조계사 대웅전
-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전북연대회의 발족식  
5. 4(화) 오전 10시 / 전주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 민간사찰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제3차 공판  
5. 4(화) 오후 2시 /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
- ▶ '군산미군기지 우리찾기 시민모임' 사무실 이전  
군산시 나운동 798-1 소망빌딩4층 / 0654-471-5346 / 전송471-5337

<평화와인권>이 매우 어렵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강파잡을 때 쓰던 폭력 이제는 ...”

# 경찰, 사회단체 활동가 폭행

군산경찰서 조사계 형사들을 비롯한 사복경찰들이 4월 23일(금) 오후 1시께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군산미군기지 우리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시민모임)에서 주최한 군산미군기지 앞 69회 제 금요일집회를 마치고, 여순옥씨(2면 참조) 집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여순옥씨는 미군 작전수행 중 발생한 오발사고로 집이 파손되고 쌍둥이를 조산하는 등 피해를 당한 당사자다.

군산경찰서 조사계 형사들을 비롯한 사복경찰들은 '불법적인 집회를 막기 위해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시민모임이 방문하려던 곳의 도로를 차단하였다. 그러나 시민모임 측에서는 "정리 집회를 마치고 여씨를 위로방문하려 한 것이 집회장소 이탈로 둔갑됐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경찰의 도로차단이 불법이라며 항의하던 과정에서 시민모임 최중수 집행위원장(김제 수류성당 신부)과 전북평화인권연대 오두희 집행위원장이 사복경찰관들의 완력에 의해 깊이 1미터 가량의 시멘트 농수로로 곤두박질치며 부상을 입었다. 최중수 신부는 목이 빠고 인대가 늘어나 현재 병원에 입원했고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허리를 다쳐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복경찰의 폭력에 시민모임은 "강파 잡으려고 만든 무술경찰들이 이제는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있다"며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대표 김진화 신부)은 "성스러운 직분인 가톨릭 사제를 안하무인적으로 폭행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도 "전북지방경찰청은 유명무실한 세금낭비기관 인권보장위원회를 해체하

라"며 강도높게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정의구현사제단은 26일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전북경찰청장을 직접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전북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지난 3월

12일 민간인을 포함한 9명의 인권보장위원을 위촉한바 있다. 전북경찰청 산하기구로 경찰청과 한몫이나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위원회가 사복경찰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번 사건에 대하여 과연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는 모를 일이다. 유명무실한 기구로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선 이번 사건에 대하여 설립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 요약 】 지하철파업 지지 각계 성명서

■ **매장민중교회신교연합회** :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인 정치조직화와 경영참가를 통한 경제민주주의 실현과 노동시간 줄이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실업의 대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임금·단협 안정과 산별교섭권 보장 등을 수용하고 노·사가 균형있는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하라(4. 15).

■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 노동자의 대화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노동현안을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경제문제가 아닌 불순세력에 대한 공안문제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버리지 못한다면 국민의 정부도 그 이전의 정권과 똑같은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4. 19).

■ **가톨릭노동서목전국협의회** :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미 합의된 단체협약 사원조차 파기해버린 지하철공사의 태도에서도 보듯이, 노동자들을 파업과 농성으로 내몰 실질적 장본인은 김대중 정부다(4. 22).

■ **노동자 총파업투쟁을 지지하는 교수 성명서** : 실제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한국의 총체적 모순을 야기시킨 재벌과 보수정체권이다. 우리는 (정부가) 구태의연한 공권력 투입이나 관료단체 등을 동원한 언론 조작을 자제하고, 노동자들의 복음이 걸린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4. 23).

■ **지하철 노조 총파업투쟁을 지지하는 법조인 성명서** : 당국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도 인권을 통해 사상을 조작·왜곡하여 시민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유포하는 것을 반성·중단하고 노동자들을 불법 연행, 구속, 수배하는 등의 조치를 철회하기를 촉구한다(4. 24).

■ **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을 바라는 보건 의료인 성명서** : 서울지하철의 경우 문제의 출발은 기획예산위의 지적에 따른 일방적인 공시주의 단체협약 위반이었으며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정부와 노동조합의 직접 협상으로 풀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폐기하고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사회복지, 고용안정을 지향하는 새로운 개혁의 길로 나서길 진심으로 바란다(4. 26).

인권	<b>피 묻은 만두</b> (고흥서·전북대 교수)
주평	

현대중국을 대표하는 작가 루쉰(1881~1936)의 단편소설 '약'

폐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둔 부모가 있었다. 아버지는 신선한 사람피를 먹으면 폐병이 낫는다는 미신을 믿고 은화 한 꾸러미를 쟁겨 처형장으로 향한다. 새까맣게 물려든 사람들은 막 목이 잘린 짧은 혁명가가 뺨어낸 붉은 피를 만두에 묻히기 위해 난장판을 이룬다.

그 대열에 끼어들지 못한 아버지는 은화 꾸러미를 주고 거간꾼으로부터 선혈 똑똑 돈을 만두를 넘겨받는다. 누구도 혁명가를 동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간수에게도 모반을 충동질했다는 사실을 마음껏 비웃는다.

'빨간 조끼' 지하철 노조원으로 작각·폭행(한겨레 4월 24일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23일 빨간색 등산용 조끼를 입은 승객을 지하철 노조원으로 착각해 폭력을 휘두른 강 아무개(46·상업·서울 창천동)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22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중구 황학동 2호선 신당 지하철 역 승강장에서 빨간색 등산용 조끼를 입은 강 아무개(42·노점상·서울 상도동)씨를 노조원으로 잘못 알고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며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혐의다.

강씨는 경찰에서 "지하철이 늦게 도착해 짜증이 나있는 상태에서 실수를 했다"며 머쓱해했다.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교수 성명에 욕설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과 함께 한겨레신문에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교수들의 성명서가 나온 4월 23일 오후, 나이가 들어보이는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다.

"존경하는 고 교수님의 이름을 신문에서 보았다"는 첫말이 듣기에 별로 나쁘지 않아서, 내심 격려의 전화이려니 기대하였더니 웬걸 "교수가 연구나

조금만 자신의 모습과 대면해 보면

우리는 ...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 노동자를 격려해야 할 서민이다.

열심히 할 것이지 노동자 편이나 들고 있느냐며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었다.

"지하철 노조가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자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파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파업의 불가피성을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하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네 할 일이나 잘 해라"며 '존경' 운운하며 전전긍긍던 처음의 태도에서 "야! xx할 놈아, 들어가 x새끼야!"로 끝내 익명의 야비한 본색을 드러내고 욕설로 전화를 끊었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과 대면하라

정부는 많은 노동자를 정리해고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경제를 밑바닥으로 몰아간 정치권과 재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작년 한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자는 생존권을 내어 준 반면에 정부는 최소한의 합의사항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것을 보더라도 현 정부가 노동자 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정부와 언론은 '불

법파업'을 일방적으로 부각하고, 시민 발을 묶는 불편을 강조하며 파업 노동자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소위 국민의 정부가 '전원 면직' '노조 지도부 66명 조속 체포' '노조원이 파업 농성 중인 서울대와 명동성당에 경찰 투입' 등 살벌한 용어를 구사하며, 대화와 협상을 포기하고 오로지 군사독재정권의 유물인 공권력만으로 지하철 노조 파업을 진압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하니 한 곳으로 쏠린 정보가 현혹되어 빨간 조끼를 입은 사람의 멱살이라도

잡아야, 파업을 지지하는 교수에게 욕설이라도 퍼부어야 직성이 풀리는 충동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아이엠에프 체제와 더불어 추락한 삶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들이 그런 충동적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자신의 모습과 대면해 보면, 우리는 도둑의 입방아에 돌아다니는 교위 관료도, 주가를 조작하여 지철 줄 모르는 사육을 채우는 재벌도, 초록이 동색이라고 비리정치인을 감싸는 금배지 국회의원도 아닌,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 노동자를 격려해야 할 서민이다. '국민의 발을 묶는 불편'을 내세우며 파업 노동자를 몰아세우는 자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 서민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언젠가 신문에 서평으로 나왔던 내용으로, 작가 루쉰의 단편소설 '약' 앞부분의 줄거리이다. 혁명을 외치다 참수 당한 젊은이와, 그의 죽음을 조롱하는 흐리멍덩한 눈빛의 대중들, 루쉰은 이 짧은 작품을 통해 동시대인들에게 "자신의 추악한 모습과 대면하라"고 절규했다. 지하철 파업 사태를 두고 되새겨 볼 구절이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45 호  
1999년 5월 4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전화) 0652-231-9331 ·팩스) 0652-231-9332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E-mail : onespark@kor.inp.or.kr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국보법 폐지 연대회의 발족**  
전북 15개 사회단체 4일부터 본격 활동

"국가보안법을 두고 새 천년을 맞을 수 없다".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이 김대중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대할 수 없다며 법 폐지 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시민운동연합, 청년진보당 전주완산구 지구당 등 전북지역의 15개 사회단체들은 4일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전북 연대회의>(연대회의·상임대표 리수현, 한상열, 김승환) 활동을 시작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국가보안법을 두고 새 천년을 맞을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국가보안법은 식민통치를 위해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고 "단어 몇 개 고치고 표현 몇 자 손보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기만적인 국가보안법 부분수정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발족하기에 앞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199인 선언' 명단을 공개하고, 국가보안법을 2000년도 까지 가져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1999인 선언'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주마다 목요일에 시민을 상대로 법 철폐를 주장하는 캠페인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집회장에 007 등장**  
비디오카메라 뺏기고 도주

구멍을 뚫은 가방에 비디오카메라를 넣고 몰래 시민단체의 집회현장을 촬영하던 과한이 비디오카메라와 태입을 압수당한 뒤 달아났다. 또 이 과한들이 국가정보원(옛 안기부) 소속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에

**제3회 인권학교에 참여하십시오**

1. 인권의 정의 : "인권이 뭘까?" - 5월 6일(목)
2. 인권의 역사 : "인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 7일(금)
3. 인권의 내용 : "인권에는 뭐가 들었을까?" - 12일(수)
4.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 "인권이 소중한 이유는?" - 13일(목)
5. 인권 지킴이 활동 :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14일(금)

◆ 강사 : 배경내 ◆ 일시 : 전주 서학동성당 교육관 / 저녁 7시  
◆ 주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따르면, 지난 달 30일 군산 미군기지 앞 금요일집회에서 너비 30×40cm에 두께 15cm 가량의 갈색 가죽가방을 들고 어슬렁거리던 40-50대 남자 두 명이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모임 회원에게 붙잡혀 비디오카메라와 태입을 압수당한 뒤 달아났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시민모임 회원들이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다 "당신들 안기부원이지?"라고 묻자 갑자기 집회장 밖으로 달려나가 지나던 소형트럭을 세워 타고 달아났다. 또 나머지 한 명은 신분확인을 계속 거부하다 자리를 떴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신분확인을 놓고 과한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기지 앞 사는 한 주민이 '이 사람들 신분 밝혀지면 당신들만 다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 과한들이 국가정보원 소속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주시민회 <언론학교>**

전주시민회(공동대표 송기도·이광철)가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주제로 4일부터 28일까지 주마다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에 언론학교를 연다. 7일 주제는 "뉴미디어 시대의 신문제작론"(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231-9286.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결성 1주년 기념식**  
(한미행정협정 전면계정을 위한 투쟁선포식)  
5. 8(토) 오후 2시 - 미군기지 앞  
문의 : 0654-471-5346



#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위를

## 공추위, 70개 단체로 확대 개편

올바른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지가 더욱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로 이름을 바꿨다. 이와함께 참가단체도 공추위의 32개 단체에서 70개 단체로 크게 늘었다.

공추위는 지난달 29일 종로성당에서 '공추위 확대개편대회'를 갖고, 최영도(민변), 신혜수(한국여성단체연합), 성유보(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7명을 상임공동대표로 하는 공대위를 출범시켰다.

공대위는 법무부안을 기초로 한 정부의 인권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된 점에 주목해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당면 목표로 삼아 활동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국제 연대를 통한 정치적 압박과 집중적인 정치적 로비 활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공대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인권유린의 주범들이 밀실에서 '인권법' 안을 만들어냈다"며 "반인권주의자의 본색을 드러낸 박상천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소리높여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출범 직후 참가단체들은 종로성당에서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정부 인권법안 국회통과 지지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 "유지사 도민에게 사과해야"

## 민주노총 전북본부 성명서 발표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염경석·39)는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민들은 '정치음모론'을 핑계대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호도하려는 유지사에게 질타하고 있다"며 "유지사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도민을 기만하는 신자유주의자 유지사는 정리해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라는 집회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민심'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유지사에게 △김강릉 절도사건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힐 것 △공공건물을 사택처럼 사용해 온 사실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할 것 △진실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사택집기 정리와 매각 문제를 현장검증 실시 이후로 미룰 것 △진실이 모두 밝혀진 뒤 정상적 절차를 거쳐 사택을 정리하고 그 진실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질 것 등을 요구했다.

# 노동자 출신 양심수 최호경 <석방추진위원회> 결성된다

지난 92년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연루돼 올해로 7년째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수 최호경씨(41·수번 2150) 석방을 위해 <최호경 석방 추진위원회〉(추진위·공동대표 김승훈, 이영숙, 이해학)가 뒀다. 추진위는 6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호경씨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80년대 중반 성남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했고, 92년 9월 12일 구속 당시에는 민중당 성남지구당에서 일했다. 최씨는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구속됐는데, 이 사건은 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간첩 이선실'이 관련된 대규모 조직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최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 구속자들은 지난해 8·15 특사 당시 모두 석방됐으나 최씨만은 준법서약을 거부해 석방에서 제외됐고, 올 2·25 특사 때도 무기징역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됐을 뿐 다른 양심수들처럼 석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한편 최씨에게는 76세의 노모와 처 황선희씨(39·미싱사),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짜리 아들 민혁이 있다.

고 조영만 열사 추모비 건립 후원계좌 안내  
전북은행 529-21-0052723 예금주 고희석(270-2521)

## 【 행사와 동정 】

- ▶ 최호경 석방 추진위원회 출범식  
5. 6(목) 오후 6시 30분 / 전진상 교육관 강당 / 최호경석방추진위원회 (02-2265-7940)
-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캠페인  
5. 6(목) 오후 5시 30분 / 전주 코아백화점 앞
-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익산연대회의 발족식  
5. 8(토) 오후 2시 / 익산역 광장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단체교섭합의서' 위조 사실상 증명 기아특수강 체불임금 청구소송 승소

지난달 28일 기아특수강 해고노동자 1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상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체불상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기아특수강은 지난 97년부터 98년 두 해 동안 상여금 800%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상여금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우리의 결의>라는 문서를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서명받으려는 형식으로 회사에 반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항의한 노동자 16명은 지난 98년 10월 회사를 상대로 체불상여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로 상여금 800%가 명백한 체불임금으로 판정됨에 따라 <우리의 결의>에 서명받았던 노동자들도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소송자들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으러 군산노동사무소에 갔을 때 노동사무소측은 회사측이 제시하는 인수도 채 따르지 않은 단체교섭합의서를 제시하며 체불임금확인서를 떼주지 않고 회사측 주장을 감쌌고 이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군산시협 조직부장 최재석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해 현재까지 구속돼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제시한 '단체교섭합의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단체교섭합의서가 위조문서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노동자들의 주장이 인정을 받게 된 셈이다. 회사측은 당초 '노사협의회의록'만을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냈으나, <편파노동행정 책임자 처벌과 폭력경찰 규탄을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상임대표 문정현·비대위)측이 이른바 '단체교섭합의서'를 증거로 채택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회사가 제출한 것이다.

한편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문서위조와 관련해 당시 군산노동사

무소 근로감독과장이었던 이달선을 비롯한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모든 진위여부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3일 현재까지 △편파노동행정 관련 이달선 근로감독관 파면·구속 △군산지역 카 캐리어노동조합 등 3개 사업장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군산노동사무소 앞에서 43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CBS 노조 '사장퇴진' 요구

지난달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장기간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방송노조에게

회사가 지난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쟁의대책위' 위원 전원인 21명을 면직하고 1명은 감봉3개월을 통보했다. 면직된 쟁의대책위원은 전체 조합원 249명의 10%에 가까운 숫자다.

노조는 회사의 이번 조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부당하고 무효 확인 소송을 비롯한 법적인 투쟁은 물론 언론 대하살을 규탄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CBS는 98, 99년 임금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조합원 83%의 지지로 지난 4월 6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으며, 이열법 노조위원장과 박호진 사무국장은 지난 4월 30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다.

한편 노조는 28일 저녁 쟁의대책위 회의를 갖고 새롭게 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해 노조 체계를 비상대책위(위원장 문영기)로 전환했다. 그러나 조합원 22명에 대한 회사의 중징계는 비대위가 보다 '양보한' 협상안을 내놓은 지 하루만에 이뤄진 것이다.

#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악안 국회 통과

지난 달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이 일시천리로 이날 밤에 본회의까지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실업대책추진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고희석 의 5명)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현행 집시법이 '선고제'안에도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용되어 이 또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던 터에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거꾸로 경찰의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그나마 이뤄놓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갑대중 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앞으로 개악된 집시법 어거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안을 보면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경우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범정부 단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광범위하게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질서유지선을 관할 경찰서청의 판단에 따른 통고사항으로 바꿔놓았고(제12조),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을 이탈하거나 넘어설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제21조)까지 신설했다.

인권  
주평

# '유예된 행복' - 청소년기의 운명인가

이재천(전주시의회 의원)

나는 한때, '과연 인간은 존엄한가?' 라는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것을 '화두'라고 말하지 싶다. 존엄한 인간이 이승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삶의 한 순간 한 순간에 과연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어떻게 부합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천착의 날들이었던 것 같다.

그 때 나 스스로 내린 대답은 '결코 아니야', 그것이였다. 행복과 가족의 평안을 느끼지 않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다.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삶은 존엄함을

추구하는 삶과 거리가 멀지 않겠는가. 아이면 아이의 때, 학생이면 학생의 때, 그리고 주체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꾸릴 수 있게 되는 청장년의 때, 또한 숨을 발 끝까지 내려 삶의 희노애락에 더 이상 호흡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도 있을 노년의 때 등 인생의 때에 맞는 고유의 삶의 기쁨이 분명 있을진대 그것을 거의 놓치고 사는 것 같았다.

물질과 권력과 안일에 대한 선호가 큰 우리나라의 사회풍토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설정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참분주하게 산다. 특히 거기에 제대로 희생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기의 삶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장년기의 행복을 위하여 제물처럼 마련된 것이 인생에서 청소년 세대라는 생각을 우리 사회 속에서 아무리 해도 접을 수가 없다.

어린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을 보라. 아이들은 과연 기쁨 속에 성장하는가. 나이에 맞는 천진무구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사회와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며 화업의 책임과 청소년기의 꿈을 누리고 산다는 안정된 의식을 지닌 청소년들이 얼마

나 될까.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남을 배려해주며 공동체의식이 갖추어진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얼마나 될까.

반면에 우리 사회, 교육 환경 어느 구석에 아이들을 그 나이에 맞는 온전한 인격으로 대우해주는 구석이 있다.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철학이라는 것은

### 미래의 뭔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 교육 속에서 기(氣)와 의식과 욕구를 묶어둔 청소년들을 나는 '유예인간'이라고 부르고 싶다.

뭐든지 아주 잘해야 그나마 미래에 인간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모든 시대를 통털어 유례없는 관심과 보호를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이 느끼는 자족과 기쁨보다는 요구불만이 더 느껴져 오는 것을 그저 청소년기의 특성이라고만 이해해야 하나...

어떤 나이드신 분이 노인학교를 제외하고는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임어인간'이라고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들었다. 한편, 미래의 뭔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 교육 속에서 기(氣)와 의식과 욕구를 묶어둔 청소년들을 나는 '유예인간'이라고 부르고 싶다.

작년, 여름이 뜨겁게 시작되는 무렵에 내가 참여하는 단체인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와 '전주시 원산 청소년 수련실'은 '함께 만드는 청소년 문화제'를 공동 기획, 제 1회 행사를 주최했다.

청소년들의 제 나이의 인격과 존재에 맞는 욕구와 행위에 대한 기성세대의 무관심과 몰이해와 배척은 소위 '청소년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세대간의 골을 더욱 깊게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교육단체와 청소년 수련실이 연

대한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아이들의 바람과 불만을 '문화'의 이름으로 꾸며보았다.

청소년 문화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토론으로 시작해서 풍물, 합주, 수화, 록과 재즈 댄스의 열기로 끝을 냈다. 그 사이에 심리극 한 토막이 그 자리의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었다.

핑크 머리를 하고 짙어진 바지를 입은 남학생과 머리를 색색으로 물들인 여학생이 학교에

서 쫓겨난 자기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재연했다. 거기에서 배우가 있었다면 교사의 역할을 한 또 다른 남학생이었다. 교사와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심란한 이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분명한 소리와 행동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들의 내면의 능력이었다. 그 문화제의 제목은 '공부만 하고는 못 살아!'였다.

이제 제 2회 '함께 만드는 청소년 문화제'가 곧 열린다. 올해의 주제는 '내가 꿈꾸는 학교'이다. 청소년들은 시간의 거의 모든 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며 가족보다도 교사와 동료들, 학교 환경의 영향을 더욱 깊게 받는다. 아이들의 학교가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고,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학교의 마

음트기를 시도해본 것이다. 불투명한 행복을 위해 타율적으로 시간과 정력을 투자해야 하는 그런 '행복유예기간'이 아닌, 지금, 어리고 젊은 나의 바람과 의지로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런 행복한 청소년의 때를 아이들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46 호

1999년 5월 11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원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 병원인력감축 - 환자만 봉!

### 도내 보건의료 노조 일제히 파업 예고

병원에서 간호사가 직접 입원환자를 돌보는 시간은 하루평균 37분. 입원환자 가족들은 입원비 가운데 절반 이상을 <환자관리비용>으로 지출하면서도 하루평균 16시간을 환자를 돌보는 데 매달려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와 병원은 사람을 더 줄이자고 한다.

이 때문에 병원비리 근절 등 보건의료 개혁을 줄곧 요구해온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최후 수단을 선택하고 있다.

### 인력감축 부작용 환자전가

전북대병원 노동조합이 오는 14일 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남원의료원 노조가 19일, 예수병원 노조는 20일로 파

업 일정을 잡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병원들은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현재 종합병원들은 국립대병원은 교육부가, 지방공사의료원은 행정자치부가, 그리고 이들 전체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등 3개 정부 부서가 분할 관리하는 상태다. IMF 이후로 각 부서가 병원들에게 지시한 일괄적인 구조조정안의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인건비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녹색연합과 경실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4월 6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인력·의료서비스 실태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공동으로 조사하여 지난 3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에 따르면 병원의 인력부족은 의료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인력부족으로 98년 한해 동안 16개 병원에서 171건의 검사착오,

17개 병원에서 145건의 환자 낙상사고, 13개 병원에서 88건의 투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조정반대 △국민건강 지키내는 병원인력 확보 △돈벌이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병원경영 및 의료제도를 개혁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

### '국민건강권 위해 싸울터'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전북대병원의 노조위원장 박영신씨는 "정차 구조조정이 필요한 곳은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값비싼 의료장비 △의약품·의료장비 구입비리 △환자 부담을 증가 △병원 수익을 재단이 끌어가 병원과는 무관한 곳에 투자하는 것 △경영능력이 없는 교수나 정부·재단과 견 인사, 친인척 병원 경영 등 부실경영 등"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노동자와 환자를 불모로 삼아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구조조정은 안된다"고 말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는 오는 12일 전북대병원 1층 로비에서 '도민의 건강권 수호와 의료서비스 향상, 병원의료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인권학교 아직 열려있습니다.

- 3. 인권의 내용 : "인권에는 뭐가 들었을까?" - 12(수)
- 4.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 "인권이 소중히 여기는 것" - 13(목)
- 5. 인권 지킴이 활동 :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14(금)

- ◆ 감사 : 배경내 ◆ 일시 : 전주 서학동성당 교육관 / 저녁 7시
- ◆ 수강료 : 각 3천원
- ◆ 주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민중생존권 생취! 사회개혁!

IMF 반대

## 99년 1차 민중대회

5. 15(토) 오후2시  
전주 코야백화점 앞

# 군산 우리땅찾기 1주년

## SOFA 개정투쟁 벌이기로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이 결성 1주년을 맞았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5월 7일 전북지역 시민·노동·통일운동단체 등 15개 단체가 참여해 △공여지 해제 △환경피해 감시 △미군범죄 대응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시민모임은 8일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소속단체와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결산하는 기념집회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시민모임은 △미군범죄 근절 △임대계약 체결과 임대료 지불 등 지금까지의 4가지 요구사항 뿐 아니라 이른바 한미행정협정(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달 23일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5월 한달 동안 먼저 한미행정협정 개정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는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도 기념사를 통해 "1년 안에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자"며 "활주로 사용료 인상안 반대 운동이 '우리땅 찾기' 운동이 됐듯이 국민의 힘이 협정 개정에 쏠리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4면 : 상임대표 인터뷰 참조)

# “구조조정 반대 민중연대”

## 99년 1차 민중대회 15일 열려

오는 15일(토) 오후 2시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개혁! IMF반대 99년 1차 민중대회'가 열린다.

대회준비측은 "민중운동진영의 총집결과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통하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중단시키고 감대중정권을 규탄한다"는 데에 이번 민중대회의 기초를 두고 있다.

99년 1차 전북지역 민중대회는 상반기 노동자·농민·빈민들의 투쟁을 한데 모으고, 감대중정권의 99년 정책에 대한 평가의 장이라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민중대회 준비측은 이번 민중대회를 통하여 상설공동투쟁체로의 발전도 모색하고 있다. 준비측은 이번 대회에 학생·노동자·농민 등 전북지역의 상당수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기독교방송 노조〉 파업철회

## 노사 개혁특위 구성 등 합의

21명 대량해고 사태를 빚은 CBS 노조 파업이 10일 노사가 '노사 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9개항에 합의함으로써 33일만에 끝났다.

CBS 노사는 '노사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개월 안에 공회회 등을 통한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또한 △회사는 부채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이번 파업과 관련한 노조원 징계를 최소화한다 △노조는 파업과 관련한 민형사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이밖에 △97·98년 체불임금 협상은 99년 임금협상과 동시에 한다 △노사는 98년 노사합의안을 존중한다는 등의 내용에도 합의했다. 98년 노사합의안은 '더 이상의 정리해고는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BS는 이에 따라 10일 오전 9시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교조성발행사 추모비 건립 후월계좌 안내  
전북은행 529-21-0052723 예금주 고희석(270-2521)

### 【 행사와 동정 】

-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목요 집회  
5. 13(목) 오후 5시 30분 / 전주 코아백화점 앞
- ▶ 조성만 열사 제11주기 추모미사  
5. 14(목) 오후 7시 / 전주 서화동성당
- ▶ 함께 만드는 청소년 문화제 "우리가 꿈꾸는 학교"  
5. 15(토) 오후 2시-5시 / 전주시립 완산 청소년 수련실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구청 총무과 이×× 주사다” 경찰, 관명사칭 정보사찰

전북 경찰이 구청 직원을 사칭해 민간 사회단체의 동향을 파악하려다 들뜸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관명을 사칭한 사찰행위는, 경찰이 민간인과 민간단체에 대한 인물 및 단체 존안카드를 작성·보관하는 등 정치사찰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특히 〈전북평화와인권연대〉를 비롯한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가 정치사찰과 관련해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보란 듯이 발생한 사건이어서 더욱 놀라움을 주고 있다.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전북 연대회의(연대회의·상임대표 리수현 신부, 한상열 목사, 김승환 교수)에 따르면, 발족식을 하루 앞둔 3일 오후 〈연대회의〉 참여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전주중부경찰서 정보과 소속 이준섭 형사가 〈연대회의〉 출범과 관련한 동향을 묻는 전화를 걸어왔다. 이 형사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대신 전주시 완산구청 총무과 이 주사라고 자신을 거짓으로 소개하면서 "연대회의 발족식에 몇 명이나 참가하느냐?" "누가 모이느냐?"와 같은 질문을 집요하게 던져왔다. 이 형사는 "구청

에서 왜 그런 것을 알고 싶어하느냐?"는 물음에 단지 "옛분이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6일 완산구청을 찾아가 사회단체 동향파악에 대해 따졌으나 이 형사가 구청 직원을 사칭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냈다. 〈연대회의〉는 경찰에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 〈영남위 사건〉 검찰 뒤늦게 공소변경

10일로 예정됐던 '영남위'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각각 12일과 17일로 연기됐다.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로 검찰이 제출한 디스켓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선고를 이를 앞둔 8일 검찰이 공소 내용을 '한국가단체'에서 '이적단체'로 한 단계 낮춰 재판부에 냈기 때문이다. '한국가단체 구성' 혐의가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지 않을 것에 대비한 교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영남위 사건 울산시민대책위원회〉는 "증거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하자 성급히 공소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며 "이는 '영남위' 사건이 명백한 조작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밖에 △영남위 사건 구속자 전원 석방 △경찰·검찰 등 사건 조작 관련자와 책임자 처벌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전원 석방 △보안수사대 즉각 해체 등을 요구했다.

# 서진청 회원 6명 구속

경찰청 보안국은 서울진보청년회가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목표로 경인지역 일대에서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하고, 불법집회·시위에 가담해왔다'며 회장 김수자(28·성균관대 수학과)씨 등 6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 등으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구속송치했다.

### 근로감독관, 농성장에 음주운전 질주 노동자들 편파행정 항의 단식농성

군산노동사무소의 '사측 편들기' 편파행정과 기아특수감의 '단체교섭협의서' 조작 등 군산지역 3개 사업장(군산대소비조합식당, 군산지역카게리어노동조합, 기아특수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군산노동사무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편파노동행정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북지역 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문정현·비대위)'가 지난 6일 농성 46일째를 맞으며 김정석(군산지역카게리어노조) 등 6명의 노동자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광주지방법노동청이 군산노동사무소의 편파행정과 3개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노동자들도 성실히 조사에 응했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적반하장으로 군산노동사무소 공현철 근로감독관이 대낮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로 천막농성장으로 질주·위협하고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김흥중(비대위 사무국장)씨 등 농성자 3명에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며 "생존을 걸고 하루하루 힘겹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노동부 공무원의 모습은 노동자들을 더욱 절망케 한다"며 분노했다. 비대위는 △편파노동행정 책임자 한공서 군산노동사무소장, 근로감독관 이달선·공현철 파면 △대일대호 불류 약질사업주 이상열 구속 △기아특수감 약질사업주 전전기 구속·부당해고자 원직복직 △군산대학교 부당해고 식당종사자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11일 현재 단식농성 6일째를 맞고 있다.

자료

#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1주년 선언문

군산은 지금까지 반외세 항쟁의 역사를 지켜온 자랑스런 도시이다. 당나라의 침략을 맞아 당당히 싸운 오성장군, 최무선장군과 민중들이 왜구와 맞서 승리를 거둔 진포대첩, 일제시대에는 전북 최초의 3·1 만세 운동과 노동연대를 주도한 우리 지역 민중들의 투쟁은 군산을 반외세 자주화투쟁의 성전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자랑스런 투쟁의 전통을 이어받아 미군들의 만행과 오만함에 맞서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을 결성한 지 1년의 시간이 지났다. 민항사용료 인상안 철회운동의 성과를 이어 미군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 미군범죄, 소음피해 등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모임은 시민의 힘과 민족자존의 목소리를 모아 지금까지 70여 차례의 금요집회를 진행하였다.

민족자주권 회복과 군산미군기지를 우리땅으로 찾아야 한다는 일념 아래 뜻과 행동을 같이 했던 시민의 힘이 있었기에 기지 주변의 소음피해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동안 중단되었던 한미행정협정 개정 논의를 우리 정부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민족자주권 회복은 우리 가까이 있지 않다. 민족자주권 회복의 최대 걸림돌 바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 전면 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전역미사일(TMD) 배치 계획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조성, 한반도 주변국의 미사일 개발 경쟁을 유발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담보로 자국의 무기 수출로 인한 이익만을 추구하고 우리 정부에게는 240억달러의 막대한 비용 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오늘로 결성 1주년을 맞는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은 5월을 한미행정협정 개정의 달로 선언하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과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총집중하여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강물을 이루고 도도한 바다가 되어 세상의 중심이 되듯이 작은 힘으로 시작한 시민모임은 이제 군산시민과 온 국민이 참여하고 지지하는 운동으로 우리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여 우리의 땅을 되찾고 더 나아가 민족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땅을 되찾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요구한다.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하라!
- 임대계약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라!
- 범죄집단 주한미군 미군범죄 근절하라!
- 환경오염 중단하고 소음피해 해결하라!
- 임의적 공여시설정 공여지를 해제하라!

1999년 5월 8일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인터뷰>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1] 투쟁 1년을 맞은 소감은?

- 한 가지를 1년 동안 꾸준히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성과가 있다. 금요집회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가 됐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미군기지 정문에 와 있다는 구체적 행위 하나가 동지를 모았다. 배부른 사람은 안된다. 없는 사람들이 한미행정협정도 개정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든다.

[2]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 미군이 물론 물러나야 하지만, 협정을 개정하면 이 싸움에 국민의 힘이 쓸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모여서 투쟁한 결과 활주로 사용료 인상안을 물리치는 성과를 냈었다. 그것이 우리땅찾기 운동으로 된 것이 아닌가. 협정을 개정하면 국민의 힘이 실려 미군 철수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알려달라.

- 아직 밝힐 수 없다.

[4] <평화와인권>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우리가 집회하는 미군기지 정문은 공개된 장소다. 꼭 한번씩 참가해 연대를 표현해 달라. 6.29에 화이트칼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지만 민주화라는 대명제에서 연대되어 어느 기회에 큰 힘이 됐다. 매주 금요 집회를 잊지 않고 기억만이라도 해 달라. 어떤 기회에는 그것이 힘이 될 것이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47 호

1999년 5월 18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전화) 0652-231-9331 ·팩스) 0652-231-9332  
·통신ID) onespark(천.나.독.두.넷.진.보.넷) ·E-mail : onespark@kor.inp.or.kr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가 광주청 '희신' 기만적 - 농성투쟁 장기화

군산 부당노동행위 사업장과 군산노동사무소의 판과행정 진정사건에 대한 광주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가 또다시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6일자로 시행한 '민원처리결과희신'이라는 문건에서 광주지방노동청은 "(기아특수강의) 단체교섭합의서 위조문제는 군산경찰서에 고소가 된 사항"이라며 노동자들의 위조주장을 비켜가면서도 "노사협의를 통하여 합의된 사실을 성문화시킨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부 행정해석"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위조 여부가 판가름나지 않은 단체교섭합의서가 '노사협의'를 통하여 이미 성문화한 합의된 사실'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해고노동자 1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상여금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단체교섭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승소한 바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군산대 소비조합 부당해고와 관련한 진정에 대해서도 "군산대 소비조합과 제일제당(주) 측이 역무 제공 계약을 하면서 전원 고용승계를 보장했다"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사정이 그러한데도) 식당조리원들이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온당

치 않다"며 자못 친절할 훈계(?)까지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주지방노동청의 주장 또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군산대 소비조합 노조위원장 김연태씨는 "제일제당은 오직 '일만 보장하겠다'는 것일 뿐 임금, 퇴직금정산, 노동조합 문제 등을 포괄하는 고용승계는 전혀 합의된 바 없다"며 "오히려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철저히 기만당했다"고 말했다.

결국 광주청의 '희신'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에 불을 당기는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왕에 판과행정을 규탄하며 장기적인 천막농성과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속았다'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노동자들과 이들과 지지·연대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은 단식농성투쟁을 비롯한 더욱 강도높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 정부 구조조정안 철폐 전북대병원·남원의료원

환자만 붓으로 하는 인력감축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병원노동자들이

구조조정안을 무력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파업의 막을 내렸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북대병원 노동조합(위원장 박영신)은 지난 14일 조합원 400여명이 참석한 총파업 하루만에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철폐시켰다.

협상안에 따르면 애초 정부방침을 내세워 123명을 감원시키려 했던 병원측은 이를 철회하고 앞으로 '적정인력 확보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간호조무사 9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장비와 약품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 노조측 1인이 참관함으로써 노조의 경영참가에 발판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지방공사의료원인 남원의료원도 그동안 말린 체불임금 지급과 정부에 산지침에 따라 없애기로 한 체력수당·연월차수당 등을 다시 정상화하기로 하고, 약품과 장비 심의위원회에 노조측 1인 참석, 징계위원회에 노사동수 참석 등 노조측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 사무차장 장해정씨는 "이번 싸움이 '인력확보'까지 이루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대부분 철폐시킨 것"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병원노동자들은 병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확보와 의료개혁에 중점을 두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원측이 임금삭감과 조합원 가입범위 제한안으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꾀하고 있는 예수병원노동조합은 현재 20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임금 7.3%인상 △연봉제·성과급제 반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병원측과 교섭중이다.

힘들고 지친 어깨를 서로 보듬고 어제 다시 한번 큰 싸움을 위해  
**승리의 확산, 노동자 문화 한마당**  
 ■ 5. 21(금) 오후 6시 ■ 군산노동사무소 주차장

# 생존권 쟁취! 민중연대

## 99년 1차 전북지역 민중대회

지난 15일 오후 2시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개혁! IMF반대 민중대회'가 열렸다.

전북지역의 노동자, 농민, 학생, 실업자, 여성 등 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뤄진 1차 민중대회는 계속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연대의 장을 마련하고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적 정책에 대한 감도높은 비판의 자리가 되었다.

이날 전북지역의 농민을 대표한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이선형 사무처장은 "IMF 이후 쌀 생산비가 19.5%가 인상되었는데 수매가는 5% 인상에 그쳐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김대중 정권에게도 배신당했다"며 농가부채 해결 및 기만적인 수매가 결정에 대한 반대 투쟁을 결의했다.

이어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염경석 본부장은 "지하철, 급속, 병원 노조의 투쟁 등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부분 투쟁이 아닌, 노동자·농민·청년학생들의 연대투쟁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염본부장은 또 "민약 노동자·농민 등 민중의 요구사항이 김대중 정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한 투쟁의지를 보이며 "6월 중순 2차 민중대회까지 지속적인 민중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각계 부문별 결의 시간에서 학생을 대표한 전북학생협의회(의장 양준화)는 국립대학 민영화 반대 및 교육재정 확보를, 여성계를 대표한 전북여성단체연합(상임의장 이강실)은 IMF 하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실업가정의 문제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존재하는 여성차별 문제를 지적했으며, 민간실업자운동을 대표해서 이희운 목사(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장)는 실업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연봉제 철폐 △원칙에 입각한 협동조합 개혁 및 농가부채해결과 농축산물 가격보장 △철거민 주거권 및 노점상 합법화를 통한 빈민생존권 보장 △실업대책 마련과 사회안전망 확충 △공기업 해외매각 중단 및 공익성 유지 △한미·한일 투자협정 반대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 △성차별적 고용조정, 비정규직 차별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및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본대회를 마치고 현재 쟁의사업장인 현대자동차서비스를 항의방문해 노동조합의 파업투쟁 탄압과 판매소사장제(일명 달러제. 하나의 영업소를 독립시켜 영업소장을 소사장으로 임명하여 책임을 할당하는 제도)의 기만적인 도입에 대해 규탄하고 전북도청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한편 이날은 실업자들도 상당수 참석했다.

## '영남위' 선고, 이적단체 혐의 적용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지난 12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경순씨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6명 모두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사건관련자 15명 가운데 6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이날 재판에서 김병호씨는 징역 4년(1심 징역 5년), 방석수씨는 징역 3년(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홍정연, 이은미, 김이경(1심에서 모두 실형선고)씨는 각각 집행유예 2-5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 요약 : 3쪽 참조]

이날 선고와 관련 '영남위 사건 부산·울산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가 조작된 디스켓을 증거로 채택해 유죄를 선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하고 "검찰의 공소변경은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임의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조성만 열사 추모비 건립 후원계좌 안내  
전북은행 529-21-0052723 예금주 고희석(270-2521)

## 【 행사와 동정 】

- ▶ 5.18 정신 계승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북 결의대회  
■ 5. 18(화) 오후 6시 / 전주 코아백화점 앞
-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특요집회  
■ 5. 20(목) 오후 6시 / 전주 코아백화점 앞
- ▶ 민주노총전북본부 군산시협의회 최재석 조직부장 선고공판  
■ 5. 24(월) 오전 9시 /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감청·촬영자료 증거능력 없다'

### 부산고등법원 선고 99노123

1.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판사 최인석, 판사 이영동)
2. 피고인 박경순, 김이경, 김병호, 방석수, 이은미, 홍정연
3. 판결결과
  -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활동의 점은 불인정
  - 이적단체 구성의 점 유죄로 인정
  - 통신, 회합 부분에 대한 전화녹음, 대화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한 통신, 회합, 김일성, 김정일 생일 기념식 장면 녹취 부분 등은 무죄. 북한동포돕기 부분은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무죄.

### <새로운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인정 방법과 인정 여부>

이 사건에는 전화감청 및 대화녹음(이른바 도청), 비디오 촬영 등의 결과가 수록된 녹음·녹화테이프와 컴퓨터 및 그 디스켓에 담긴 자료가 주된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측은 그 증거수집절차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었는데, 이들은 종래의 전통적인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던 것들이다.

당원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리한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화감청, 대화녹음, 비디오촬영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으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영장에 의하거나, 영장이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 심리 막바지에 주된 쟁점이 되었던 컴퓨터 디스켓의 압수절

차는 위법한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디스켓에 담긴 내용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감청영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군사법원의 감상규에 대한 판결, 당법원에서 있었던 혁신위원회에 대한 판결 등과 비교해 보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에서는 위 피고인들의 전화, PC통신, 대화 등을 감청 또는 녹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 및 기간연장을 받은 바는 있다.

그러나 당초 위 허가서의 내용이나 대상과 범위, 객체 등이 피고인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 일부는 누락된 부분도 있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어긋난 사실이 확인된다(위 법 제4조, 제14조 제2항은 불

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 및 불법 대화녹음·청취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잘못이 절차적인 오류나 업무미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피고인 박경순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이철연 등의 출입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2개의 녹화내용에 관하여, 위 각 비디오테이프 및 이로부터 촬영한 사진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 박경순의 집 밖에서 위 피고인의 집 내부에 있는 위 피고인들을 촬영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7조), 누구든지 피촬영자의 승낙 없이는 그의 모습자태를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가지므로, 수사기관 등이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이거나 사태가 긴박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의 주거지 안에 있는 그 개인 또는 다른 개인의 자태를 촬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디오촬영하기 위하여는 현행 법상 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한 것이므로 영장이 없이 촬영한 위 녹화테이프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 '유공자 법안 폐기는 민주화운동 부정'

#### '특별법 전환기도 중단' 요구 시민단체 성명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아래에서 민주화를 위해 목숨바치던 열사들에 대해 유공자 예우를 해 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 법안'이 국가보훈처의 반대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6개월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의문사 특별법 제정'을 외쳤던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는 민주화운동을 계승했다고 하는 김대중 정권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이 법안을 보상중심의 특별법으로 둘러싸려는 것은 열사들의 죽음을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이며 "이는 열사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성명서는 또 "차라리 다음 정권에서라도 만들 수 있도록 아예 '특별법 전환' 시도조차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인권  
주평

### 5.18 민중항쟁과 실업자, 노숙자, 부랑인

- 이희운(희망의집터·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장) -

#### '민중' 항쟁이라는 이름

광주민중항쟁 19주년을 맞이하면서 '민중항쟁'이란 단어를 새삼스럽게 되새겨본다. 몇 년 전 망월동에서 사온 <광주민중항쟁비망록>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참혹하게 죽은 한 명의 '시신'을 확인해본다. 그리고 망월동 묘비명을 살펴본다. 특히 노동자, 무직, 신원미상자, 행방불명자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본다. 17살 미장공, 19살 자개공, 33세 목수, 38세 페인트공, 25세 노동자, 28세 버스기사, 28세 미장공, 21세 재봉사, 25세 실업자, 24세 실업자, 17세 자개공, 18세 방직노동자, 18세 구두닦이, 20세 양계장 종업원 등과 상당수의 재수생들이 눈에 뜨인다. 특히 유가족이나 신원을 알 수 없는 40여명의 희생자들, 이들은 아마도 함께 위로할 가족도 잃어버린 부랑인들, 외톨이들이 많은가 생각한다. 광주의 싸움을 보면서 적극 가담을 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이들은 아마도 마지막 인생을 사는 마음으로, 가슴의 한을 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으리라 미루어 짐작해본다. 한국사회 모순의 희생자들인 - 민중 중에서도 민중인 이들이 마지막까지 총을 들고 싸운 것이다. 유가족도 없고 신원도 확인할 수 없는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들은 그저 이 한 몸 던져 전두환 독재정권과 공수부대와 싸워보자고 나선 것이었으리라. 그래서 5.18 민중항쟁이라 이름 붙이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 경제의 희생자들이 죽어간다

이제 5.18 민중항쟁 19주년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5.18 민중항쟁이 오늘날

이곳 전주에서 발생한다면 누가 나서서 싸울 것인가. 아마도 광주에서와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IMF 관리체제, 신자유주의 경제의 최대의 피해자인 실업자와 노숙자들이 민중항쟁의 마지막 전사들이 되지 않았는가?

다시 5.18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민중들만이 특별히 희생당하는 경제체제에서도 안된다. 그런데 탐욕스런 초국적 금융자본과 개발들은 배부를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낸다. 희생자를 만들어낸다. 희생

당한 노동자, 희생당한 농민, 희생당한 실업자, 그리고 노숙자, 부랑인들은 그냥 조용히 죽어가야만 하는가. 사실 그들은 그냥 죽어가기엔 원할 것이다. 심지어 정부조차도 그들이 조용해지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어찌 그냥 죽겠는가? 이제는 고실업의 시대이고 선진국에서도 실업자들이 몇 만 명씩 모여서 실업자의 권익을 옹호하여 정부에 저항하고 있다. 시위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정책담당자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여 특별히 실업자, 노숙자, 부랑인 형제들의 인권회복을 위하여 특별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바로잡습니다.  
지난호 1면에서 '정음의료원'은 '정음아산병원'입니다.

### 각계 인사 '집시법 개악 반대' 선언

#### "여론 수렴 위한 공청회부터 거쳐야"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이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선언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80여명의 선언자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가로막는 집시법 개악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역사적으로 정권은 독재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악용해 왔다"며 "집시법 개정안의 내용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선언자들은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으로, 첫째 '타인의 거주지역' 등에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 '집회를 금지·제한' 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나 경찰에서 자의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 둘째 그동안 쌍방의 합의하에 결정돼 왔던 '질서유지선을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른 통보사항으로 하였고, 셋째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을 이탈하거나 넘어설 경우 6월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토록 하여 경찰서장의 권한을 확대·강화한 점 등을 들었다.

선언자들은 또한 집시법 개정안 처리 과정 역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이는 김대중 정부의 반민주적 성격을 여지없이 드러낸 처라"라고 규탄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며 현재 대통령의 공포절차만 남겨진 상태다.

# 평화와인권

##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48 호

1999년 5월 25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원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독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 미국, 학살승인 사과해야

### '반미의 날' 군산기지 항의 시위

5월 22일은 80년 광주학살의 배후세력으로서 지목을 받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입항한 날이다. 지난 96년 미국의 유력 일간지 <저널 오브 커머스>지가 입수해 공개한 극비문서에 따르면, 5·18 당시 미 카터 행정부는 특전사의 광주투입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했으며, 백악관 고위 참모회의에서 전두환의 광주 진압을 '지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광주에서

의 학살을 '방조·승인'했다.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80년 이후 5월 22일을 반미의 날로 선포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와 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반미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남여대협·의장 박은화) 소속 학생과 전북시민사회단체 회원 150여명이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80년 광주학살 배후조정에 대한 미국의

사과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5월 2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군기지 정문 진입을 시도하며 한때 전경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미군기지 안으로 날개란과 물풍선을 던지기도 했다.

미군기지 집회를 마친 뒤 남여대협 학생들은 군산 시내에서 'IMF 경제침략 반대'과 '미국의 전쟁죄동 분쇄'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줬다.

남여대협은 지난 2월 이후 매달 군산미군기지 앞 금요집회 등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과 완전한 폐지를 위해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과 계속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서도 끈질긴 '우리땅 찾기'

### 미문화원 반환 계기·시민운동 활기

부산에서도 미국 점유 우리 땅 되찾기 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부산 아메리칸센터 반환 범시민 추진위원회'(범추위·공동대표 김희로)와 '부산 땅 하얏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두 단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미국 점유 부산땅 되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희로 등 6명)를 새로 결성한다"고 발표했다.

부산땅 되찾기 범추위는 21일 부산진구 연지동 하얏리아 부대를 방문해 이 부대와 인근 미국 경제원조처(USOM·유솅) 주택단지 및 동구 범일동 미군 55보급창, 남구 감만동 미군전용 8부두 등 미국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지역 다른 시설들의 반환과 사용료 지급, 환경질태에 대한 공개조사 등을 요구했다.

부산아메리칸센터(옛 부산미문화원)는 방화사건 12주년을 맞은 지난 94년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건물 반환 운동을 벌여온 뒤 지난달 30일 미국정부로부터 공식 반환받았다. 이 곳은 82년 방화사건 이후 대학생들의 반미시위 등 각종 집회장소로 이용돼 왔으며 항상 경찰 경비병력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펴왔다.

범추위는 지난 97년 부산아메리칸센터의 반환을 촉구하는 '미국 클린턴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과 '미국 상하 양원 소위원회에 보내는 서한'을 미국에 발송하는 등 부산지역 미국점유 땅 되찾기 운동을 벌여왔다.

## '불법'에는 공정한 엄단?

### 악덕사업주 구속보도에 이은 노동운동가 구속보도

지난 17일 중앙방송 저녁 9시 뉴스에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 대검찰청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와 동시에 '불법 집회를 주동했다'면서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의 문성현 위원장에 대한 구속방청도 나란히 전했다.

군산노동사무소의 편파노동행정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비대위·상임대표 문성현 신부)는 이에 대해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대우자동차 물류업체인 대일·대호·(주)YM의 이성열 사장이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하도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3면에 이어짐 -]

### 군산 개정병원 이사장의 '이상한' 휴업 위장 휴·폐업 뒤 인수 수순?

군산 개정병원 노동자들이 이사장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투쟁하고 있다.

64년 전 한 사람의 자선으로 설립돼 종합병원으로 성장한 군산 개정병원이 지난 3월 17일부터 휴업상태에 놓여 있다. 당초 병원측은 정신병동을 개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교체와 병원 수리가 불가피하다며 휴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군산 개정병원 노동조합(위원장 류 용)은 "99년 1월 새로 부임한 이상용 이사장(현재 충남 서천 서해병원·부여 성요셉병원 원장)이 개정병원 휴업의 구실로 삼은 정신병동을 짓기커녕 의료기와 약품 등을 빼돌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휴업으로 위장해 병원을 폐업한 뒤 공공의료기관인 개정병원을 개인자산으로 인수하려 한다는 것이다.

개정병원은 64년전 고 이영춘 박사가 농촌위생과 지역봉사에 뜻을 두고 설립한 것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해 왔다. 그러나 경영직자로 98년 1월부터 1년째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자 경영개선을 위해 다른 병원들과 위탁 협상을 하게 되었고 △체불임금 100% 해결 △병원 경영권만을 넘긴다는 조건으로 현재의 이상용 이사장이 취임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계약과는 달리 체불임금을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경영 첫 달인 99년 1월부터 임금 지급을 지연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3월 17일 휴업을 선언했다. 이사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휴업 뒤 일부 의료기와 약품을 자신이 경영하는 충남 서천의 서해병원과 부여 성요셉병원에 옮겨 사용하고 휴업중인 개정병원 간호사와 약국 직원 30명을 서해병원에 2주씩 교대 근무시키기까지 했다. 또 휴업중에도 병원정리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출근시켜 일반 행정업무 등을 보게 했고 개정병원의 정신과 환자를 서해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윤을 챙겼다. 노동조합은 또한 "노동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등이 해당 기관에 납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류용 노조위원장은 "이상용 이사장이 예초 병원을 살릴 목적으로 이사장에 취임한 것이 아니라 6개월 휴업 뒤 폐업을 유도해 자신 소유로 병원을 인수할 속셈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은 현재 부당노동행위와 연금회령 등으로 군산노동사무소와 경찰에 이 이사장을 고발한 상태다. 이와함께 △재직자 및 퇴직자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즉시 지급 △불법으로 이동시킨 의료기와 약품의 즉각 환수 △이상용 이사장 즉각 구속 및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사장이 운영하는 서해병원 앞에서 갖고 있다.

[인권영화 비디오 출시]

### 전세계 학살자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

<철레전투> <철레: 지울 수 없는 기억> 배급

제3회 인권영화제 대표작 <철레전투 1·2·3부>와 <철레: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비디오로 배급된다. 선거로 이룩한 철레의 아옌데 사회주의 정권이 미국을 등에 업은 피노체트의 군사쿠데타로 무너지는 과정을 기록한 <철레전투>는 당시 쿠데타의 주역이 영국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현재, 더욱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다. <철레전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아옌데 사회주의 정부에 저항한 부르주아와 아옌데의 사회주의 개혁을 지지하며 이를 지켜내려는 노동자·농민의 전투이다. <철레전투>는 또한 남미를 중심으로 일어난 제3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영화사에 길이 남을 수작이기도 하다.

배급가 : 각 3만원, 전편(4편) 12만원  
\* 제3회 인권영화제 특별회원, 민주노총 소속 노조 및 조합원에게는 4편을 10만원 특별가에 드립니다.  
문의 : 02-741-2407 (인권영화제 사무국 김정아)

### 【 행사와 동정 】

- ▶ 가정폭력상담소 개소 및 여성의 쉼터 개소식  
■ 5. 27(목) 오전 11시 / 전주 여성의전화 사무실
- ▶ 장기수와 함께 아플과 희망을!  
■ 6. 3(목) 오후 7시 30분 / 전주 교백교회
-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익산 연대회의 발족식  
■ 5. 29(토) 오후 3시 / 익산 제일은행 앞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광주교도소 미결 학생 양심수들 단식투쟁> 처우개선·보안법 폐지 등 요구

광주교도소 양심수들이 처우 개선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광주전남 양심수 후원회(후원회·상임의장 기세문)에 따르면, 정오균씨(98년 남총연 의장) 등 2명이 지난 14일부터, 18일부터는 김광훈씨(98년 전남대 자연대 학생회장) 등 3명이, 그리고 24일부터 20여명의 미결 양심수들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대부분 한총련 대의원들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있다. 후원회 윤철신씨에 따르면 이 가운데 24일 현재 11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오균씨는 지난 20일 탈진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정씨에 대한 외래진찰 허용 요구는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양심수들은 지난해 12월 소장으로부터 약속받았던 정벌방이 지난 2월 아무런 개선 없이 부활한 데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회에 따르면 정벌방은 너비가 각각 가로 세로 1.5m로 사람이 누울 수 없고 창은 이중창으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재소자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 양심수들은 또한 교도관들이 재소자에게 나이를 불문하고 반말과 욕설 등을 내뱉는 관행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수들은 특히 재소자와 교도관 사이에 다툼이 벌어질 때 재소자에게만 항상 책임이 돌아가는 불공정한 처사

가 비밀비재하다며 공정한 처리를 위한 '소내 조사위원회' 구성을 교도소에 제안하고 있다.

양심수들은 이밖에도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김대중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종교계 1080명 인권선언 “아직도 양심수 가두는가”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 인사 1천여 명이 인권을 위한 실천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종교계 1080인 인권선언문' 이름으로 발표한 선언문에는 불교 스님 418명, 원불교 교무 113명, 신부·수녀 249명, 기독교 목사 300명이 참여했다.

인권선언은 지난 19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한 '제1회 불교인권문화제'에서 제1부 개막식에 이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를 통해 낭독됐다.

인권선언문에서 이들은 "온 인류의 평화를 소망하면서 정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며 인권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힌 뒤 "국민의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한 허탈감과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고 정부의 인권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오히려 양심수가 증가하고,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주도하도록 돼 있는 인권법을 제정하려 하는 등 우리의 인권 상황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명실상부한 인권법 제정을 정부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1면에서 이어짐] 비대위는 그러나 "지난 17일 보도는 비대위의 헌신적 싸움으로 이뤄낸 악덕사업주 구속방점을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셈새가 역력하다"며 "불법을 엄단한다는 미명으로 영장을 청구한 문 위원장에 대한 수배를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 “국회차원 진상규명 시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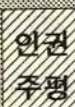
‘영남위’ 사건 가족들 국민회의 울산지부 농성

강한 조작의혹을 사고 있는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면서 가족과 집행유예 석방자들이 국민회의 울산지부에서 사흘 동안 농성을 벌였다.

지난 19일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 가족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5월 17일 마무리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조작된 디스켓에 대한 증거채택은 부당하며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가족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해 구속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진실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했다"며 "이번 항소심 선고는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 국민회의 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반제청년동맹에서 동창회로, 조선노동당영남지역당에서 한민전영남위원회로, 다시 영남위원회가 동창회로 수없이 조직명칭이 바뀌었다"면서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하나 둘씩 밝혀진 인권탄압과 증거조작은 이 사건이 완전히 날조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밖에도 △김창현 민선 울산동구청장의 집무를 위한 보석 허가 △장기간 도감청과 불법 비디오 촬영 책임자 처벌 △국민의 정부 이후 국가보안법 남용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과 진상규명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 7조 폐지권고에 대한 국민회의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 배고픈 자의 생존권과 배부른 자의 재산권

윤 찬 영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사회복지학)

지난 4월 28일 이 땅의 보수주의를 대변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충격적인 주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약칭 헌법)이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제도와 헌법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여기에서 "헌법원칙과 연금 및 의료보험제도"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 임광규 변호사와 "사회보장제에 대한 근원적 의문들"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했던 자유기업센터 김정호 법제실장의 글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판단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김실장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득이나 부는 남들에게 봉사한 대가라고 전제하며,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또는 봉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봉사는 것은 반대급부를 전제하지 않는 무보수성을 본질로 하는 이타주의적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축적한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는 기업이나 자산가들의 이윤추구적 경제활동을 봉사는 말로 은폐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말대로 봉사(?)를 제대로 못하여 소득과 재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우해야 할 것인가?

그에 따르면 가진 자의 자선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동정심으로 빈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분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가진 자들의 선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사회정의의 위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도둑질이나 사기를 통해 재산을 축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임변호사는 소득재분배에 대해 가진 자의 구매력을 강제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동 조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배고픈 자의 생존권은 배부른 자의 재산권에 앞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 공동재산권을 보상없이 빼앗아 가며 헌법 제119조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입법으로서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현재 이 법률들의 위헌성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 절차에 돌입하였다.

16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자신의 시대는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 부정을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빈곤과 불평등이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깨닫는 기간이었다. 이에 노동계급의 지속적인 투쟁을 통하여 19세기부터 복지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2차 세계대전 직후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구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헌법이나 자유기업센터 인사들의 해석대로라면 우리 헌법상 용납할 수 없는 나라들이라니 참으로 놀랍다.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사회민주주의도 추구할 수 있으며,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34

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0조에서 제36조까지 사회적 기본권,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19조 제2항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경제민주화..."를 주창하고 있어 적어도 규정상으로는 복지국가의 헌법으로서 손색이 없다.

그러므로 최고의 규범인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매진해야 하는 마당에 가진 자들이 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좀 더 부담한다고 위헌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롭다. 게다가 최근 국민연금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가진 자들이 집단적으로 소득 노출을 거부하거나 축소신고를 자행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횡령한 악덕업주들이 얼마나 많이 적발되고 있는가? 그들이 정말 사회보장제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여 헌법정신을 실천하느라 그랬을까?

IMF체제 하에서 굶거나 노숙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당장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한계상황의 가족들도 많다. 어쩌다가 베푸는 가진 자의 자선으로 그들을 길들이려 하지 말라. 배고픈 자의 생존권은 배부른 자의 재산권에 앞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권리들이 개인적 수준에서 행사된다면 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며 사회유지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가 권리·의무의 체계 속에서 법제도로써 적절한 분배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난을 죄악시하지 말라. 그렇다면 부유함은 더 큰 계급적 죄가 된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49 호

1999년 6월 1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원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 모든 국민은 예비범죄자?

### 정부, 새 주민증 위해 지문강제체취

정부가 또 다시 지문을 강제체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작업에 들어가 2000년 3월 31일까지 현행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바꾸기로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채취한 지문을 디지털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전자화된 형태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6일 국회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과 성별, 그리고 출신지역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고, 주민등록증 지문을 채취하는 악습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다.

사회진보연대(대표 김진관)는 26일 성명에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문날인은 범법자들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채취되고 있다"며 "과거 한일간의 외교분쟁까지 일으킨 제일 한국인 지문날인제도를 일본 정부 스스로 폐지한 것과 달리 김대중 정부는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감시하기 위해 시행한 열손가락의 지문채취를 또다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도 28일 성명을

내 "주민등록 지문채취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주민등록 지문강제체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보통신연대INP는 3일 오후 6시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지문날인과 전자감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9일에는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법무부 '영남위' 분리수감

#### 상고심 앞둔 구속자들 항의 목살

상고심을 준비중인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 9명 가운데 5명이 이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31일 오전 김해의 부산교도소에 분리 수감됐다. 이에 따라 이들 한 사건 구속자들은 각각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분리 수감된 상태에서 상고심을 치르게 됐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대법원 상고시 구속자들은 미결상태에서 보통 부산교도소에 함께 이감되는 것이 부산구치소 관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영남위원회> 사건 대책위

원회)는 28일 법무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구속자들을 뿔뿔이 흩어놓는다면 이는 대단히 부당한 처사"라며 △재판의 변호권과 관련한 불이익 △집견 문제와 관련한 불이익에 맞서 적극 항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구치소 수감중이던 9명의 구속자들도 법무부의 분리 수감 방침 소식이 전해진 27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구속자들은 이번 분리 수감 사태가 단순한 이감 문제라기보다는 양심수에 대한 부당한 법무행정의 문제라고 보고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얼마전 구속자들은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명의로 △양심수 처우에 관한 규정 제정 △도서관입금지목록 폐지 △자유로운 집필활동과 정치적 견해 표명권 보장 △준법서약제도 즉각 폐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한 바 있다.

한편 같은 사건 석방자들 및 구속자 가족들은 29일부터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항의방문하고 각종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 보험료 인상 철회 촉구

#### 의보연대 정부대책 촉구 성명

<의료보험 통합위원회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의보연대·집행위원장 허영구)는 27일 성명을 내 "정부는 지역의료보험 제정에 대한 국고부담 50%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보험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보연대는 △실직자, 농어민,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 △국민의료비 증가 억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강력히 집행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 것인가?"

- 정보통신연대INP 토론회 -

■ 때 : 6. 9(수) 오후 6시 ■ 곳 : 전주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교육실



### '건강권' 말하기 부담스러운 사회

서 소 영 (약사·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내가 근무했던 약국에 들르는 시골 노인네들은 대체로 만성적이고 낫기 어려운 요통과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생계도 쉽지 않은 영세한 농민들이 대부분이어서 좋은 치료나 약은 엄두를 낼 수 없다. 또 산적한 농사일 때문에 병원에 드러누워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저 더 아프지 않을 요령으로 진통제와 뼈주사(스테로이드 제제)에 의지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더미 같은 농사일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곧잘 약의 위험성이나 과도한 농사일에 대해 경고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하나마나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의료제도와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것도 없지만)로는 해결 방안이 거의 없다. 돈이 나 많으면 모르겠지만...

또 하나, 광주의 노동자 건강상담소에 들렀을 적에 작업장내 산업재해 문제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하소연은 이렇다.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협 때문에 강화된 노동강도와 사고의 사각지대에서 굴욕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고, 정리해고가 사회적으로 당연시(?)되자 사업주들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산재예방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위협하며 몇 푼의 위로금으로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는 알다시피 상업화된 민간의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의료가 사고 파는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도 먹고사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고, 빈익빈 부익부의 폐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들은 수 십년간을 상품화된 의료-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에서 건강을 사오는 형태의 -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에 건강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다만 이런 문제들을 모두 자신이 못났거나 가난한 탓으로 돌릴 뿐이다. 어쩌다 의료보험료 인상에 분통을 터뜨리거나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했다거나 야기 분유 살 돈 때문에 강도질을 했다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TV로 전해 듣고 눈물을 흘릴 뿐이다. 병원노동자들이 병원환경개선과 건강권확대를 외치고 투쟁을 하는데 이윤확득에 급급한 병원장이나 관료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만을 생각하며 병원노동자들을 '욕하는 모습을 보면 건강권이란 너무도 먼 나라의 얘길처럼 느껴진다.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의 고하(高下)나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상업주의적) 의료관계와 이를 응

호하는 법과 제도로 인해 인류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들어 낸 첨단 의료기계와 기술은 특정한 계층에게 한정되어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한 삶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첨단 기술은 차치하더라도,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생하는, 작업장에서의 유해환경과 재해로 인해 질병에 노출된 수많은 보통사람들에게 의료와 재활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보건의료기금을 주고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라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며, 국가에서 마땅히 보장해주는 권리로 - 우리가 당연하게 행사해야 하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권 쟁취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시작할 수 있다. 병원 노동자들이 건강권 쟁취투쟁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턱없이 오른 의료보험료에 대해 의료보험 노동자들과 협의하고 (정부는 재정지원을 높여라!), 보건소나 공공병원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간섭해야 한다. 끊임없는 요구와 참여만이 제한없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해 줄 것이다.

### "파업권 보장·정부 강경대응 철회" 민변, 대정부 시국전해 발표

민중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회장 최영도)은 1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정부가 최근 벌어진 노동계의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노조 간부를 구속하고, 상급 노동단체의 간부들에 대하여 잇달아 사전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철회하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또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파업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 행사와 동정 】

-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
  - 6. 3(목) 오후 6시 / 전주 코아백화점 앞
- ▶ 주민등록 지문날인 반대 켈테인
  - 6. 3(목) 오후 6시 / 전주 코아백화점 앞
- ▶ 장기수와 함께 아플라 희망을!
  - 6. 3(목) 오후 7시 30분 / 전주 교백교회

### (강연요약) 근대국가의 정당화로서 기본권과 인권

전북대학교 철학과는 5월 20일 인문대 교수회의실에서 독일 브레멘 대학 한스 요르그 잔트클러 교수 초청강연회를 가졌다. 잔트클러 교수는 유럽의 사회철학자이며 평화·인권 연구자로, 사회철학의 대표적 학술지로 출판한 <디알렉틱>의 편집인이었다. 다음은 이날 발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강연내용)

(1) 국가는 비판하여 지양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가?

인류 역사상, 인간의 기본권과 인권을 위한 투쟁의 초창기에 있어서 '저항권', 즉 국가의 감독 내지는 억압에 저항할 권리의 법적 보장은 중요한 이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다르다. '특수한 것' 혹은 '사(私)적인 것'의 한 지배적 양태가 전세계적으로 관철되어 가고 있는, 즉 자본주의의 세계화 경향에 직면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법치국가를 제한하여 공적 영역을 폐지하고 이해관계의 권력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은 국가"에의 외침은 곧바로 해방적 메시지로 이해될 수 없다.

다른 한편, 우리는 또한, 국가의 폭력국가에로의 타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렇게 볼 때, '국가' 그 자체를 위한 변론 역시 적당치 않다. 문제는 국가의 정당성과 정통성에 관한 것, 즉 국가의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정치적 목적과 국가 폭력의 제한에 관한 문제들이다. 정의, 평등 및 자유의 원칙이 경제적 세계화에 상응하는 시민 사회의 형성을 통해서, 말하자면 기본권과 인권의 관철과 보장을 위한 전략과 활동의 전세계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옹호되어야 함은 자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법치국가가 없이도 인간의 자유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환상이다. 이제 국가는, 한편으로는 권위적 국가의 모든 기능들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의 국가를 그 본질적 과제에서 수호해야 할 것이다. 민족 이데올로기, 인종이데올로기, 특수한 경제적 이해 관계의 우위로부터 도출되는 국가의 기능들은 거부하며,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 법의 옹호(도구)로서의 헌법국가들에 속하는 기능들은 수호되어야 한다.

(2) 국가의 정당성의 기초로서의 기본권과, 기본권의 근거로서의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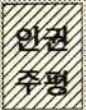
국가 권력은 법의 권력이 될 수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법의 척도를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사실적 다원주의의 사회에서, 신적 범으로부터라든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원리로부터 도출할 수도 없고, 어떤 사회적 집단이나 계급의 특권으로부터는 더더구나 불가능하다. 나는, 실정화된 인권에서, 국가의 법적 근거를 형성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척도를 찾고자 한다.

이제 인권은 '제3의 세대'에 이르러, 미사여구로서가 아닌 구체적인 것이 되었으며, 동시에, 상이한 사회 속에서 보편적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66년 제정되어 1976년 발효된 두 가지 국제적인 인권조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은 추상적 권리로서의 인권을 실정법화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인권은 구체화되고 표준화되었다. 인간이 존엄성을 가진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해 주고 있는 이 규약들은, 국민 국가에 대해 상위에서 세계 시민법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으며, 상이한 사회들에 있어서 국가의 의무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3) 인권의 기초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국가의 정통성을, 헌법, 즉 기본권을 실정화한 헌법에서부터 근거지우고, 기본권을 인권으로부터 근거지우는 이 작업에서, 이제 인권의 기초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인권의 기초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객관적 법의 근거로서 작용하는 한편, 과연 이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해명된 것이 없다. 나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인간 존엄성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제1 조건은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의 안전이다. 국가나 민주주의라는 지배형태 자체가 이 안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 존엄성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내의 사회복지국가 원칙들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된다. 다음의 네 가지 조건들이 이러한 기본조건과 뿔 수 없이 연결돼 있다: 둘째 조건으로 인간의 법적 평등성, 셋째 조건으로 인간의 정체성과 품위의 유지, 넷째 조건으로 국가의 강권 사용의 제한, 다섯째 조건으로 자기 신체에 대한 자유 존중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만 1948년 12월 10일의 세계인권선언의 다음과 같은 정식이 사회적 현실로서 생각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움과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게 태어났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연대성 없는 사회를 선전한다. 반면 법치국가를 옹호하는 사람은 동시에 연대성의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다. 법치국가를 옹호하는 사람은 정치적 자유권 혹은 시민권을 일반화할 것만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인권을 보편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연대적 행동은 타자에 대한 단순한 존중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연대성은 타자의 현재상태를 그대로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을 개선하려 한다.



# 종교단체 - 인권의 보루인가, 사각지대인가

김 의 수 (전북대 교수, 철학)

나는 지난 번 인권주평(99.4.6)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인권운동 최전선에 나선 종교계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런데 오늘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종교계의 반인권적 행태를 얘기해야겠다.

## 심심할 틈이 없는 한국사회

한국사회는 심심할 틈이 없는 사회이다. 웃지 못할 일들,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2주 전에 있었던 이재록목사 사건은 한국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며 반복적으로 터져나오는 사회적 사건의 주요 항목을 차지하는 사이버 종교 이야기이다.

교육수준이 높고, 민주주의의식이 강하며,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 국민들을 뺄성과 무지의 무모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이버 종교 사건들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토론에 부쳤을 때, 기독교인들이 보인 태도는 정말 염려스러운 것이었다. 만민성결교회는 기독교 교리를 벗어난 이단이므로 기독교를 싸잡아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함께 그런 현상은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 성서에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성종교가 반성할 일은 없고, 사이버를 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이비만 피하면?

이재록목사 건은 그 집단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지 않았다면 결코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기독교 방송과 극동방송에 장기간 정기 출연했으며, 한국기독교의 다수 종파가 참여하는 거대한 선교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했고, 주요 정치지도자들을 비롯한 사회의 유력자들과 교분을 맺어 온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병고치는 능력을 사기쳐서 교인들을 끌어모으고, 최첨단 영상 기법까지 동원하며 예술단을 운영하고 마피아적 조직관리와 스타관리 수법까지 동원하여 교인들을 사로잡아 돈을 끌어모았기 때문이다. 사기와 공갈로

우면 신학교 간판을 달고, 그런대를 거치면 아무나 목사가 된다. 불교는 뭐든 다 마찬가지로. 부자 동네에는 너도나도 십자기를 꽂아놓는다. 한국의 종교 관련 법은 같은 업종의 가게를 일정한 거리 이내에 겹치기로 개업해서는 안된다는 상법만도 못하다.

## 종교의 자유는 사이버 종교와 기성종교의 사이비성을 척결해야 확보되는 것이다.

돈을 벌며 교계지도자 자리를 산 것이다. 기복신앙과 물신주의, 그것을 수단으로 하는 교세확장이 한국 종교의 특징이고, 그것이 사이버 종교를 양산하는 터전이다. 어느 여성 TV비평가는 한국 언론이 사이버 종교까지만 다룰 수 있고, 기성종교의 문제는 다루지 못하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 기성종교 사이비성이 더 문제

사이비 종교보다 기성종교의 사이비성이 더 근본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사이버종교가 문제를 일으키면 기성종교는 사이버에 속지 말라며 자신들의 사이비성을 다지기에 골몰한다. 한국의 종교는 개혁의 대상이다. 정치, 법률, 언론과 함께 개혁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재벌을 해체시키고, 사이버 언론을 척결해야 하듯이, 종교의 자유는 사이버 종교와 기성종교의 사이비 성을 척결해야 확보되는 것이다.

## 부자동네엔 너도나도 십자기를 꽂는다

아무나 쉽게 종교를 세우고, 갈라져 나가 새 종파를 만들고, 큰 교회를 세

## 종교기관 예산공개 의무화해야

우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종교기관의 교육 제도를 비롯하여, 종교

관련 조세제도, 종교기관의 예산 공개 등을 의무화시켜야 한다. 건강한 종교인들이란 건강한 시민이 갖는 준법 정신, 합리적 사고, 공동체 정신을 당연히 실천하는 바탕 위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헌신과 봉사의 실천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도 놀랄 만큼 탈법을 자행하며, 이기적이고, 반인간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재록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며 한국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기성종교계 지도자들의 사이비 성을 척결해야 한다. (이재록을 이단으로 규정한 교계 지도자들은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구속된 최순영회장을 석방해달라고 대문짝 만한 광고를 신문에 냈다.

##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예금주] 문규현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 제 150 호

1999년 6월 8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독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 출소 장기수 복송을

### 종교계 “인도적 견지에서 마땅히”

도법 스님, 이수현 신부, 한상렬 목사 등 11명의 전북지역 종교계 인사들이 출소 장기수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조건없는 복송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국가보안법 민족의 수치

지난 3일 낮 12시 북녘동포돕기 전북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 종교인들은 “일반 국민 78%가 이 법의 개정·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은 92.9%와 99%가 개폐를 요구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악법 중의 악법으로 알려져 우리 민족의 수치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올해 안에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모든 양심수 석방해야

이들은 또한 정부에 “아직 석방되지 않은 260여명의 양심수와 장기수들을 석방하고 범민련이나 한총련에 관련해서도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고령의 비전향장기수 손성모(대구교도소)·신광수(광주교도소) 씨와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석방되지 않은 최호경씨(전주교도소)의 즉

각 석방을 촉구했다.

북한 송환을 희망하는 장기수는 자유의사에 따라 무조건 송환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다. 종교인들은 “본단의 희생양으로 수십년간 옥살이한 북한 출신 장기수들을 송환하는 것은 인도주의와 남북화해를 위해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 해결함으로써 거국적으로 민족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가라”고 덧붙였다.

## 정부는 거국적 태도 견지하라

한편 지난 2월 25일 대통령 특사로 출소한 우용각씨를 비롯해 서울·대전·과천·대구·광주·전북 등지에서 모인 37명의 장기수들은 이날 오후 전북 김제·고부 등 동학혁명 유적지를 돌아본 뒤 저녁 8시 전주 교백교회(한상렬·이강실 목사)가 주관한 환영식에 참석했다.

## ‘노동자연대’ 입막음

〈국제사회주의자〉 잇단 구속

김대중 정부의 마녀사냥식 사상 탄압

## “주민전산화 무엇이 문제인가?”

- 정보통신연대INP 토론회 -

■ 때 : 6. 9(수) 오후 6시 ■ 곳 : 전주 소프트웨어지원센터(전주교 옆)

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 면해결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경기도 경 보안수사대에 연행된 국제사회주의자(IS) 안윤모씨(서강대 수학과 졸업)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28명이 구속됐고, 지난 3월 김낙준씨(조선대 항공우주공학과 93학번)가 연행됐으며, 4월에는 전지윤씨(단국대 90학번)가 연이어 보안수사대에 연행됐다. 연행 구속된 국제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연대〉라는 기관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자연대〉는 이들이 발행하는 기관지로 노동자들의 정치투쟁 노선을 담고 있다.

‘영남위 구속자 가족대책위’ ‘영등포 산업선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구속된 IS 조직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전북 인권소식 한눈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홈페이지 단장

전북지역 인권 정보를 담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홈페이지가 새롭게 꾸며져 선보인다.

새로 단장한 홈페이지에는 전북지역 인권소식을 전달하는 주간 〈평화와인권〉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최근 활동, 기획글(현재, 지문날인 반대운동) 등이 소개돼 있다. 홈페이지는 〈군산미군기지 우리찾기 시민모임〉, 〈정보통신연대 INP〉 등의 홈페이지와도 연결돼 있다.

**<요약>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초청강연**

**신자유주의가 환경재앙 부른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의 대안을 의식 개혁이 아닌 신자유주의적 세계체제와의 연관 속에서 밝혀내고자 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제27주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2~3일 이틀간 전북대 합동강당에서 열린 생태사상가 초청강연회가 바로 그러한 자리였다.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을 지키는 여성들의 모임, 그리고 새안누리, 전북 녹색잔치대, 파랑새, 푸른 사람들 등 전북 지역 대학생 환경동아리들의 주축로 진행된 강연회에는 서울 청년 생태주의자 KEY(Korea Ecological Youth)의 대표 최경송 씨와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재각 씨가 강사로 초청됐다.

**신자유주의에 노출된 생존과 생명의 문제: 환경**

'20대 80의 신자유주의의 도전과 환경운동의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첫날 강연에서는 전세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제3세계에 대한 착취와 환경파괴를 자행하고 있는가가 이야기됐다.

구체적인 환경파괴의 실상으로는 석유산업, 자동차산업 등을 통한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의 문제, 화학산업과 군산복합산업을 통한 독성·방사능 폐기물 유출, 목재산업을 통한 산림 벌채, 해양산업을 통한 물고기 남획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강사는 또한 투자자들의 권리 확장에 대한 국제적 협약인 MAI(다자간 투자 협정)가 일국적 차원에서 노동기준, 환경기준과 같은 규제와 요구조건을 일체 무시함으로써, 초국적 기업들의 무절제한 환경파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제 환경의 문제는 국내에서의 환경보호 캠페인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초국적 자본에 대한 자각과 견제로부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착취와 독점의 과학기술 : 생명공학**

둘째날 강연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문제의 연관성을 주제로 '생명공학'이라는 과학기술의 양면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복제양 돌리의 탄생으로 널리 인식된 생명공학은 현재 유전자조작 식품의 대중적 보급,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진전 등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이 주는 환상과 함께 드러나는 생명공학이 가지는 위험성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유전자 조작된 식품들이 인체에 미치게 될 해독성의 문제, 유전자 조작에 의한 새로운 종의 출현으로 미치게 될 생태계 파괴의 문제, 복제인간·인공장기 등의 출현으로 인한 윤리적 차원의 문제, 초국적 자본의 생명특허로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 독점의 문제 등은 생명공학의 미래를 장미빛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인권의 또다른 이름, 환경권**

강연이 끝나갈 즈음 강사는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질문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식품에 대해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서 유전자 조작식품에 라벨을 다는 표시제를 실시하지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유전자가 조작된 식품을 식품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생명복제가 생명의 근원에 대한 과학적 해석과 윤리적 판단이라는 고전적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낙태 문제·뇌사 문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환경문제는 비단 인간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생태계의 파괴의 문제, 그로 인한 인간의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환경파괴는 인류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은 인간의 존재기반을 뒤흔들고 유전자의 차이로 인한 인간 서열화의 시대를 예견하고 있다. 이제 인권의 이름으로 전지구적 환경파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저항해야 할 때이다.

**【 행사와 동정 】**

**▶ '99 전주시민단체 박람회**

■ 6. 10~13 (오후 1시~8시)  
차없는 거리 (전주객사 옆)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캠페인**

■ 6. 10 (목) 오후 6시 / 전주 코아백화점 앞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새 정권 들어 집회·시위 자유 약화**

지난달 24일 공포된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지난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80여명의 사회단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이상영 교수(민교협)는 "집시법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법으로 62년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 공안관계법의 대체 작용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개인과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보장하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도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중요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사무국장은 "집시법은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에 의해 부단히 침해당해왔다"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집회신고 과정과 그 이후 집회의 진행과 관련하여서, 또는 행진 중에도 적법한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법적인 침탈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개악된 집시법에 대해 "전해투의 장충공원 집회에 대해 경찰이 '주거지역 유사장소'(제8조 제3항)라는 조항을 적용해 집회금지를 검토했다"며 이미 그 악용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민변)는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으로 △집회·시위의 금지장소의 범위 확대 △질서유지선의 설정과 형사처벌 등을 들었다(아래 상자

**개정 집시법, 위험 소지**

① **집회시위 금지장소의 범위 확대** - 주거지 또는 주거유사지에 대해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특히 주거유사지의 광범위함이다. 따라서 집회 주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집회가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하는 경찰 당국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을 부추기게 된다.

② **집회 질서유지선의 설정과 형사처벌** - 질서유지선의 설정요건이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관장하게 돼 설정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크다. 또한 단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기만 해도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형벌권의 적정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③ **해산명령의 범위 확대** - 위험적 요소가 가장 큰 부분이다. 앞으로는 단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 및 시위가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해산요구에 불응하면 합법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

④ **개정 집시법의 위헌성** - 개정 집시법을 개악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가능성, 경찰의 일반적인 질서유지선 설정권 부여와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한 형사처벌,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권의 행사범위의 확대라는 3가지로 요약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과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따른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리에 비춰 볼 때, 이번 개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크게 침해하는 위험적 요소가 있다.

참조).

**문목사 회고모임 귀국자 연행 대책위, 사법처리 반대**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6일 통일원의 허가없이 지난 1일 중국 룡징에서 열린 고(故) 문익환 목사 회고모임에 참석한 뒤 입국했다는 이유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포공항에서 연행해 조사중이다.

김규철 상임의장, 박세길 정책위원장, 이용규, 김지은씨 등 전국연합 대표단 4명은 귀국성명에서 "중정 모임에서 남·북·해외의 민간통일운동단체 대표들은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과 단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며 "이는 거래의 통일사에서 크나큰 역사적 전환"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통일애국인사 문익환 목사 중정 5주기 추모행사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연합 대표단 귀국 환영명령을 내고 사법처리를 반대했다.

전국연합 회원 200여명도 이날 오후 김포공항 제2청사에서 환영대회를 가진 뒤 서울 육인동 경찰청 대공분실 앞에서 규탄 반대집회를 가졌다.

30년을 기다리던 영화  
다큐멘타리의 진수!!

<칠레전투>

<질레: 지울 수 없는 기억>

※ 각 3만원, 전권(4권) 12만원  
※ <평화와인권> 독자, 제3회 인권영화제 후원자, 민주노총 소속 노조 및 조합원 여러분께는 4권을 10만원 특별가에 드립니다.

※ 구입문의: 0652-231-9331 (김영옥)

인권  
주평

#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시작하며

오 두 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 독재정권과 '지문날인'

86년도의 일이다. 전두환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많은 사람이 구속, 수배 상태에 있었다. 본인도 노동현장을 지원하다 수배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박종철이 정보기관에 불법 연행되어 고문에 의해 죽었다. 이로 인해 탄압의 고삐가 잠시 풀리지게 되었고, 많은 수배자들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지배자들이 거저 주는 것은 없다. 언제나 단서를 붙인다. '요식 행위인데 간단한 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안기부에 갔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벽 쪽에 서라 하더니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닌가. 한 순간의 일이었다. 그리고 지문날인을 하였다. 그곳 분위기는 거부할 수가 없었다. 정보기관에서는 이미 나를 범죄인으로 취급하였고, 정당한 절차 없이 사진과 지문을 강제채취한 것이다.

그날 용기가 없어 항의를 하지 못했지만 심한 모욕감과 '당했구나' 하는 자괴감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다. 오랫동안 독재정권 하에서 길들여져, 자신도 모르게 내면화된 전체주의 질서가 몸에 딱 배어 저항 한 번 못하고 따라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 교체작업을 시작하였다.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아름답고 품위 있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바꿔드리겠다는 것이다. 동사무소마다 사진과 지문에 협조해 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는 나라인 것 같다. 아름답고 품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어느 문명국가에서 우리 같은 주민등록제도가 있으며, 지문을 강제채취하고 있던 말인가. 이렇게 강

제 채취한 지문과 사진은 디지털 방식의 화상자료로 입력돼 전국 단일망 행정컴퓨터에서 통합 관리된다. 새롭게 교체작업을 하면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개인의 정보를 통제 관리하는 전체주의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혼자 꿈을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박정희 정권 시절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한다는 구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국민에게 각각의 고유번호를 제공하여 국민통제·관리의 수월성을 기하려는 국가권력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로 인해 모든 국민은 국가 권력의 향상적 추적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단순한 지배객체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주민등록을 위한 지문채취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더구나 새로 바뀐 주민등록카드는 이후 통합 전자카드 발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한다. IC칩만 빼졌을 뿐 모든 전자장치들은 전자주민카드사업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등록제도는 태생부터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권력을 잡으면 똑같아지는 것인가. 경제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김대중 정부도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이렇게 되면 인권 대통령을 자임하는 김대중도 과거 정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 불의 맞서 용기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제도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허울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국민통제시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방심한 것을 반성하면서, 우선 문제가 되는 강제지문채취제도를 반대하는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전화를 하거나, 반대서명 용지를 팩스로 보내 주었다. 부산의 한 교수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는 국민통제관리가 뛰어나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제도인데 쉽게 포기하지 않았지만 함께 하자"며 의사를 밝혔다. 군산의 노동자들은 서명을 하면서 중간에 꼬리 내리지 말라고 오히려 우리를 다그친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 습관화된 불감증에 그냥 따라가거나, 개인에게 닥칠 불편함과 불이익 때문에 포기하고 있다.

우리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상식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맞선 소수의 용기를 소중히 여겨 이 투쟁을 시작하려고 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남아공의 투투 주교의 말처럼 "혼자 꿈을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소수가 시작이 되어 여럿이 함께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고 주민등록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 위한 현실을 만들고자 한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51 호

1999년 6월 15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원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독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onespark

## 파업 기획도 모자라서

### 국민회의 항의방문 7명 강제연행 뒤 석방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북지역에서도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시위가 잇따랐다.

#### “특별검사제 도입해야”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염경석)와 전주실업자취업지원센터 등 회원 70여명은 지난 10일 낮 12시 전주지방검찰청 정문에서 '노동자 세금으로 파업공작 자행한 검찰은 자폭하라'는 내용 등이 적힌 파켓을 들고 약 2시간 동안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검찰청사 앞에서 낭독한 성명을 통해 △반민중적 구조조정 즉각 중단 △수배노동자 조성훈, 박종철씨 수배해제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문정현 신부, 한상열 목사, 이중호 교수 등 5명을 대표자격으로 미리 준비한 항의서한을 지검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울려보냈으나, 전주지검은 청사 입구 뒷담이를 내리고 경찰을 동원해 이들을 막았다. 경찰은 청사 입구로부터 100여미터 떨어진 검찰청 정문에도 전경 200여명을 동원해 시위 참가자들의 검찰청사 출입을 막았다.

한편 대표단과 참여 단체 회원들은 청사 입구에서 짜증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지청장 면담을 요구하다, 오후 3시께 민주노총 간부들로 대표단을 다시 꾸려 차장 검사를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일단 해산했다.

군산지역 노동자와 사회단체 회원 약 50여명도 11일 오후 군산지검에서 파

업 유도와 관련한 김대중 정부의 사과와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만도기계와 기아특수강 노동자 구속 등에 대해 검찰의 일방적인 노동자 탄압이었다며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 지난해 만도기계 탄압도 수상

한편 14일 오후 2시 대표자회의를 갖고 4시부터 국민회의 도지부 항의농성에 들어갔던 40여명 가운데 염경석 본부장, 군산대학교 김연태 위원장 등 7

명이 오후 7시 20분경 경찰에 강제연행됐다 두 시간만에 석방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밤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9월 익산 만도기계 파업 당시 공권력 투입과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검찰 주도로 이뤄졌던 점에 주목해, 16일 오후 2시 만도기계노조 익산지부와 함께 군산지검 앞에서 항의집회를 계획하는 등 전면적인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김대중정권 실정 규탄 및 노조탄압공작 규탄대회  
곳 : 전주 교야백화점 앞  
때 : 6. 17(목), 오후 5시  
주최 : 민주노총전북본부

#### 【제2회 실업자학교】

##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살아 있으나 살아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업자의 삶. 실업자 학교는 '실업'에 대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생각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공간이다.

- 때 : 6월 22일~26일 매일 오후 6시 30분 (단, 26일은 오전 10:30)
- 곳 : 전주 서학동 천주교회 교육관 (0652-232-9191)
- 강의일정
  - 22일(화) 입학식 / 제1강 "실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23일(수) 제2강 "사회안전망,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교수)
  - 24일(목) 제3강 "우리지역 실업자 구제 현황" (전주고용안정센터 취업상담팀장 황정호)
  - 25일(금) 제4강 "노동과 실업, 우리는 이렇게 본다" (민주노총 전북 지역본부 염경석 본부장)
  - 26일(토) 졸업식

### 정보통신연대 INP '주민전산화' 토론회

## 통합·전산화되는 주민증, 정보사회 파시즘 위험

최근 정부에서 주민등록증 갱신작업을 벌이는 것과 관련, 지문날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역 정보통신운동단체인 <정보통신연대 INP>는 지난 9일 저녁 6시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 국민의 무감각이 큰 문제

<인구'관리의 권력관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 정송일(정보통신연대 INP 회원)씨는 "주민등록제도의 쟁점은 '인구' 기록의 내용과 관리방식 그리고 사용방식"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과 분산관리하는 것의 엄청난 차이"를 강조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효율성'보다는 '프라이버시'라는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는 것에 비해 우리는 권력기구의 효율성이 인권을 우선하는 통합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도둑과 간첩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사용방식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반인권적인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에 무감각해 있는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강제지문 날인제도는 "국가권력이 국민을 단순한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새주민증은 지문을 전산화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전자주민카드 수순 아년가

그는 또 이번 플라스틱 주민증은 "그 재질이 얼마전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된 전자주민카드와 같은 것으로 거기에 IC칩만 입히면 전자주민카드가 되는 것이며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위해 각 읍면동사무소에 갖춰놓은 기계에 사진과 지문을 입력함으로써 사실상 전자주민카드로 가기 위한 길목인 듯한 어떤 묘모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INP의 한하늘씨는 "주민전산화 작업은 유통회사에서 상품을 관리하듯 인간을 물건이나 상품 이외의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정보사회 파시즘으로 가는 걸음마 단계"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전산화될수록 국가권력은 강화되며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권력기구의 무자위적 정보수집과 통합을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않으면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연대투쟁 통해 일부 복직약속 등 승리> 군산노동부 앞 80일 천막철수

군산노동사무소의 사측 편들기 편파행정에 항의하며 80일째 천막농성을 벌여왔던 '편파노동행정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비대위)'가 지난 8일 천막을 걷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끈질기게 투쟁해온 비대위는 편파행정의 책임자 이달신 군산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과 공현철 근로감독관을 징계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대일·대호물류 이성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 연대하면 힘이 커진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아특수강의 원직복직과 군산대 소비조합 식당종사자의 원직복직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이에 대해 군산노동사무소가 문제해결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각 사업장의 직접적인 연대를 중심으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문제에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해 싸웠던 이번 투쟁은 좁은 지역사회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연대함으로써 더 큰 힘을 발휘한' 모범적 선례를 남겼다.

한편 비대위는 11일 오후 3시 군산노동사무소 앞마당에서 80일간의 천막농성을 정리하는 집회를 가졌다.

### [ 행사와 동정 ]

<박원순 변호사 초청강연>

## '한국시민운동의 오늘과 내일'

- 때 : 6월 22일(화) 오후 7시
- 곳 : 신희중앙회전북지부(근영여고 앞 백제로변)
- 주최 :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준) (0652-232-7119)

###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자료> 기아특수강 체불임금 소송 판결문(요약) 임금포기는 노사협의 거처도 무효

[편집자주] 기아특수강의 해고노동자들이 회사관리인을 상대로 낸 체불임금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은, 임금의 인하나 포기는 노동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조건(그것이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에 의해서도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데 의의가 있다. 주요 부분을 간추려 실는다.

사건: 98가소34408 임금  
 원고: 이필곡, 채법석  
 피고: 정리회사 기아특수강의 관리인 한국산업은행, 관리인대리 전선기  
 주문: 피고는 원고 이필곡에게 금 9,456,920원, 원고 채법석에게 금 5,585,0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11. 2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판단  
 가. 상여금 반납 결의의 법적 성격  
 (1) (중략) (2) 그러나 위와 같은 상여금 반납에 관한 노사 합의 또는 개별 동의를 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확정적으로 상여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중략)

(3)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여금 반납에 관한 노사 합의 또는 개별 동의로 인해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않기로 한 1997년도분 상여금과 1998년도분 상여금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로서는 적어도 1998년도에 정리해고를 당하였거나 희망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위 체불 상여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 우선 이유 없다.

(3) (중략)

나. 상여금 포기의 유효성  
 (1) (중략)  
 (2) 상여금 포기에 관한 개별 동의의 유효성  
 무릇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하여 이를 받지 않기로 하든가 이를 포기하는 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801 판결 참조),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근로자 스스로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임금의 포기가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

임금을 포기하는 일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에 한하여 유효하다.

으로 존재할 때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1998. 9. 초순경 한 상여금 반납에 관한 개별 동의를 원고들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서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당시 소외 회사가 '우리의 결의'라는 문서에 서명을 구하는 데 대하여 재직 중 정리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까 염려한 나머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이에 서명하였다고 보여질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상여금 반납에

관한 개별 동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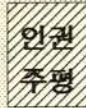
(3) 상여금 포기에 관한 노사 합의의 유효성

(중략), 노동조합의 협약체결권도 무제한일 수는 없고, 회사의 도산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라도 임금의 인하나 임금의 일부 포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총회나 조합원투표에 의한 특별수권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개개의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미불임금의 (일부) 포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집단적 수권만으로는 부족하고 개개 근로자로부터 사전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수권을 받은 한도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 등 집단합의 방식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사전 또는 사후에 포기하더라도 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집행부가 1998. 1. 19.경 사용자측과 1997년도에 미지급된 상여금과 1998년도분 상여금을 회사에 반납하는 데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한 내용의 노사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중략) 1998년도분 상여금에 관하여서도 사전에 조합원총회나 조합원 투표에 의한 특별수권이 없었던 이상 역시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4) 신의칙 위반  
 또한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상여금 반납에 관한 노사 합의나 개별 동의에 이르게 된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1998. 9. 30. 정리해고를 하였거나 그 전에 실시한 희망퇴직제에 따라 희망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대하여서까지 위와 같은 상여금 반납에 관한 노사 합의 또는 개별 동의를 이유로 체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신의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중략)  
 1999. 4. 28.  
 판사 김영하



# 벌레로 살다간 한 인간의 이야기 속에

## 감추어진 메시지 읽기 박병덕 (전북대 교수·독문학)

〈평화와 인권〉에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이제까지 실린 글들과 비슷하게 인권 문제를 시사성을 지닌 현실 문제와 연관지어 다루면 되겠지 하고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했다. 민주 사회에서 통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야기되는 국민의 알 권리, 비판할 수 있는 권리, 저항권 등과 관련하여 최근에 터진 대형 의혹 사건들에 관해 쓰면 시의성도 있고 관심을 갖겠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과 그 주변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진 고금웃 로비 의혹 사건, 민심보다는 권력을 불잡기 위해 정치권이 쏟아 부은 과도한 선거비용 의혹 사건, 엄정한 공권력의 상징이어야 할 검찰의 조폐공사파업유도 의혹 사건. 그 사건들의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추적하여 그 의미를 밝히는 글을 쓰는 것도 나름대로 뜻 있는 일일 것 같았다. 그 의혹 사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궁핍한 시대 상황과 맞물려, 상식을 지닌 보통사람들, 특히 억눌리고 굶주린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치명적인 대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건들에 대해 매스컴에서 다룬 수준을 넘어서는 글을 쓸 자신감이 수 없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제까지의 글과는 좀 다른 성격의 글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 <변신>의 설득력

사실을 말하자면 원고 부탁을 받은 맨 처음 순간부터 이상하게 자꾸 카프카의 소설 〈변신〉 이야기가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인권 문제와 연관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변신〉 이야기가 왜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녔

는지 그 이유가 어렵잖이나마 드러난 것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일이었다. 허구적인 문학작품인 〈변신〉은, 인간의 절대적인 존엄성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헌법의 추상적인 세계에서와는 달리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 세계에서는 자본과 소유에 의해 지배당하는 인간은 결코 존엄성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을 그 어떤 사회과학자적보다도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기 때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도, 그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할 수도 없다.

문이다. 인권 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성은 신성불가침한 것."(그리고 인간이 존엄한 것은 권력이나 부를 소유해서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다. 인간은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한 것이다.)이며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교환가치만이 중요한 사회, 능률과 업적만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회,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도, 그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할 수도 없다. 경제적 기능을 상실한 채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아무 것도 아닌 무용지물이며 벌레와 다름없는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하다. 〈변신〉이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작품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주인공 그레고어 잠자는 현대사회의 평균인간인 세일즈맨이다. 이야기는 어느 날 아침 꿈에서 깨어나 거대한 벌레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소름끼치는 사

건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벌레로 변한 이후 주인공과 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사건 진행이 아주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그려지며, 주인공은 결국 벌레로 변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는다.

### 에필로그와 우리의 자화상

이 이야기의 핵심은 변신의 의미에 있다. 벌레로 변하기 전에는 그레고어가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의 부양을 떠맡은 가정의 기둥이었다. 그러나 변신 후 그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변신이 지니는 결정적인 의미는 경제적 능력의 상실인 것이다. 변신 후 일어난 신체상의 특징적인 변화는 소유능력과 경제적 기능을 상징하는 팔과 손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밥벌이를 한다. 그들은 그레고어를 벌레 취급한다. 주인공이 죽은 이후의 상황이 묘사된 에필로그 부분은 나머지 가족들이 희망찬 내일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는 밝은 분위기로 끝난다. 그러나 그 밝게 묘사된 것의 이면에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냉혹한 괴물로 변한 우리의 자화상이 감추어져 있다.

인간이 벌레로 변한 사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변신〉을 일상적인 경험 세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환상과 현실을 서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상호침투시킨 그 충격적 서술기법을 통해 작가가 우리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고통스런 사고과정을 거치면서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그 메시지를 우리의 현실과 결부시켜 해석할 때만이 우리는 이 작품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평화와인권

##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52 호

1999년 6월 22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민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전.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전북 노동자 단식농성

### "정리하고 중단, 검찰공작 사과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엄경석) 소속 60여개 단위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다섯명 열명 단위로 번갈아가며 사흘씩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매일 오후 6시에는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농성장 앞에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 피해자들의 단식투쟁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7일 <김대중 정권 실정 규탄 및 노조탄압 공작 규탄대회>를 전주 코야백화점 앞에서 400여명의 조합원과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의 참여 속에서 가졌다. 이어 18일에는 검찰의 파업유도, 노조탄압 공작 관련 책임자 구속처벌, 공안탄압의 희생자인 구속자 석방 및 수배조치 해제, 공안대책협의회 해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전주 중앙성당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17일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규탄대회를 마친 뒤 국민회의 전북도지부까지 500여 미터를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경찰과 치열한 뽀싸움을 벌이면서 굳게 문을 걸어잠근 전북도지부 진입을 시도했고 국민회의 현판에 스프레이로 X자를 새겼다.

### 만도기계 파업유도 의혹 제기

이날 집회 규탄사에서 만도기계 노조 익산지부 정병욱 선전부장은 "지난해 만도기계에 대한 무리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노사가 맺은 고용안정협약서를 갑자기 뒤집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의 노조탄압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사태가 "김대중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

을 원천부정하는 전근대적 노동정책을 강요한 데서 비롯됐다"며 "전북지역의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익산지부, 군산의 기아특수강에서 벌어진 무리한 구조조정 과정을 볼 때 검찰의 개입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안적 노동정책을 전면중단하고 공안대책협의회를 즉각 해체할 것 △조성훈, 박종철씨 등 수배중인 북지역 노조지도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현대자동차, 기아특수강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철회, 정리하고 자 원직복직 조치 즉각 실시 △대통령의 사과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 <현장스케치>

##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서해교전 이후 언론은 온통 햇볕정책 찬반론으로 물들어 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대중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날릴 듯했던 파업공작 얘긴 온데 간데 없다. 그러나 또다시 예전처럼 유아무야 넘어갈 수 있을쏘냐.

몇 년만에 다시 전주 중앙성당에 천막을 친 민주노총전북본부의 단식농성이 나흘째를 맞고 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한걸음에 달려온 민주택시연맹 조합원들. 그리고 연대 메시지를 전하러 온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이 벌써 천막 안을 메우고 있다.

"그 동안 그럴 것이라 짐작은 했었지만 정말 검찰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니 열받아서 하루도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노동자들에게 파업은 늘 목숨을 건 최후의 선택입니다. 노동자들이 최후의 선택으로 파업을 선언하면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집단지기주의'로 악선전을 하며 노조를 궁지에 몰아넣었는데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난 거죠. 파업유도에 해고, 감옥행, 공안검찰은 정말 가정파괴범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특검제를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힘을 우습게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저들이 저럴 수 있겠습니까?" 군산의료원 노동조합 류용희 위원장(35)이 터뜨리는 분노다.

"특검제 즉각 실시! 가정파괴범 공안검찰 사법처리! 노조파괴 공안대책협의회 즉각 해체!" 필러이는 필라 앞을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글씨를 새기기도 하듯 유심히 바라본다.

### 60여 YS시절 정치수배자 300여일 농성 하루빨리 조건없는 수배해제를

김영삼 정권 시절에 정치적 이유로 수배돼 아직까지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수배자들의 거점 농성이 지난 6월 4일로 300일을 맞았다. 두 번째 여름도 함께 맞았다. 그 사이 농성자들은 수배해제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도 다방면으로 벌여오고 있다. 정치수배의 근원이 바로 국가보안법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 시절 시작된 이들의 수배생활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에 이른다. 지난 2월 22일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 당시 법무부는 이들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조건없는 수배해제 조치 대신 '자수하면 관용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반면 농성자들은 '구 경관하의 정치수배자 전원'에 대한 불구속수사와 기소유예' 방침을 명확히 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해왔다. 불교 조계종 중앙 종회와 민교협 등 이름있는 단체들이 대통령에게 탄원서도 써 보냈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도 국민적 화합이란 명분으로 조건없이 석방한 김대중 정부에게 60여명의 청년 정치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는 아직 정치적 고려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대검 공안부 소속 일부 검사들은 불구속 수사를 통한 선별구속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조건없는 수배해제 요구는 현재로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성단 측은 최근 결성한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수배자의 조건없는 전원 수배해제를 위한 대책위> (공동대표 이창복 외)의 정치권 로비를 통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정치수배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피해자 대회' 등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 채불임금 달라는데 폭력강패?

#### 기아특수강, 해고자 폭행!

10개월째 복지투쟁을 하고 있는 군산기아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이 서울 본사앞으로 항의농성을 하러 갔다가 사측이 동원한 경비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채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신림동 기아특수강 본사 안으로 들어가려던 노동자들을 용역강패로 보이는 경비원 10여명이 이들을 막으며 다짜고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권태균씨 등 세 명이 팔의 인대가 늘어나고 앞니가 흔들리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들이 요구한 채불임금은 얼마 전 법원에서 채불임금 전액지불이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기아특수강 해고자 복지 투쟁위원회(해복투)는 이들 폭력 경비원들을 구로경찰서에 즉각 고소했다.

해복투는 현재 10개월간 끌어온 복지투쟁을 단판짓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서울 본사로 올라가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해복투는 정리해고자 14명과 부당해고자 2명에 대한 원직복직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 본사와 군산 공장 양쪽에서 출근투쟁을 계속 벌일 예정이다.

### <DJ정부 1년, 국보법 보고서 >

김대중 정부 집권 1년(98.2.25 ~ 99.2.24) 동안의 국가보안법 적용실태와 사상탄압의 실상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와 눈에 띈다.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입장 변화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실태 △보안관찰법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 등의 내용으로 일련의 사상탄압체계와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지난 해 6월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의 젊은 인권활동가들과 박사과정의 연구생, 변호사 등이 4개월여 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다.

- 위 은 이 : 민변, 민가협,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 구입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 【 행사와 등정 】

'이 땅에 살기 위하여'

### 제2회 실업자학교

- 때 : 6월 22일(화) - 26(토) 오후 6:30
- 곳 : 서학동 성당 교육관
- 주최 : 전주 실업자취업지원센터(0652-232-9191)

###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 후원계좌 · 국민은행 512-21-0065-982
- 우체국 402297-0062450
- 전북은행 535-21-0304454

### <자료> 1999년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집자주)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이하 엠네스티)는 지난 16일 98년도 전세계 인권상황을 담은 '1999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남·북한 인권상황 내용 전문을 번역해 두 차례에 나누어 실는다. 이번 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음 호 - 대한민국.

북한정부가 국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인권상황을 충분히 조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감추어져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죄수들의 상태도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 식량부족으로 고통

북한은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빈약한 경제정책에 의해 야기된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기아와 기아로부터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구호기관들은, 북한이 많은 지역에 접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부족의 실질적인 결과를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러 독립적 구호기관과 비정부조직들의 보고에 따르면, 식량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와 경제적 생산력에 비해 배급되고 있으며, 인구 중 가장 열악한 계층에게까지 식량구호의 손길이 닿고 있지 않다고 한다.

9월, <국경없는 의사회>는 북한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빈곤한 아동들을 포함하여, 구호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조사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거부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투병성이 결여되어 있고 인도주의적 구호 전달의 책임감이 없다며 비판했다.

### 북한, "국제사회 태도 변화없다"

7월, 북한 정부는 최고인민회의(sp)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됐다고 발표했다. 최고인민회의는 김일성 전 주석이 1994년 사망한 이후 열리지 않았었다. 새 최고인민회의는 9월에 소집됐으며, 주석과 부주석의 지위를 폐지하는 헌법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된 헌법은 김일성 전 주석이 "영원한 주석"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선함으로써 그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입증시켰으며, 김정일은 국가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김영남 전 외교부장은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국외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로의 접근과 정보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제한은 인권실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정보수집을 어렵게 했다. 인권침해가 국제사회에 의해 충분히 조사되지 못하면서 북한주민들이 가려진 인권침해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8월에, 유엔 산하 차별금지과 소수민족 보호위원회는 북한에 유엔이 제시하는 절차와 임무에 협력하고, 국내의 인권실태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국가와 국제적 인권 조사기관들의 의견을 풀 수 있도록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북주민 저항권 상실 의혹

북한 정부는 다시 한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의 의무에 따른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시민적 정치

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으로부터 탈퇴하겠다는 1997년의 발표를 반복했다(1998년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참조). 10월, 북한정부의 대표는 국제엠네스티에게, 북한은 유엔 인권위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했으나 유엔 산하 차별금지과 소수민족 보호위원회의 위원들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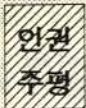
북한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따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5월에는 이 보고서의 심사과정에 참여했다. 이것은 아동권리에 관한 조약의 이행상황 보고를 중단하겠다는 1997년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1998년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참조).

### 경제고통, 구금 조건 악화

몇몇 소식통에 따르면 수천명의 정치범들이 구속·감금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보고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이 구금조건을 더욱 악화시켰고, 수감자들의 극심한 식량부족의 결과를 낳았으리라는 추측이 있다. 여러 차례의 사형집행이 진행되었다는 보고가 있지만 독자적인 확인은 불가능하다.

보고에 따르면 수백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이웃 나라로, 대개 중국으로, 건너간다고 한다. 그들은 중국과 북한의 보안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되돌려질 위험을 무릅쓴다. 보고에 따르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몇몇 사람들은 구금된다고 한다.

9월, 국제엠네스티는 김정일에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탈퇴한다는 이전 발표를 재고할 것, 북한 위원회가 국제 인권기준을 이행할 것,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보고의무를 포함한 조약의 의무에 따를 것, 유엔 인권기구와의 대화를 진전시킬 것, 독립적 인권기구들의 접근과 조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 신 미일안보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제정은 한반도에 대한 미일의 선전포고!

방 용 승 (전북청년노동자회 회장)

수백만의 무고한 인명을 앗아간 6.25가 며칠 후면 49돌을 맞는다. 수백 수 천명도 아닌 수백만이 죽어간 인권유린의 참상을, 그 끔찍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말기를 비는 마음이야 다 같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한가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의 완벽한 실현을 위한 미국과 나토의 식민지 확보 전쟁의 서막이라고 평가는 유고에 대한 폭격이 멈춘 이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몰리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렇지 않은 전쟁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제국주의자들의 이해에 따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무력충돌이 일어난 모든 곳을 보면 그곳에 언제나 미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그랬고 그리스내전, 레바논내전, 콩고내전 등에 개입했던 것은 물론이고, 니카라과,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진보적인 정권을 전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다했다. 미국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정변에서는 100만여 명의 민중민주인사들이 희생됐다. 이렇듯 미국의 이익에 필요하다면 언제 어느 곳에서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유고에서 나토를 끌어들이듯 일본을 끌어들이며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너무 심한 비약인가?

패전국 일본을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해체작업을 수행하던 미국이 돌연 정책을 바꿔 군수공장 등을 제차 가동하며 일본을 후방 병참기지로 구축한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현재 준비되고 있다면 놀라겠는가? 그것이 바로 최근 일본의 회에서 제정한 '신미일안보협력지침' 관련 법안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무려 1059개 항목을 충족·제정하기 위하여 일본의 모든 국력을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것

**6.25 49돌을 며칠 앞둔 6월, 우리 모두는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죽어갈 사람들이 누구일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이 법안의 내용이다. '주변사태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법은 철저히 전쟁준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 본토를 침략할 경우에, 그 침략을 저지할 경우에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못박고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고 주변국의 유사시에 자기 나라 밖으로 군대를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사'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같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은 또한 총리가 직권으로 전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쟁을 하는데, 국민적 동의나 국회의 동의절차조차도 필요없게 만든 것이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나토가 손잡듯 이 법의 제정은 미일의 초국적자본과 군부세력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이런 즈음에 서해안 교전이 벌어졌으니(그것이 돌발적인 충돌이거나, 어떤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의 대응은 어떠한가? 지

난 5월 8일 '신미일안보협력지침' 분쇄를 위한 집회가 서울 탑골 공원과 일본에서 각각 열렸다. 범민련 남측본부,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서울대회에는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열리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어머니 7000여명이 모여서 '더 이상 내 자식들을 전쟁의 희생물로 만들 수 없다'는 구호를 내걸고 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입법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의 최대 희생자가 될 한국의 민중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일본에서 반대투쟁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

는 것이다. 우리의 답답함이 여기에 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민족의 자주권이 훼손되거나 외세에 의한 일방적인 전쟁이 일어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권력자도 자본가도 아닌 민중들과 민족민중운동세력 자신이다. 따라서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민족자주와 투쟁이야말로 가장 철저하게 민중의 계급성을 옹호하는 투쟁으로 되는 것이다. 6.25 49돌을 며칠 앞두고 있는 6월, 우리 모두는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죽어갈 사람들이 누구일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도 초국적자본의 이해를 앞세운 제국주의자들이 벌일지 모를 추악한 전쟁에서 말이다. 그것은 실제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류역사상 가장 야만스러운 시대였다는 20세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는 전 민족·전민중의 대단결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위협을 저지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와 평등이 실현되는 21세기를 열어나갈 최전선에 내맡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53 호

1999년 6월 29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미군이 평화를 위협한다

### 25-28일, 미군기지 대응 국제회의 열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한 미군기지 관련 국제전략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성공회 성가수녀원과 군산, 평택을 돌며 진행됐다.

#### SOFA 앞에 환경지침은 휴지

26일과 27일 성가수녀원에서 진행된 발제와 토론에는 한국에서 김용한, 이현철씨, 외국에서 필리핀대 교수인 윌슨 벨로와 폴란드 심불란씨, 미국의 조셉 거슨씨, 피지의 닉 맥클렌씨 등 7개국 10여명이 참여했다.

녹색연합 이현철씨는 <미군기지 한국 환경보고서> 발제에서 "지난 98년 5월 주한미군이 발표한 환경기준안(EGS)이 1992년의 미국방성 해외환경 지침서(OEBDG)의 '특별환경기준'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협정(SOFA)이 이 환경지침보다 우위에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환경기준안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 미일연합군이 우려된다

<위태로운 일본평화헌법, 새로운 미일군사협력체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카즈히코 타마키(일본 Peace Depot: 평화 역)씨는 지난 5월 24일 일본 참의원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킨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신가이드라

고통받고 있고, 미국이 경제원조와 고용의 댓가로 핵실험 등 독점적인 군사적 접근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 군산·평택 미군기지 시찰

한편 미군기지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7일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구체적인 합의나 행동에 대한 결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번 행사는 평화운동단체인 포커스 그룹(Focus on the Global South)이 주최했으며, 녹색연합과 우리평미군기지찾기전국공동대위가 공동주관했다. 회의 참가단 20여명은 28일 군산미공군기지와 평택의 오산공군기지를 방문을 끝으로 회의일정을 마감했다.

## 용역강패 쓸 돈은 있다

### 기아특수강, 해고노동자 자극 집단폭력사태 유도 의혹

(주)기아특수강이 최근 체불임금 지불과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년 가까이 투쟁하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에게 연이어 용역강패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28일 오전 8시 반께 군산 기아특수강 공장 정문 앞에는 150여명의 직원들과 용역강패로 보이는 10여명의 등치들이 정문 앞을 메우고 있었다. 이들은 갑자기 회사 맞은편 해고자들의 천막 앞으로 몰려와 해고노동자 김상배씨와 조성욱씨를 다짜고짜 20여분간 폭행했다. 해고자들이 119를 부르자 그제서야 폭력을 휘두르던 이들은 회사 앞으로 물러갔다. 폭행당한 김상배씨는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고 조성욱씨는 이마와 눈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한편 집회신고를 하면 항상 대기하고 있던 군산경찰은 회사측이 1주일치 집회를 신고한 첫날인 이날 한 명도 나타나지 않자 폭행상황이 종료되자마자 현장에 나타났다.

김상배씨는 "해고자 중 많은 사람이 현재 집행유예기간인 점을 이용해 폭력사태를 유발한 것 같다"며 "법원에서 판결받은 체불임금은 못 쥐도 용역강패 쓸 돈은 있다 보다"며 개탄했다.

한편, 28일 군산지방노동사무소는 해고자들에게 3개월간을 끌고간 '체불임금확인서'를 드디어 발급했다.



# “또 하나의 불평등 협정”

## 민교협, 한미투자협정 반대 성명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 의무상영일) 축소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투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4일 민교협이 한미투자협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미투자협정은 1994년 미국에 의해 제안됐고 IMF 경제위기 이후 외환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도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민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외자유치 명목의 한시적·편의적 협정체결 △ 협상과정의 불투명과 비민주적 진행 △ 협상 자체의 불평등성 △ 각종 의무규정 폐지로 인한 해당산업의 궤멸 가능성 △ 자원의 사회적·재분배와 지역간 균형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외면 △ 공기업의 외국자본 인수로 발생하는 사회적 역기능 등 6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교협은 “한미투자협정은 또 하나의 불평등협정으로서 투자자가 반사회적, 반노동적, 반인권적, 반환경적인 맹목적 이익본능을 추구할 권리”라고 비판하면서 “한미투자협정의 즉각 중단을 위한 전국적 항의와 반대를 공론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현정부 총체적으로 문제”

## 25일, 전국사제단 성명 발표

각계에서 현정부의 총체적 국정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도 성명을 발표했다. 사제단은 “정권교체 1년 반이 지난 지금, 현정부의 지지부진한 각종 개혁과 정책들의 실패, 특권층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정의의 혼탁 등이 맞물려 민심의 이반현상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별검사제 실시와 부패방지법 제정 △공안기구 축소와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저소득층과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제도 장치 마련 △과감한 재벌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했다. 사제단은 또 “이러한 조치들이 ‘미봉책’으로만 그쳐서는 안되며 과감한 국정개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1회 전북여성영화제

전북여성단체협의회가 7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전북여성영화제를 연다(오른쪽 상영일정표 참조). 장소는 전북대 문화회관 내 건지아트홀. 입찰료는 2천원. [문의전화 : 0652-231-9675].

# <제1회 전북여성영화제 상영일정표>

날짜 시간	7/1(목)	7/2(금)
	11:00 개막식 11:30 아름다운육체 1:00~2:00 ‘여성영화포럼’	12:00 고추말리기 종이나비 도형일기 있/다없/다
2:30	행복의 거리	나의 페미니즘 팝의 여전사
4:30	전사의 징표 작은보석들	셀리아
6:30	드림걸즈 아름다운 육체	전사의 징표 보름달 작은 보석들
8:00	나의 페미니즘 팝의 여전사	밤이 기울면

# 【 행사와 동정 】

- ▶ **장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7차 토론회**  
**전라북도 민선2기 1년 평가 토론회**  
■ 7. 2(금) 오후 2시 / 전주상공회의소 대강당  
주최: 전북시민운동연합 (0652-283-8043)  
(사) 호남사회연구회
-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실 개소식**  
■ 7. 2(금) 오후 6시~9시  
서울 삼각지 인권연대 사무실 (02-749-9004)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자료> 1999년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 ② 대한민국

[편집자주]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이하 엠네스티)는 지난 6월 16일 98년도 전세계 인권 상황을 담은 ‘1999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남·북한 인권상황 내용 전문을 번역해 두 차례에 나누어 실는다. 지난 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번 호 - 대한민국.

### 양심수 수백명

양심수들을 포함하여 150여명 이상의 정치범들이 특사로 석방됐다. 그러나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은 감옥에 남아 있다. 약 400명 정도가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됐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구금되거나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양심수다. 경찰들의 학대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감옥의 상태에 대한 보고가 있다. 최소한 37명이 연말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집행은 없었다.

이전에 정치범이기도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2월 취임했다. 김 대통령의 인권 개혁에 대한 공약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권교육을 증진시키며, 여성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법과 실제적용을 보장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북한과의 민간교류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소위 “햇볕정책”을 발표했다.

### 경제위기와 대량해고

한국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심각한 경제위기의 결과로 일자리를 잃었다. 수천 명의 공식기록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월급도 받지 못한 채로 일자리를 잃었고 한국에서 떠나라는 압력을 받았다. 여성들은 종종 남성들보다 먼저 직장에서 쫓겨났다. 실직에 대한 대중적인 항의와 파업행위는 경찰의 강경조치와

체포의 결과를 낳았다.

2월에, 국회는 처음으로 대량해고를 허락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정부에 의하면 1999년부터 교사들의 노조결과 공무원의 협의기관 설립을 허가할 것이라고 한다.

4월에,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거나 인권침해를 하도록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개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안기부개혁 · 보안법손질 안돼

7월에, 법무부는 공산주의나 좌의 사상을 포기하는 “사상전향” 진술을 정치범들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강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사상전향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특정 부류의 정치범들은 차별대우로 고통받고 조기석방을 거부당했다. 정부에 따르면 모든 정치범들은 조기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많은 죄수들은 이를 거부했는데, 준법서약서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계속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국제적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법률을 존중하라고 강요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9월에, 김대중 대통령은 엠네스티의 파견위원에게 국가보안법의 “유해한 요소”(이전 엠네스티 연례보고서 참조)는 가까운 미래에 재검토돼야 하지만 연말까지는 힘들다고 말했다.

### 인권위 독립성 부재 우려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데에 목적을 둔 인권법 시안이 9월에 다듬어졌다. 그러나 시안에는 제안됐던 위원회의 독립성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이나 충분한 힘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염려가 있다.

150명 이상의 정치범들이 3월과 8월 두 번의 대통령 특사로 석방됐다. 석방된 이들 중에는 박창희 교수, 진관스님, 장기수 강희철 씨(1998년 엠네스티 연례보고서 참조) 등이 포함돼 있다. 8월 사면 이후에 석방된 죄수들은 정치적이거나 반정부적인 행동에 참가하면 재투옥될 수 있다는 위협을 받았다.

양심수를 포함하여 360여명의 정치범들이 8월 사면 이후에도 여전히 구금돼 있는 상태다. 그들은 “준법서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석방되지 않았는데 그들 중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간첩죄로 체포되어 28~30년간 구금되어 있던 17명의 고령의 장기수들도 포함되어 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들은 공산주의적인 관점 때문에 석방되지 않았다. 이들 대부분의 건강상태가 나쁘고 독방에 갇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69세의 우용각 씨는 40년 동안 구금됐고 뇌졸중으로 인한 근육마비로 고통받고 있다. 69세의 홍명기 씨는 36년간 구금돼 있었고, 심장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1978년과 1985년 각각 불공정한 재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상록 씨와 강용주 씨를 포함한 다른 국가보안법 관련 죄수들은 계속 구금돼 있는 상태다.

### 국가보안법 남용

학생, 젊은 노동자, 출판업자 그리고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약 400명의 사람들이 한해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됐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수이고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죄라는 모호한 죄목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단기징역이나 징역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상관 씨는 북한 여성들의 삶과 한국의 장기수를 다룬 두 권의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4월에 체포됐다가 재판을 받고 풀려났다. 학생 하용준 씨는 컴퓨터통신 게시판에 사회주의 문건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8월에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젊은 활동가 김종박 씨는 좌익적 원리에 기반한 공동체 그룹인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을 이끈 혐의로 10월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

“실직에 대한 대중적 항의와 파업에 경찰은 강경대응과 대량체포로 응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경찰들이 비무장 시위대열을 구타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만도기계파업)  
 “김종박씨가 좌익적 단체를 이끈 혐의로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망명 요청자들은 망명을 요구하는 데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98년 연말에 최소한 37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있다.

### 통일인사 구속

로마 가톨릭 신부인 문규현 신부는 8월에 체포돼, 정부가 승인한 북한 방문기간 동안 북한을 찬양·교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방문 목적을 어기고 통일축전에 참가하고 김일성 전 주석의 묘소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78세의 강희남 목사는(1998년 엠네스티 연례보고서 참조) 3월에 특사로 석방됐다가 서울대에서 열린 통일 축전을 조직한 혐의로 8월에 다시 체포됐다. 이들 두 사람은 10월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 노동자·양심수 양산

양심수를 포함하여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절 집회와 당국에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3월과 7월 두 번의 파업 이후 체포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민주노총(KCTU)이 파업을 이끌었는데, 이들은 대량체포와 부당한 사회복지제도, 불법체고를 저지른 사업장의 고용주들을 정부가 기소하지 않는 것과 그밖의 관련된 사안들에 항의하였다. 민주노총의 사무처장 고용주 씨는 10월에 불법파업을 이끈 이유로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금속노련의 위원장인 단병호 씨는 10월에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연말에 열릴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구금돼 있다. 그들은 양심수다.

### 부당처우와 옥중 사망

더욱이 사법당국이 정치범과 일반범죄 용의자들을 체포한 뒤 잠을 재우지 않고 위협했으며, 구타했다는 보고가

있다. 최소한 2명의 수감자들이 부당한 처우로 인해 옥중에서 숨졌다. 박성종 씨는 2월 서울의 성동 구치소에서 육체적으로 불구가 되어 죽었다. 그는 갈비뼈가 3개 부러지고 뇌출혈로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한 병리학자에 따르면 이러한 손상은 외부의 상해에 의해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경찰, 과도한 무력사용

많은 경우 경찰들은 대규모의 시위대열들에 대해 대량체포와 과도한 무력으로 대처했고, 많은 부상자들을 냈다. 9월에, 2,400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됐고, 1만 명의 폭력적인 경찰들이 만도기계 7개 공장의 파업을 진압했을 때 아이들도 포함하여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부상당했다고 보고됐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경찰들이 비무장 시위대열을 구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많은 수용소에서 죄수들이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감과 사슬로 묶이고 구타당했으며 독방에 장기간 감금됐다. 그들 중 장기수들과 여성 정치범들은 독방상태가 연장되기도 했다. 국외주방 전까지 억류되어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서울의 이주자 수용소 직원들에 의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한다. 감옥으로의 의약품 보급 또한 계속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성들은 감옥 안에서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 이주노동자 고통

최소한 37명의 죄수들이 연말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8월에, 두 명의 파키

스탄인 모하메드 아야즈와 아미르 자말이 불공정한 재판 후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9월 김대중 대통령은 엠네스티에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에 반대하지만 폐지에 관한 공식적인 논쟁을 시작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망명 요청자들은 망명을 요구하는 데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적용사례가 없다. 이주 관리국은 신청자들이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인권침해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최소 10명의 요청자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 “사형제도 폐지해야”

엠네스티 파견위원은 2월, 7월, 9월에 한국을 방문했다. 9월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엠네스티 사무국장은 △남아있는 장기수를 석방하고 준법서약서 서명 강요를 그만두고 △국가보안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10월에, 엠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이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한에 대한 엠네스티의 보고는 1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담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한 기준들 제안(5월), 여성차별 철폐 위원회에 보고할 문서인 「한국의 여성인권」(6월), 그리고 엠네스티의 한국정부에 대한 문제제기. 외교정책과 인권문제에 대한 권고(9월).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54 호

1999년 7월 6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 각계인사 성명·‘운동본부’ 결성될 듯

지문날인제도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지문날인 거부운동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 “주민증 경신사업 반대”

지난 1일 김기중(변호사), 김승환(교수), 문정현(신부), 서준식(인권운동가) 등이 참여한 ‘지문날인 거부사회인사 1차 선언’(150인)이 발표됐다(전북 선언자 명단은 2면에).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지문날인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선언문을 통해 “우리 국민은 무려 30년 동안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으면서, 그리고 지문이 찍혀있는 주민등록증을 항상 소지하면서, 권력에 대한 복종을 배워왔다”며 “제일한국인의 지문날인거부운동은 국제적인 지지를 받았고 우리 국민과 정부도 거부운동을 지지한 반면, 우리나라에서 지문날인제도는 법률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북, 80여명 반대서명

또한 이번에 플라스틱 주민증을 만들 때 채취한 지문이 모두 디지털로 전환, 전산화되는 점에 대해서도 “지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경찰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여 국민을 통제·감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언자들은 이러한 거부 이유를 밝히면서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

더라도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이며, 이러한 불복종 운동은 국민이 국가의 통제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진정한 주인으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지문날인 거부 참여인사들과 인권운동사랑방, 사회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지문날인제도 폐지를 위해 (가칭)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지문날인제도 폐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이미 민주화운동 원로 등 80여명이 지문날인 반대 서명에 참여했으며, 전북지역의 정보통신운동체인 정보통신연대INP도 지문날인을 포함한 정부의 통합주민전산화 작업에 반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다.

##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 거센 탄압 맞서온 전북대노조 ‘결성10주년’ 맞아

지난달 26일 창립 10주년을 맞은 전북대학교(총장 신철순) 노동조합 유수만 위원장은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묻는 질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라고 고만 대답했다.

지난 93년부터 한 해 건너 한 차례 꼴로 100일이 넘는 장기 투쟁을 벌여온 유 위원장에게 싸움의 내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끝까지 투쟁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원칙이 됐다. 93년에 76일간 파업을 벌여 대학직원 ‘재임용제’를 ‘상용제’로 바꾼 때도 그렇고, 96년 160일 동안 파업을 벌인 끝에 ‘노조전임자’를 확보하고 조합활동을 보장받은 때도 그랬다.

지난달 29일 창립 기념식은 현재 70여일째 벌이고 있는 철야농성투쟁을 감안해 기념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투쟁결의대회 형식으로 치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과 몇몇 지지자들을 초청해 간단한 막걸리 회식을 벌였지만, 기념식을 갖기 전에 조합원들을 불러 현재 투쟁상황을 설명하는 교육을 세 시간 동안 가졌다.

몇 명의 총장이 바뀌면서도 대학측은 노조에 대한 가혹한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노조측은 그 사례로 유 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관과노동행정 책임자처벌을 위한 전북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여해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대학측이 위원장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등 울음머리만 해도 벌써 몇 차례 ‘근무지 이탈 징계’를 들먹이고 있다고 밝힌다. 또 단체교섭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대학측이 불법적으로 체력단련비를 삭감했다 전주지방노동사무소가 지급명령을 내렸는데도 모른 채하고 버티고 있다. 노조는 이런 사태들이 반복돼 벌어지고 있는 ‘지성의 전당’에서 투쟁의 방법을 익혔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그들이 계속 우리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한.”

# “한시적 특검제 안된다”

## 전국 197개 단체 국민행동 나서

진행구 검사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 발인' 파문으로 시작된 특별검사제 논의가 5일 현재 한시적 특검제 도입으로 여야 합의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의 19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적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전국 197개 단체가 참여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행동>(국민행동)은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 서울 느티나무 커피숍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한시적 특검제 수용은 국민타개를 위한 술책에 불과하고 권력형 비리의 근절과 검찰 중립성 확보를 위해 특검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 약속을 빨리 이행하라"고 촉구 하고 "민약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저버린다면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행동은 이에 따라 1차 행동으로 '100시간 연속 국민행동-꺼지지 않는 개혁의 불빛'이란 제목으로 7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 동안 서울 환경운동연합 안마당에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다양한 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차 행동은 '완전한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100시간 국민행동 발대식 △특검제와 부패방지법 설명회 △활동가 시국 토론모임 △다양한 문화행사와 더불어 오는 9일 정오에 광화문 네거리 등지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 소규모학교는 구조조정 희생양

## 31개 교육시민단체, 대규모 항의집회

교육부가 최근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일괄적으로 통폐합하려던 계획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항의에 부딪치자 "2002년까지 보유하는 대신 그때까지 각 학교당 100명 이상의 학생을 유치할 것"으로 수정·요구해 해당 주민들과 교육단체들을 환담하게 하고 있다.

지난달 31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오성숙 외 7명·비대위)는 "공교육의 혜택을 지역간 차별없이 균등하게 받아야 할 학생들이 정부정책으로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농어촌 학부모가 대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어이가 없다"면서 "경제논리만 앞세워 농어촌의 지역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통폐합정책을 전면철폐하고 농어촌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정확보와 농어촌 교육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한편 오는 7일 오전 11시 반부터 광화문종합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 ◆ 지문날인 거부 정복 1차 선언자 ◆

김기곤 김봉술 김진화 리수현 문규현 문정현 안봉환 최중수(신부), 백남운 소수용 한상열(목사), 김승환 김의수 양승호 이중호(교수), 강인성 고희석 김연태 김영옥 김중섭 김주환 문만식 염경석 오두희 이송준 임성희 전준형(사회단체)

# 【 청소년 인권캠프 】

인권이 늘~자!

'청소년 인권캠프'로 오세요!

전북지역 중·고등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올 여름 인권과 사귀어봐요.

전하게~

연제 : 99년 7월 22일(목)~23일(금) 1박 2일  
어디서 : 김제 수류성당 교육관  
준비하는사람 : 전교조전북지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궁금한것은 : 0652-231-9331

# 【 행사와 등정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관한 간담회  
■ 7. 7(수) 오후 2시 /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독요 켈터인  
■ 7. 8(목) 오후 6시 / 전주 코아백화점 앞
- ▶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평화를 위한 천주교 미사  
■ 7. 9(금) 오후 2시 30분 / 군산미군기지 정문  
주최: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가톨릭대학생연합

#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인권단체들 “무죄석방” 촉구 서준식씨 선고 무기한 연기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위반, 그리고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씨(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재판은 7월 6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변호인을 통해 "레드헌트를 직접 보겠다"고 밝히면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 국내의 '무죄' 주장 봇물

이에 앞서 국내의 인권단체들은 이번 에 열리게 될 선고공판이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과 정신을 수호하는 편에 설 것인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의 존재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다시금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뒤로 돌리는가의 판가름을 짓는 사건이 될 것"이라며 주목해왔다.

서준식씨는 97년 11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주거침입, 기부금품모집법, 음비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지난 6월 15일 공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받았다.

서준식씨는 지난 공판의 최후진술을 통해, 1회와 3회에서는 아무 문제없었던 인권영화제를 2회 인권영화제에서 만 문제삼은 것은 당시 한총련을 탈퇴하지 말라는 글을 쓴 것에 대한 '검찰의 보복'이자 서준식의 '필화사건'이며, [레드헌트]나 [참된시자] 등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6년이나 보안관찰을 위반한 사람을 갑자기 구속하는 것은 '법 적용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며 재판장에게 "핵심쟁점을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명쾌한 판결문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 "필화사건 보복 아닌가"

한편 서준식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국내외 인사들과 단체들의 성명과 항의가 이어졌다. 국제엠네스티

는 김대중 대통령과 재판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서씨에게 적용된 보안관찰법은 현재 안보에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는 과거 양심수들과 잠기수에게 자의적이면서 비밀스럽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국정부가 서씨에 대한 모든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운동 원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법학교수, 영화인, 언론계 인사 등 194인도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19조(의사표현의 자유)에 현저히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국정부에 다시 한번 통보했으며, 보안관찰법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인권침해법률로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받은 악법"이므로 인권과 법치의 요청에 부합하

지 않는다"며 서준식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했다.

## [->4면에서 이어짐]

자유화, 탈규제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IMF 구조조정 협약에서 합의한 시장개방 약속도 부족해서인지 한미, 한일 투자협정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질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통해 지구상에 파스아메리카를 건설하려는 미국정부와 초국적 자본, 그리고 시장개방과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미망을 좇아 민중의 고통을 담보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열을 올리는 한국 정부의 합작품이 바로 한미투자협정이다. 이제 우리들은 이 정부가 재벌들에 의해 짓눌려왔던 노동자들의 삶을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초국적 자본에 송두리채 내놓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시장독재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여성인권 걸림돌에 '박충근 성희롱 검사'

## 전북여성단체연합 올해의 걸림돌·디딤돌 선정

지난 3일 전북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이강실) 주최로 제2회 전북여성한마당이 동학혁명기념관에서 시작했다. 전북여성한마당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조약>과 헌법에 기초한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96년부터 시작돼 올해 4회째를 맞은 여성주간(매년 7.1~7)의 기념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전북지역 여성운동과 여성인권 향상에 공로가 큰 전북여성상과 '디딤돌'을 선정하고, 여성발전의 저해요인이 된 '걸림돌'을 선정했다. 전북여성상은 농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의 전문가로 지역여성운동과 함께 해온 장순자씨가 수상하였다. 그리고 모범단체상은 '환경을 지키는 여성들의 모임'이 수상했다.

전북여성운동의 '디딤돌'로는 여성실직자에 대한 전국 최초의 실태조사와 연구로 여성가장들의 지원대책 마련에 기여한 남춘호 교수(전북대 사회학과)·이성호 교수(전북대 사회학과), 언론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일해온 허명숙 기자(전북일보), 여성의 성상품화라는 여론을 수렴해 미인대회를 과감하게 폐지한 이호종 교장 군수가 선정됐다.

주최측은 여성발전의 '걸림돌'로 음주상태로 여기자를 성희롱한 박충근 검사 및 동구지청 배석 검사 일등을 선정하고, "선정적인 사진 게재로 여성을 성적대상물로 비하했다"는 이유로 '전북일보' 신문을 선정했다.

인권  
주평

# 시장독재에 맞서 싸워야

고 홍 석 ( 전북대 교수 )

7월 2일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그 동안 비밀리에 논의돼오던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전세계 시민사회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던 다자간 투자협정의 복제판에 가까운 이 한미투자협정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최우선시하는 한편 노동·인권·환경 등 어떠한 기준의 부과도 금지하는 파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 ■ 머리아 또 자란다지만 .....

'113명의 영화인들이 6월 18일 광화문 거리에 나왔어 머리를 깎았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슈리>의 강제규 감독도, 6월 26일 <스타워즈> 군단에 맞서는 <이제수의 난> 박광수 감독도, 모두 서슴없이 삭발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해 12월에 1년 146일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스크린쿼터>를 위협하는 미국 시장에 맞서 삭발했던 홍일점 임순례 감독은 채 머리가 자라기도 전에 또 머리를 밀었다. 그는 말했다. "내 머리는 6개월이면 자라지만 한번 깎아 잘린 한국영화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배우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못한 <접속>의 전도연은 동료들이 눈을 감고 삭발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한미투자협상에 불모가 된 한국영화는 지금 울고 있다.' <한겨레 21, 265호, 세상보기>

영화인들이 삭발까지 해가며 스크린쿼터 폐지 반대운동을 했던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한미투자협정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에서는 6월 24일 성명서를 통

해 한국 영화의 자립기를 자임하고 나선 영화인들의 싸움에 힘찬 격려와 성원을 보내고,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투쟁은 단순히 영화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될 때 야기될 민중의 고통을 온몸으로 예감하고 받아 안은 우리 문화인들의 가슴 벅찬 독립선언이라 하였다.

### ■ 민중의 삶을 더욱 파탄으로 몰아갈 한미투자협정

<사회진보연대>에서도 한미투자협정은 기존의 투자협정이 투자 보호에 역

**한미투자협정은 ...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노동자·민중에게 미칠 파괴적 효과에 대한 어떠한 고려와 통제도 없다.**

점을 두었다면, 이 협정은 자본이동의 완전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규정할 바 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초안에 따르면 투자의 범위가 지난 외환위기 때 그 위력을 드러냈던 투기적인 포트폴리오(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 투자를 비롯해 모든 유형·무형의 투자를 포괄하고, 이미 투자된 사업의 보호뿐만 아니라 설립 전 투자에서부터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구속적인 의무로서 강제해 투자자유화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외국투자자에게 스크린쿼터, 국산입찰배 사용 의무, 내국인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 촉진, 재활용 촉진, 연구개발기금출연 의무, 기술·생산공정·지적재산권 등의 이전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투자기업에 대한 직·간접수용시의 보상의무 조항, 구

속적인 분쟁해결절차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필요한 경우 조약의 의무에 대한 일시적 면제조치를 인정하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담고 있지 않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한미투자협정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할 뿐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노동자, 민중에게 미칠 파괴적 효과에 대한 어떠한 고려와 통제도 없다. 또한 이행의무부과 금지, 직·간접수용시의 보상의무, 구속적 분쟁해결 절차 등에서 보이듯이 노동, 환경, 인권 등 사회적 공공성에 입각한 국가의 각종 정책적 통제수단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은 김대중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화로 표현되는 시장개방과 외자유치만이 한국경제의

살길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외환·경제 위기는 1990년대 자본주의의 국내외적 조건 아래서 한편으로는 과잉생산·과잉축적과 그에 따른 재벌·금융기관의 연쇄적인 부실화,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운동 자유화의 급진전과 국제수지 적자심화 등이 요인이 작용했던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문제인 재벌지배체제와 대외 지향적, 종속적 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탈조절과 세계화라는 구호 속에서 재벌지배체제를 강화하고 WTO의 각종 협상, OECD 가입 등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급진전시킴으로써 위기에 대처할 조절수단을 상실해갔던 데에 있었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시장개방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세계경제의 편입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됐다는 데 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3선에 이어짐>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55 호

1999년 7월 13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전.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문정현 신부 단식농성

### 해고자 복지·공안탄압 중지 요구

정의구현 사제단의 문정현 신부(익산 작은자매의집 원장)가 무기한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또 13일부터는 군산지역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도 단식농성에 참가한다.

문 신부는 군산 기아특수강 해고노동자 전원복지와 군산지역 노동조합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공안탄압(2편 기사 참조)에 항의해 지난 8일 오후부터 13일 현재 엿새째 군산 옛 시청 들머리에 천막을 짓고 무기한 단식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 엿새째 단식투쟁

이에 앞서 지난 8일 군산경찰서는 기아특수강 해고노동자 가운데 지난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온 김삼배(기아특수강 해북투 위원장)씨와 김정기(교섭위원)씨에게 경찰에 자진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0일 회사 정문에서 유인물을 돌리며 출근투쟁을 벌이던 해고노동자들이 이 회사 노동조합 간부를 때려 전치 20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들어 이들을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삼배씨 등 해고노동자들은 현재 서울 본사와 군산 공장으로 나뉘어 장기간 복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은 9일 <기아특수강 해고노동자 전원복지와 공안탄압 중단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비대위)를 결성했다.

### 비대위결성·동조단식 돌입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아특수강 해고자들의 복지투쟁이 280여일을 넘어 복지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상태에서 검찰이 이미 조사를 마친 사건을 들춰내 김 위원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는 관계기관이 여전히 돈과 권력의 시녀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또 "회사

측이 문정현 신부를 찾아와 중재를 부탁하면서 시간을 버는 동안 생활고와 은행빚에 시달려온 해고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해 다섯명이 복지투쟁을 중단했다"며 해고자 전원을 즉각 원직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문정현 신부는 "해고자 복지 숫자를 줄이려고 회사가 온갖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있고 여기에 경찰과 검찰이 야합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은 여전히 공작정치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비대위는 13일 오후 1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이어 2시에는 군산경찰서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는다.

## "내 몸이 상해도..."

### - 다섯째 단식농성 문정현 신부 인터뷰 -

(12일 현재 다섯째 천막에서 단식 철야농성 중인 문정현 신부의 말을 들어봤다)

#### - 왜 단식투쟁에 나섰는가?

경찰과 회사가 짜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해고자 복지 숫자를 줄이려고 온갖 비열한 짓을 다 저지르고 있다. 이 비열한 자들을 그냥 두어야 하겠나.

#### - 단식투쟁에 대한 반응은?

오늘 검찰청을 항의방문했고 사제단이 미군부대에 예고없이 들어갔다. 경찰들도 긴장하는 것 같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는 없다.

#### -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단식 다섯째다. 힘들다. 89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10년만에 한다. 그러나 내가 해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간다면 내 건강이 문제겠는가.

# [비대위가 밝힌 검·경의 '노동탄압공작' 사례]

[편집자주] <기아특수강 사회단체 비대위>가 12일 작성한 '전주지검 군산지청과 군산경찰서의 해고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 사례 요약'에 실는다. 이에 따르면 검·경은 노동자들의 행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구속 출석요구 위협 허위사실유포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 1. 기아특수강 해복투

- a. 검찰이 1차 수사 종결 뒤 수사하지 않다가 이미 오래된 2월 사건(1면 기사 참조)을 들춰내 교섭위원과 위원장을 구속함으로써 복직투쟁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 b. 지난해 10월말 해고자 출근투쟁 과정에서 관리인으로 부터 폭행당해 전치 8주 상해를 당한 해고자 김기덕씨가 낸 고소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서울 본사 혐의방문 과정에서 해고자들이 용역장 패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에 대하여, 오히려 해고자 11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 c. 지난해 해고자 20명이 연행돼 12명이 기소유예로 석방되고, 기소된 8명 가운데 6명이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다른 2명은 기소유예자 12명과 같은 혐의였으나 당시 노사교사위원이었다는 점만 달랐다. 이 두 명에 대한 재판이 현재까지 계속돼 해고자들에 대한 위협수단이 되고 있다.

## 2. 군산 개정병원 노동조합

군산경찰서 이춘성 형사가 "병원정상화를 구실로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충남 서천의 서해병원에서 혐의집회를 계속 하면 조합원들을 구속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전 노조 위원장을 협박. 전 위원장에 따르면 이 형사는 "노조 지도위원인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김홍중씨가 군산경찰서장으로부터 주변인물의 교통사고 사건을 무마받는 대가로 개정병원 노조원들의 군산미군기지 금요일집회 참가를 막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 또한 "민주노총이 병원 정상화를 막고 있다"며 노조와 민주노총간의 분열과 조합원 사이의 불신을 조장.

## 3. 전교조

지난 7월 1일 합법 노조로 출범한 전교조의 분회(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분회장 및 조합원에 대한 신상명세와 개인정보 등을 파악하는 등 사찰하여 노조 활동 위축을 기도함.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일상적 정보수집활동이라고 주장.

# 장애인 노점상 분신 숨져

### 단속중지·압수품 반환 등 요구

지난 7일 분신을 기도해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지적장애인 노점상 윤창용(44세)씨가 치료를 받던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지난 10일 오전 숨졌다. 윤씨는 대전역 지하도 입구에서 장식품 노점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오다 대전 동구청 단속반에게 단속을 당하자 단속 중지와 압수품 반환 등을 요구하며 솔벤트를 붓고 분신을 기도해 중태에 빠졌었다.

<장애인 노점상 고 윤창용 열사 분신사망 진상규명 및 민중생존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규복 외 3명)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윤창용 열사 분신사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장애인과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 청소년 인권캠프 】

연제 : 99년 7월 22일(목)~23일(금) 1박 2일  
어디서 : 김제 수류성당 교육관  
준비하는사람 : 전교조전북지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  
모집인원 : 중·고등학생 선착순 30명  
궁금한것은 : 0652-231-9331

## 【 행사와 등정 】

- ▶ 기아특수강 해고자 전원복직과 공안탄압 중단을 위한 전북비대위 기자회견·군산경찰서 항의집회  
■ 7. 13(화) 오후 2시 / 구시청농성장·군산경찰서 앞
-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독요 캠페인·공안탄압 규탄대회  
■ 7. 15(목) 오후 6시 / 전주코아백화점 앞
- ▶ 전주근로자선교상당소 실업구복기금 마련을 위한 초청의 날  
■ 7. 15(목) 오후 3시 / 전주 감림교회

##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김대통령 '자유메달' 수상 이후 말로는 사면 몸으로 탄압

## 현재 구속·재판·수배·조사중인 전북지역 '공안' 사건 관련자 : 17명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 방문 중 필라델피아협회로부터 '자유메달'을 받았다. 메달을 받은 김대통령은 수상 소감에서 "수배자와 양심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귀국 기자회견에서도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호언장담과는 달리 현재 구속돼 있거나 수배로 쫓기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전북지역에는 노동운동가 최호경씨와 한총련 관련 학생 김종대(교려대)씨, 장형욱(목포대)씨가 전주교도소에 구속수감돼 있다. 최호경씨는 지난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7년째 수감돼 있다. 최씨는 지난 2·25특사 때 준법서약서를 써냈으나 석방되지 않고 20년으로 감형만 받았다.

군산교도소에는 박학서(진국대), 정태홍(교려대), 김창혁(단국대), 나호영(부산대), 노윤조(영남대)씨 등 한총련 관련 학생 5명이 수감돼 있다.

이밖에도 강희남 목사와 문규현 신부가 김대중 정부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묶여 현재 재판중이다. 또 지난 97년 12월 군산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문정현 신부는 여전히 사건이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여권발급에 제한을 받고 있다.

김대중 정부 들어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금속산업연맹의 조성훈 위원장과 박종철 현대자동차서비스 전북지부장은 2월 파업 이후 석달이나 지난 5월 3일 갑자기 업무방해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사람은 지난 번 양 노총과 만난 김대통령이 구속·수배노동자에 대한 '선처'를 약속한 뒤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지만 법적으로 기소중지가 되지 않은 상태.

김대통령이 자유메달을 수상한 지 며칠 되지 않은 8일 군산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열한달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아특수강해복투 김상배 위원장과 김정기 교섭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역시 기아특수강해복투의 이남석 배영희씨가 열한달째 기소상태에서 힘겨운 복직투쟁을 벌여왔다.

이렇듯 김대중 대통령의 국외에서의 발언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야인사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교묘하고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앞에서는 '약속'하고 뒤돌아서서는 탄압으로 일관해 온 김대통령이 공안탄압을 중단하

고 이번 자유메달 수상소감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의문이다.

# 서울대 '인권문화제'

## 국정원 프락치 공작 규탄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공작을 규탄하는 인권문화제가 오는 23일 서울대 총학생회 주최로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지난 6월 22일 서울대 강성석(체육교육과 4년)씨는 양심선언을 통해 국가정보원 이양수씨의 집요한 프락치공작을 폭로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국가정보원은 되려 "강씨가 가능하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해 만난 것 뿐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강씨는 이씨가 협박했던 전화통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확보한 상태.

총학생회는 "이번 인권문화제는 반성문건뿐 아니라 뻔뻔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규탄하고 인권은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준비됐다"고 밝혔다.

# 전주교구사제단 SOFA 기정투쟁 나서

##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길거리 미사

미군기지 앞에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정의 미사가 열렸다. 지난 9일 오후 2시 군산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는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대표 김진화)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시민모임) 주최로 '한반도평화와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미사'가 열렸다. 80회 째를 맞은 금요일집회를 대신해 열린 이번 미사는 빗속에서도 시민모임 회원들과 가톨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기아특수강, 군산개정병원 노동자 등 150여명이 참가해 진지하게 진행됐다.

이날 미사에서 김봉술 신부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 △한국 내 미군기지의 임대기간 체결과 기지 임대료 지불 △미군범죄 근절 △한미 합동 환경조사단 구성과 철저하고 정기적인 환경조사 실시 △미군기지 주변의 공여지 해제를 미국 정부에 요구했으며 "한미행정협정이 전면 개정될 때까지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뜻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미군기지가 한국영토라는 상징으로 종이 태극기를 하나씩 가지 정문 철조망에 꽂았다.

기  
고

# 김대중씨가 자유메달을 받았다?

리 수 현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전북 연대회의 상임대표 · 익산 용안성당 신부)

김대중씨가 미국에서 인권상의 하나인 필라델피아 자유메달을 수상했다. 그는 야당 시절 인권유린을 그 누구보다도 참혹하게 당했다. 그가 인권을 위하여 싸우다가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야 양심세력들은 그의 생명과 인권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투쟁하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흘린 피땀이 더 많을 것이다. 당시에 김대중씨의 화두는 인권의 자유와 인권이었다. 그가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떠맡았다. 그런데 이른바 인권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선언한 그가 자유메달을 받은 것이다. 참으로 이 순간 우리에게 인권 대통령이 필요하다. 과연 김대중씨가 인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 '인권대통령'이 양심수 양산

미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김대중씨는 인권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철폐시키겠다고 스스로 말했다. 이것은 그가 국민에게 했던 명백한 약속이다. 굳게 다짐했던 그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드디어 대통령이 된 이후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보란듯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김대중정권이 집권 1년이 조금 지난 이 순간까지도 국민과의 찰떡 같은 철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일찌감치 국가보안법의 짜릿한 감칠맛에 도취되어 버린 모양이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김대중씨가 더 이상 인권지도

자가 아니며, 더구나 자유메달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 소신없는 '짬밥통' 정권

자칭 국민의 정부라고 선전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이 그전의 독재정권과 똑같이 국가보안법을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확대 적용하여 그 동안 인신구속 처리한 건수가 너무나도 많다. 김대중씨는 과거를 묻지 말라는 식으로 자신이 양심수였던 사실을 씻은듯이 잊어버리고 이제 후

이 정권이 원체 잡동사니라서 개혁은커녕 스스로를 반듯하게 지탱도 못하는 비틀거리는 정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안무치한 양심수 양산자가 되었다. 그런데도 세계 몇몇 나라는 아직도 그를 인권 지도자라고 추켜 세우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 사람들에게는 과연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 짜고 그처럼 주거나 받거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번 3·1절 특사 때는 현정부가 고도의 술책으로 내놓은 또 다른 사상 전향서에 지나지 않는 준법서약서를 쓰도록 양심수들에게 심리적 강요를 자행했다. 어떤 양심수들은 이를 분명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부의 제멋대로의 잣대로 인하여 석방되지 못했다. 이것은 또 무슨 해괴망측하고 천안공로할 사기극이었던가? 이로써 김대중 정권은 거짓말 잘 하는 정권, 믿지 못할 정권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중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이젠 끝장이라고는 말을 들을 수밖에.

김대중 정권이 비틀거리는 근본 원인

은 애당초 그 출발 때부터 엄존했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김대중씨가 정권 잡는 데 필요하면 이것 저것 따질 것 없이 다 끌어들이 스스로 짬밥통이 된 것이 그 원인 아닌가? 짬밥통 정권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으며 소신 있는 개혁이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온갖 세력이 다 뭉크러져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자니, 자연히 이놈 눈치도 살피고 저놈 눈치도 살피야 할 게 아닌가? 그러나 이 정권이 원체 잡동사니라서 개혁은커녕 스스로를 반듯하게 지탱도 못하는 비틀거리는 정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 민중 편에 서는 대통령 되라

김대중씨가 이번에 받은 자유메달은 그리 뜻깊은 것이 못된다. 왜하면 지금 김대중씨는 좌우 눈치를 살피며 오로지 자민련과의 공동정권 유지와 자신의 명예만을 위하여 정권을 쏜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가 어떻게든 현재가 잣대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이런 인사에게는 자유메달이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것이리라. 김대중씨가 과연 지금부터라도 수상한 자유메달의 가치를 살려서 인권 대통령, 통일의 길을 여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당장 김종필씨와 같은 보수 및 반통일 세력과의 합작에서 손을 떼어버리고, 본심으로 돌아가 강력한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한다. 이로써 얼마간 무리가 있고 비난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혜로운 민중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앞만 내다보면서 민주적 개혁에 앞장서는 용기있고 대담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지지해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그러한 정권과 대통령을 원한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56 호

1999년 7월 20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전.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원직복직" 연대투쟁

### 도내 연일 공안검찰 · 경찰 규탄대회

기아특수강 해고자 복직문제가 전 지역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열 달째 회사 앞에서 천막을 짓고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군산 기아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의 싸움에 연대하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와 군산 등지에서 연일 집회를 열어 회사와 공안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사회단체들 "끝까지 동참" 다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 17명은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기아특수강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문정현 신부의 단식투쟁에 연대해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통해 "연로한 문정현 신부가 목숨을 건 단식에 임하기까지 열 달 넘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에 무심했던 우리들이 부끄럽기만 하다"면서 "기아특수강 해고자 전원 복직과 최근 군산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안검찰의 노동자 탄압(지난호 참조)을 지지하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뒤 이들은 군산경찰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을 향의방문했다.

전주에서도 향의집회가 이어졌다. 전주실업자취업지원센터 등 전주 지역 8개 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은 지난 15일 오후 6시 코야백화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고흥서 교수(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공작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들기도 전에 또다시 군산지역에서도 공안검사에 의한 노동

자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기아특수강 해고자 전원 복직을 위해 전주 시민들과 함께 정부당국에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집회방해 '맞불놓기'  
한편 지난 16일 오후 4시 군산 기아특수강 앞에서는 노동자들을 분노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기아특수강 해고

자 전원복직과 공안탄압 중단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상임대표 문정현·비대위)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 현장에는 비대위의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회사가 준비한 또 다른 집회가 정문 안쪽에서 열리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 대열을 등지고 해고노동자들을 향했다. 사측은 집회장에서 디스코 음악을 크게 틀고 비대위 집회를 방해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영경석 본부장은 "지난 10년 동안 많은 싸움을 했지만 이렇게 비열한 작태를 벌이는 회사는 처음"이라며 "회사의 쪽두각사가 되어

## 서해병원 이상용 원장 폭력배 자임 노조측 협상대표자에 허리띠 휘둘러

병원장이 백주대낮에 노동조합 지도위원에게 허리띠를 휘두르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충남 서천 서해병원 이상용 원장은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개정병원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 대표단과 협상을 벌이다 결렬돼 사무소 문을 나섰다. 이 원장은 노조측 협상단에 참가한 뒤 건물을 나서 승용차에 올라타 민주노총 군산시 협의회 김홍중 지도위원에게 갑자기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휘둘렀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씨가 탄 승용차 문을 열고 허리띠를 휘둘러던 것이다. 김씨가 이를 피하려 차 밖으로 나왔는데도 이씨는 계속 김씨를 향해 허리띠를 휘둘렀다. 이를 지켜보던 노동부 직원과 협상 대표단, 인근 주민들이 이씨를 제지했고 김씨는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서에서 오히려 자신이 김씨에게 맞았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이씨를 폭행죄와 무고죄로 고소했다.

한편 군산개정병원 노동조합 김은혜 위원장은 "이 원장은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떼어간 국민연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유용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일삼아왔다"고 밝히고 "백주대낮에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는 변태적 행위까지 저지르는 사람에게 더 이상 병원을 맡길 수가 없다"며 이 원장 퇴진운동을 벌일 뜻을 내비쳤다.